

열린 충남

THE CHUNGNAM REVIEW

10

통권 44호 2008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발전전략

분권화시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분석과 과제 | 충청남도 문화산업 육성 방안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구상

신재생에너지 국제동향과 국내산업육성 방안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사업 현황과 전망

열린충남은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지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연구 수행으로
충남의 미래를 여는 일류 Think Tank로 발돋움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통권44호)

발행인 김용웅

편집위원장 송두범

편집위원 · 원내: 강영주, 권영현, 고승희, 오용준, 신동호, 유학렬, 이인희, 오혜정

· 원외: 황창연(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오석민(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 및 편집간사 정봉희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연락처 041-840-1123 팩스 042-840-1129

홈페이지 <http://www.cdi.re.kr>

디자인·인쇄 중부인쇄기획(042-253-7537)

여권
총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4호 2008. 10

Contents



113

권두언

006 미래의 차세대 감성 엔진, 문화산업이 이끈다. 이덕상

특집 I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발전전략

008 분권화시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류정아

016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분석과 과제 정병웅

024 충청남도 문화산업 육성 방안 안성혜



116

특집 II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구상

038 신재생에너지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육성 방안 부경진

050 충남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성호

058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사업 현황과 전망 박호성

충남논단

064 문화마케팅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 이충훈

071 도시재생을 위한 충청남도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분석 박철희

100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자족성 및 주변지역과 연계방안 임형빈



142

해외탐방

110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만들기, 오부세정 유학렬

115 충청남도 남북교류의 방향 : 개성공단을 다녀와서 성태규



148

충남의 도시

134 서해포구의 정취와 토굴 새우젓이 있는 발효식품의 본고장, 광천 박철희

충남축제탐방

148 마당 열이라 하늘선물 '금산인삼' 나가신다 이용원

152 허수아비에게 새 생명을! '창조의 기쁨' 맘껏 즐겨 이용원



153

오피니언

156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류철희

159 모두가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용웅

162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이운형

165 지성과 정신사의 미래자원 유교문화 이해준

168 지방연구원의 도약을 말한다 박헌주

174 실용적 지방분권 추진 방안 마련해야 김용웅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해야

대전·충청권 공조 네트워크 강화해야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지역발전 과제



187

충남소식

182 도정소식

195 연구원소식

205 RIS소식

207 수질관리센터

208 도시재생센터



197





미래의 차세대 감성 엔진, 문화산업이 이끈다.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장 | 이덕상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핵심 산업으로 많은 석학들이 주저하지 않고 문화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도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의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초법 제정 등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병행해 왔고, 실용정부에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1조 5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 도도 민선 4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중심의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정 주요시책으로 설정하고 문화산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 도는 백제역사,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문화산업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백제는 동북아를 선도하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국가로 그 자체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창작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충효문화, 유교문화 전통과 결합된 고유한 지역문화유산은 한류의 확산과 지속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는 뛰어난 문화콘텐츠 소재가 된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 충남의 우수한 문화적 유산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흙속의 진주에 불과할 뿐이다. 글로벌 감성이 녹아든 문화적 아이콘으로 현대적 첨단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세계인이 공유해 산업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충남의 문화원석은 전문가의 손을 통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로 창의적으로 재창조되어 세계인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작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형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글로벌 시대정신이 반영된 문화콘텐츠로 제작되고 다양한 미디어에 맞게 패키지로 소비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연속성, 다양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전통산업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재탄생되며 그동안 육성해온 전략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문화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문화산업 강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의 비교를 떠나 국내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문화산업의 시대적 트렌드를 따르며 관광산업, 전통산업, 제조업과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디자인 분야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과 TV, 인터넷, IPTV, 모바일 등 미디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중심에는 문화디자인이 있다. 더욱이 문화디자인은 충남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형상화시키는 핵심 분야이고, 관광디자인, 상품디자인, 공공디자인 분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총체적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는 25개 대학 154개 관련 학과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해내고 있다. 이들 인력과 현대에도 손색이 없는 백제인의 디자인을 결합시킨다면 비록 출발이 다소 늦었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둘째,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 연구기관들이 활발한 교류와 연관활동을 가짐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로부터의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문화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창의적 활력이 넘치는 기업,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공간, 기업밀착형 창작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집적 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대규모 초기투자가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국내시장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규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문화산업체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과 해외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백제역사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을 아우르는 정서적 일체감을 활용하고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지자체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충남 문화의 홍보와 연계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넷째, 문화산업의 발전이 단지 고유 문화콘텐츠의 제작, 생산, 유통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산업이 지닌 OSMU(One Source Multi-Use)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도 16개 시·군의 특성화된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강한 충남 브랜드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시·군은 문화콘텐츠 개발, 전시·판매, 관광, 축제, 문화상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 중 시·군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충남도는 종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군의 통합과 조율,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를 통하여 충남도를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산업화시대에 버려졌던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이제 우리 도는 본격적 문화산업육성에 돌입했다. 고대 중국의 형산에서 발견한 박옥(璞玉)이 다듬어져 모든 제후들이 탐내는 화씨지벽(和氏之璧)이 되고, 진시황에 의해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玉璽)로 만들어졌듯이, 우리 도의 우수한 문화적 자산이 산업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정책의 추진과 산·학·연·관의 총체적 역량의 집중이 절실한 때이다.

분권화시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기획팀장

분권화시대 지역문화정책의 의미와 가치

정치적 지역분권화가 시도된 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점인 문화분권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성되어가고 있는 지에 대한 보다 냉정한 검토의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수백 년 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중화의 흐름과 뿌리를 하루 아침에 뒤바꾸거나 뽑아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중앙집중화로 얻어내고자 했던 ‘효율성’이 지나친 집적으로 인한 ‘ 획일화’로 표현되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창의적인 표현과 충족에 방해가 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거대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 불가능하며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진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단지 국가적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직접 만나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가면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문화교류의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차이점이 세계화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장점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의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세계화의 실천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 특성이 국가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무대와 직접 연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 또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재인식해야 하는 필요

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의 정도가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역분권화란 단지 중앙집중화된 권력의 지방 분산화라는 국내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정도, 특히 문화적 차원의 지방분권화의 정도와 수준에 대한 분명한 분석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소산, 또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및 일체감과 주민통합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의식 및 창의성과 자주성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활력소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는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가꾸어진 기층문화이며, 공간적 개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을 지닌 문화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성, 창의성, 책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책임의 자주적인 활동의 소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민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서 자체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정립은 물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문화정책의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성과보다는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개별사업들만이 남발되고 가시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10년 넘도록 노력해 온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힘들고,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기도 어렵다.

문화기반시설 활용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부족을 얘기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인력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체계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고 이에 관련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가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이 단번에 투입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분권화라는 말은 여전히 공염불에 불과할 정도로 문화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되거나 때로는 건설 사업에 밀려 완전히 무시되기 일췌이다.

지역문화정책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이고,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각 지역의 문화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은 지방만의 문화정책이라는 단순한 관점으로 보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단지 중앙과 지방의 차이나 차별만이 아니라 지역 간 차이와 차별성, 지역 간 경쟁 및 지역과 세계와의 만남, 문화적 다양성, 문화경쟁력, 지역매력도 등의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면서 시대적인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문화정책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치중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70년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에 집중하여 문화예술 기반조성, 전통문화 보존관리, 예술진흥, 대중문화 등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는 정권의 홍보기능을 맡거나 지배이데올로기 확산의 도구로도 자주 사용되었고, 자유로운 표현은 억압당했다.

80년대는 문화발전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를 명기하였고,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문화예술부문을 포함시키게 된다.

90년대는 문화부가 발족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변화시키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문화부 계획에 지방문화활성화 정책이 분명히 명시되기 시작한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등화에 역점을 두게 되고, 국민의 정부 때는 문화예산 1%를 달성하면서 문화정책의 전환기를 보낸다. 2000년대에는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지역과 문화가 보다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고, 만남의 양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특히 도시와 문화가 결합되어 도시개발이 문화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면서 지역개발에서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게 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중심도시가 지정되고, 생활환경 개선에서 문화 역할의 강조되고,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공생의 개념이 지역의 문화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다.

지역문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집권적 시대의 문화정책과 지방분권화 시대의 문화정책은 그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 그리고 추진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정부의 문화정책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을 바라다본 입장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방주민들의 고유한 요구사항이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의미가 종래의 고급예술 혹은 정신적 교양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벗어나, 대중문화나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문화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계되면서 사회발전의 주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문화는 특정한 장르의 문화를 가리키는 협의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일상적인 삶의 전반을 아우르고 평가하는 중요한 삶의 질의 척도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각 지역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1세기는 지식경제의 시대에서 보편적 문화복지는 정책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은 일반 경제사회적인 요소들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즉각적인 가시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반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문화적 복지체계가 완성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본 글에서는 인력과 시설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지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지방의 전문적 문화 인력의 부족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것의 기본은 일하는 '사람' 이고 창조하는 '사람' 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향유하는 모든 이들이 각자 제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문화적 영역은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력의 양성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는 문화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주로 하드웨어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주요 문화예술회관이 자체 기획프로그램은 연 10회를 넘지 못하고, 연간 가

동률은 44.1%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극장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더 떨어진다. 물론 운영예산의 부족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을 활용한 인력 및 활동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설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방 문화시설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순환보직의 형태로 업무를 배정받기 때문에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은 이들을 흡수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시설의 지역적 편차와 효율적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수도권에 공공도서관 25.1%, 박물관 40.6%, 미술관 63.5% 등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역시 공공문화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수요자중심의 문화공간 운영전략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도·농간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문화공간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2005년 공공도서관은 총 499개소로 108,000명당 1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총 457개소로 94,000명당 1개관을 보유하고 있어 OECD 가입 선진국의 평균보유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보유·이용 및 주민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격차는 더욱 심한 편이다. 박물관의 경우 광역시·도 중 울산광역시에는 단 한 개의 박물관이 있을 뿐이며, 전국적으로 한 개소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 공공미술관이 없는 시·도는 4곳이나 된다. 또한 산업의 수도권 집중률을 보면 제조업(42.4%)이나 서비스업(56.6%)에 비하여 문화산업부문의 수도권 집중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행사의 서울 및 대도시 집중과 지역의 전통적 특성의 약화는 더욱 심하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미술전시회의 80.8%, 양악공연의 73.8%, 국악공연의 61.9%가 집중되어 있고, 문화행사관람률 역시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민이 압도적으로 높다.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문화시설 건립이 각 지역주민의 문화적 환경이나 고유한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않아 외지인들을 위한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되거나 전시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지역주민의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지역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화발전보다 치적 위주의 메가 이벤트가 남발되어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된 고유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과 향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문화시설을 만들기 이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큼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장르 면에서도 공연과 미술에 관한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문학·영상·전통문화·문화예술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문적 예술시설이라기보다는 행사용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운영 면에서도 자치구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적 기획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예술단이 입주하거나 주민중심의 예술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예술중심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떻게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것인가?

지역문화정책은 자율·분권·참여의 기조 아래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문화복진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사회 취약계층대상 문화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생활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함께 항목별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첫째, 지역문화정책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문화 환경과 관련된 조례는 단순히 문화예술 소관부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여성복지·도시계획·세무 관련부서의 조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화 환경과 관련한 통합적인 조례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진흥원 및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또는 목적이 유사하여 변별력이 없고 지역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명확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기능과 실제 역할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한데, 문화 인프라 관련 계획을 보면 정작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인프라시설 건립의 경우 면적·인구·개수·예산액으로 시설투자기준이 결정될 뿐, 사용방안과 결부되어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 정책방향의 제안에서는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고려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계속되었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지역주민들을 실제 이용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문화시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지역사회의 시설과 공간을 조사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행사·공급자 등에 대한 자료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나 참여도를 분석한 뒤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방법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개선방향 또는 정책건의를 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관련 정책연구와 문화관련 지표조사의 기능을 부여하여 문화예술 관련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역사·문화·자연환경·사회복지 등 확장된 문화의 영역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는 인적 자원의 데이터화를 기초로 하고, 분야별·장르별·관심별 네트워크로 집적하여 바람직한 사업과 행사 네트워크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단체는 광역의 경우, 예총·민예총·문화원을 비롯하여 문화의 집, 각 대학 문화센터, 각종 평생교육원 등의 제도적인 단체,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예술가조직과 문화조직 등이 있다. 지역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은 조직 간의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과 행사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는 인적 자원의 데이터화를 기초로 하고, 분야별·장르별·관심별 중형의 네트워크로 집적해야 한다. 사업과 행사 네트워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프로그램 공유는 네트워크의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써, 한 조직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설정하여 상황과 조직에 맞추어 변형시킬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단체의 네트워크는 단일성이나 동질성을 가진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유연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역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의 향수자로서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의 지역문화정책 참여의 제도적 보장, 문화예술관련 시민단체·지역문화예술인 지원책, 지역대학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열린 문화를 추구하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문화의 주체인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지역문화 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일찍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은 문화예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지역의 독창적이고 창의성있는 문화전문가 제공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이 하드웨어 구축, 즉 문화시설 건립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휴먼웨어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나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문화 서비스를 개발하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문화지표를 만들어 지역맞춤형 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자·시설·문화수요자를 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창작의 결과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기존의 지원방식은 직접 지원형태와 창작발표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원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창작 작품의 발표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의 기반과 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부분은 일정하게 그 분야에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거나 오래 활동을 했던 문화예술 인력이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의 안정성은 확보될지는 모르나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예술단체와 개인, 취미활동의 동호인 그룹, 전문예술활동지향적인 동호인 그룹, 법인단체, 미등록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체성격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편의주의가 한 몫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의 영역은 확장되는데, 전문적인 문화예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양적인 증가와 실질적 활동과의 괴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인적자원현황과 단체 활동 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의 내용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단체의 활동성격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지원과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준수된다면 지원에만 의존하는 무력한 문화예술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분석과 과제¹⁾

정병웅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문화와 문화정책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는 문화²⁾는 그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지만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갖는 가치도 크다. 그것은 문화가 본래 지역의 역사와 전통,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교류와 창조를 반복하며 삶의 풍요를 증가시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는 삶의 질의 척도이자 사회통합의 연결고리이다. 나아가 최근의 문화는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창조 활동에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주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문화의 학습, 창조, 전달, 향수, 축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조건과 기반을 정비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초 하에 최근에는 ‘문화적 힘’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지방을 경영하려는 ‘문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의 보존이나 전승과 같은 전통적 문화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특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등 ‘지역문화의 힘’을 통해 지역을 활기있게 하려는 지역 활성화 전략, 또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영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참여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역문화”(2007)에서 발췌·수정한 내용임

2) 문화인류학자 Tylor에 의하면 문화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구,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 따위를 포함하는 복합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 글에서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적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 보다 문화 예술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향수 욕구와 지역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진단과 방향 전개를 모색하는 것은 더없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충남의 문화행정과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미시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지원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정책과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충남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충남 문화행정 및 정책의 현황

먼저 충남의 문화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충청남도의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의식, 지역문화자원 육성, 문화산업단지 조성, 정보화마케팅 추진, 문화인력 단체육성, 문화행정 재정지원 등 6개 분야로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역민 개개인의 문화를 자극하거나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문화의식 부문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거의가 문화관광정책으로 결국은 문화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충남 문화정책 추진방향

구 분		정 책 추 진 방 향
문화의식	문화관광의식에 대한 접근인식의 변화 요구	·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문화산업 인식 홍보 · 지역주민과 사업체, 문화관련 종사자들의 문화 교육 실시 · 정책추진 공무원의 여가·문화·관광의 연계된 문화산업 인식
지역문화 자원육성	특화된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육성으로 명소화	· 도시·역사·해양문화 특성별 광역문화권 개발계획 추진 · 생태·역사문화·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그린투어리즘 육성 · 인삼·머드·모시·젓갈축제를 세계화 축제로 발전
문화산업 단지조성	문화산업단지의 차별화 조성과 문화도시 지정	· 천안의 영상미디어, 영상애니메이션산업 개발 · 보령 시네마월드 영화산업 육성 · 공주·부여의 문화산업단지의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보화/마케팅추진	충남 문화의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마케팅	· 백제·내포문화권의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육성 · 게임·영상·관광정보의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상품화 추진 · 정보화·국가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제마케팅 실시

구 분		정책 추진 방향
문화인력단 체육성	지역대학과 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 전 문인력 양성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관광인력 활용 · 문화·숲·생태해설사 등의 양성 및 안내제도 확대 실시 · NGO 중심의 문화·관광·환경 연계 자원봉사자 참여 사업
문화행정 재정지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사업의 시범 선정 추진 · 인접 시도·시군 간 문화관광 협력정책 및 사업의 추진 · 문화와 연관된 균특 회계의 통합 사업 추진

실제 충남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충청남도 문화관련기구인 문화관광국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등 3과 10담당 1단 1팀으로 구성되어 65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1단 1팀은 특히 백제문화제에 대한 지원행정 부서이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여느 지자체와 비슷한 형태로서 주로 관광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 분야라 하더라도 문화산업분야에 치우쳐 기구 내에서의 문화 분야 지표의 위상을 읽을 수 있겠다. 문화관광국의 65명의 담당 공무원으로 3급 1명, 4급 4명, 5급 11명, 6급 22명, 7급 1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 중 문화예술 분야가 정원 23명에 32명의 현원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백제문화지원 인력으로 증가된 인원이고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한 순수한 문화지원 인력의 비중은 열악하다고 봐야 하겠다.



〈그림 1〉 EU의 재생에너지공급목표

문화관광국의 역할(Mission)

-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
 - ☞ 세계화·문화산업화 역량 강화,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 ☞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증대
-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 스포츠마케팅 강화, 각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제

- 과제 1 백제문화권의 종합발전전략 추진
- 과제 2 도민만족의 품격높은 문화·예술활동 전개
- 과제 3 서해안을 국제적 휴양·레저지역으로 육성
- 과제 4 역사문화 중심도시의 명품충남 프로젝트 추진
- 과제 5 특성화된 문화관광자원 개발
- 과제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 과제 7 건강증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
- 과제 8 체육강도 위상 제고를 위한 전국체전 상위 입상

자료 :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내부보고서

〈그림 2〉 문화관광국의 역할과 8대 과제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의 슬로건이 “가장 오고 싶고, 투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충남”이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8개의 과제와 문화관광국의 역할을 크게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과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지표와는 상관없이 투자 유치와 관광개발 등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의 업무 분야를 살펴보면 분명하다. 순수 예술분야의 업무분야는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주로 문화산업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문화재 분야가 큰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백제문화 복원 등 전통문화가 지역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중요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업무

	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재분야
업 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 업무의 종합기획 · 예술단체의 지원 육성 · 공립예술단 지원 육성 · 민속예술 발굴 보존지원 등 관련사항 ·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관리 · 영화진흥 및 공연사무와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지방예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문화산업육성 종합 계획수립 시행 · 문화산업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 문화산업 관련 해외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출판사,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 문화산업기반조성 · 게임·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사업 진흥 및 지도 · 기타 문화산업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 발굴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전통사찰 및 향교 서원 충효열시설보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자연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 발굴지정 보호육성 ·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에 관한 사항 ·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재기술 및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크게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개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것과 예술단체 지원 사업 및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전시 개최는 미술, 국악, 연극,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회 개최를 주관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전시 분야에서는 미술, 서예, 사진, 서각 등의 영역에서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데뷔를 하거나 자신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를 매회 개최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주로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등에서 주관하고 도에서는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주국제미술제, 자연미술비엔날레와 같이 시지역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연 분야에서는 연극제, 풍물대회, 국악제, 무용제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 경연 대회나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행사 중 풍물과 관련한 행사가 주부풍물경연대회, 일반풍물경연대회, 학생풍물경연대회로 총 3건

이나 된다. 또한 민족대제전이나 사물놀이경연대회 등 민속 분야 행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예술단체 지원사업

(2007년 기준)

구 분	사 업 건 수	집 행 예 산 (백 만 원)
충남 문예진흥기금 사업	8개분야 287단체	710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43개 공연작품	446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37작품	320
충남사랑티켓사업	-	151
민속시범학교지원	16개학교	64
충남문화예술인회	-	-

자료 : 『2006 도정백서』를 참조하여 필자 재작성

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표 3〉과 같이 총 6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이 1986년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까지 3,976백만원이 조성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통예술 등 8개 분야 287개 단체에 6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총 710백만원(중앙기금 280, 도비 280, 도기금 150)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예술단체의 제작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과 충남사랑티켓사업 등이 있다.

〈표 4〉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7년 기준)

사 업	예 산 (백만원)
충남연정국악원 운영	421
국악강사풀제 운영	472(국비 236, 도비 236)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360(국비 180, 도비 90, 시군비 90)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80(기금 140, 도비 70, 시군비 70)

〈표 4〉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는 충남연정국악원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악강사풀제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과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연정국악원의 경우 공주시에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충청도에서는 국악강습, 지역 순회강습, 청소년 어울마당 등 문화예술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악원 운영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국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충청도 자체 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다. 여기서 충청도는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기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대상이 탈학교 청소년, 미취학 아동, 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 문화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충청남도 문화정책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순수 예술이나 문화에의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별 문화공간의 생활문화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정책이 대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민 및 생활 중심의 문화인식과 개발 마인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책부서에 문화 마인드를 가진 문화전문가를 적극 채용하여 문화단체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가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도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도 자신의 역량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현재 충청도에서는 연극, 무용, 합창,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연대회를 매회 개최하고 신진 발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회씩 개최되는 경연의 방식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신진 문화예술인에게 작품 제작이나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적 힘은 전문 문화예술인의 규모나 수준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추어 수준부터 준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소모임)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충남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정보에 대하여 다양하고 일목요연하게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는 충남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요구와 지역 문화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과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인간다운 삶의 방식 내지는 그 추구이다.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날 문화 향수와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는 여전히 변방의 문화로서 여전히 열악하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지역문화 고유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담보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구현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된 몇 가지의 제안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 현승일, 사회학, 박영사, 1996.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한국의 지역문화, 대왕사, 2007.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4.

충청남도 문화산업 육성 방안

안성혜 |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들어가는 말

문화산업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집약산업으로서 거대한 자본이나 생산설비 없이도 다양한 창구효과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성장산업이다. 또한 개인의 창조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여타 산업에 비해 창업 등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다. 게다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지역개발에 있어서 축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 특산품 등의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화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원으로 문화콘텐츠를 지목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와 문화산업 진흥·지원 단체는 지역의 문화유산 혹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생산·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지역축제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창작·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이를 통해 최종적 목표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수단과 기법들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실천수단으로서 충남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충남 문화산업의 인프라 및 현황

충남 지역의 문화관련 산업체 현황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16개 시·도 대비 충남지역의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은 0.5%로 648명이며, 지역 매출액 비율은 0.5%로 1,021억 4,900만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¹⁾ 수는 전국대비 최하위권이라 하겠다. 충남의 문화산업은 천안지역에 영화, 게임, 출판물 중심으로, 당진에는 방송, 캐릭터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대전과 가까운 논산에는 방송, 출판, 영화기업이 분포되어 있다. 충남지역 문화관련 사업체는 총 128개로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에듀테인먼트, 영화·영상, 출판, 디자인, 광고, 기반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진다.²⁾

〈표 1〉 충남의 CT 사업체 현황

구 분	조사기업 수	비율(%)
애니메이션	5	3.9
방송	12	9.4
음악	0	0.0
게임	4	3.1
에듀테인먼트	5	3.9
영화·영상	12	9.4
출판	23	18.0
광고	0	0.0
기반기술	24	18.8
간접관련분야(디자인)	43	33.6
합 계	128	100

그러나 문화콘텐츠 창작 및 제작에 해당하는 1차 산업의 종사자와 매출 규모는 매우 낮으며, 이에 비해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2차 산업 분야의 시각 및 제품디자인 관련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체 분포현황을 보면 천안시에 74개의 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전체의 57.8%를 차지하며, 콘텐츠를 창작·개발하는 중소벤처는 취약한 실정으로 간접적 관련분야인 디자인과 기반기술 분야를 제

1) 즉, 문화산업업지계

2)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 CT산업 기반조사

외한 나머지 업체는 61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충남지역의 문화관련 산업체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명확한 업체현황과 최근의 통계자료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대비 높은 종합대학 집적률을 보이고 있는 강점으로 인해 18개 종합대학과 7개 전문대학에서 154개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한 해 동안 7,529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창작 및 제작 기반의 대학 인력의 구성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방송·영상, 디지털음악, 문화기획, 예술, 패션, 공연문화, 다중매체 미술, 디자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대학 졸업생의 지역취업 한계로 인해 문화산업 관련 정주인력의 수는 매우 낮다. 또한 충남지역 내 대학원의 콘텐츠관련학과 및 전공은 32개로, 역시 충남지역 대학의 졸업생이 지역 대학원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수준 높은 콘텐츠 창작 및 기술개발의 연구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남지역의 문화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총 70개이며, 대학부설 연구기관이 50개에 해당되나, 문화콘텐츠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는 17개소로, 영화·영상 관련 연구소가 4개, 애니메이션, 게임(에듀테인먼트 포함), 콘텐츠기획·경영 분야 연구소가 11개, 그 외 방송과 음악 관련 연구소가 2개로 나타나고 있다.³⁾

충남 자치단체의 문화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 지원, 문화산업(축제) 총괄, 문화재 관련, 관광산업 지원 등이며, 충남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는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총 30개 기관이 있다. 충남의 CT 지원기관은 천안시에 12개로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고, 문화시설 역시 천안시가 15개로 가장 높다.⁴⁾ 충남의 문화산업 관련 진흥정책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첨단문화'를 지정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미디어센터 등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체제(RIS)운영, 창업보육지원, 연구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력양성, 장비구축 활용, 기술이전, 교류협력, 기업지원 등이고, 충남영상미디어센터는 디지털영상, 3D영상 분야를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사업화(창업) 지원, 공동기술개발, 선도 기업유치, 특화분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영상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은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비전제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IT/CT 관련 공용장비구축, 기술

3)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CT산업 기반조사』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재구성

4)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2007), 충남문화산업발전전략

지원, 기업지원, 영상이벤트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충남도청에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고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이라는 역점시책과 함께 창조적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남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충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종합대학의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높은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콘텐츠 장르의 인력 양성을 통해 다양하고 융합적인 콘텐츠 기획 및 창작 연구와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인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연계시스템이 미비하며,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체도 열악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영세한 충남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문화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산업체를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창작 및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정주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 전문 인력들이 충남지역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콘텐츠 창작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대학의 문화콘텐츠 창작 전문 인력을 충남의 산업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들과 지역 내 산업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산업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산업체와 충남지역의 대학, 지역축제를 연계한 『충남 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07년 11월,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인 첨단문화산업의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남첨단문화산업협력단이 구성되었으며, 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간의 문화교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1회 『충남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디지털로 하나되는 크리에이티브 충남’이라는 주제 아래 16개 대학 30개 학과의 졸업 작품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첨단문화산업 관련 기술과 콘텐츠 리소스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스타콘텐츠를 창출하고자 산학연관이 함께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는 현재 대학(학과)의 졸업 작품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0편 이상의 디지털 콘텐츠가 창작,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대학 교수, 연구소, 혁신기관 등을 중심으로 300여명의 전문가그룹에서 기반기술, 콘텐츠저작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은 이러한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페스티벌)의 장’을 마련한 것이며, 우수콘텐츠 ‘리소스 DB구축’ 및 ‘창업촉진 프로그램’, ‘사업화 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지역의 예비 전문 인력의 디지털콘텐츠 창작 동기 부여와 현장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지역 내 대학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연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R&D 센터와 연구개발된 결과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상품화지원센터, 산학협력·창업보육센터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급 문화콘텐츠 창작인력의 연구개발 성과물과 산업체가 연계되어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의 문화콘텐츠 개발 장려정책을 통해 스타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역기반 문화산업 진흥의 사례

경기디지털진흥원은 만화·애니메이션을 주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게임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8월 경기도의 문화산업육성 실행계획에 따라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으로 현재 약 20여 개의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4곳이 모바일 게임관련 업체이다. ‘원터플데이즈’, ‘오세암’, ‘요랑아 요랑아’, ‘홍길동’, ‘빼꼼’ 등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을 다수 발굴했으며, 그중 입주회사인 마고21의 ‘오세암’은 2004년 앙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인디펜던스』의 ‘트리로보’는 일본 아이치엑스포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150만 관객 동원하기도 하였다.

매년 경기문화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사업에 3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북부지역 10곳을 우수문화자원 발굴·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였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내에 제작센터를 운영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고, 동시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 게임 등 부천의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부천을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콘텐츠 관련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디지털콘텐츠 관련학과 지원정책(계원조형예술대, 서울예술대, 부천대, 유한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양대 등)을 펼치고 있다.

경기디지털진흥원은 CT와 IT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5개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애니메이션, 게임 등 창의성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조기 발굴 및 우수 전문 인력 양성, 경기도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자본 조달 능력의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미래지향형인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진행하여 동북아 협력을 통한 유통의 글로벌화를 이루어 나간다. 넷째, 영상, 게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클러스터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다섯째, 문화·관광·레저 연계형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전략으로 창의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표 2〉 경기디지털진흥원의 추진과제

과 제	내 용
창의성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조기 발굴 및 지원, 우수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저 리드형 입주업체 유치 ·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전문 인력 양성 · 경기도 문화자원 기반 콘텐츠 발굴 및 개발 · 디지털문화콘텐츠기술 R&D 거점 구축
투자 및 지원 환경 개선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 국제 자금 조달능력 강화
동북아 디지털문화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문화콘텐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상해, 오사카에 해외진출 거점 구축으로 수출 기회 조성 및 확장) · 아시아디지털콘텐츠 마켓플레이스 개최 · 해외 수출 정보 및 네트워크 지원

과 제	내 용
성장잠재력이 높은 클러스터 집중 육성	·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지표 개발 및 평가 · 경기디지털문화콘텐츠 벨트 네트워크 구축 (부천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성공사례심화 작업) - 경기도의 매력도 증진을 통한 우수업체 클러스터 내 편입 유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문화·관광·레저 연계형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전략 · 시·도민을 위한 디지털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 애니메이션 무료상영회로 주민과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접점 확대 - 공공시설을 이용한 테마전시회 개최
첨단장비 구축	· 렌더팜, 특수장비 편집실, 홍보세미나실 등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핵심인재 양성	· 경기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디지털콘텐츠 전문가 양성)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도부터 3년간 3,00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오는 2023년까지 5조 3000억여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되는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문화발전소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통한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도심경제 활성화를 이를 생각으로 2012년 5월 18일 개관 예정이다.

〈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 제	내 용	
민주평화 교류원	민주·인권·평화기념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징적 기념공간으로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실, 자료실, 국제회의실 등을 구성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국내외 방문객 서비스 센터, 사이버전당 운영 등 아시아문화교류 사업 총괄
	경영전략지원센터	전당에서 생산되는 콘텐츠 수익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경영전략 지원
아시아 문화 (정보)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의 지역별·주제별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원천자료 제공
	아시아문화지원센터	아시아문화지원의 수집·분류·보존 및 이용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아시아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문화교육

과 제		내 용
문화 창조원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을 위한 시설지원
	문화콘텐츠제작센터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복합전시관	아시아의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상설전·기획전 개최 및 유비쿼터스 체험관 운영
아시아 예술극장	대극장	아시아 공연예술의 제작·실연·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설제작시장 개념의 공간 분할형 복합예술극장
	중극장	기존 장르 공연을 수용,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 고정형 극장
어린이 지식 문화원	교육문화콘텐츠개발센터	에듀컬처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들이 전시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근본원리를 이해해가는 교과서 속의 박물관
기타		공용지원 및 부대시설, 공용면적, 주차시설, 기계실 등
총면적		142,718㎡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주로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제반 기능과 아시아 및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7대 문화권을 조성하여, 거점별 확산전략의 핵심기반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의 내용은 광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지역 문화자산의 개발 및 물적 인프라 구축, 문화벨트 구축 및 중·소 거점 연계, 생태문화축 조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문화도시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문화거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표 4〉 아시아중심도시 권역별 조성방안

문 화 권	문 화 거점(프로그램)
문화전당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예술인공방거리 · 도심캠퍼스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아시아문화교류권 (사직공원, 양림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인권활동가 체류활동 지원센터 · 공방거리(향토예술체험) · 아시아음악타운 · 아시아문화원거리 · 사직공원 문화환경 정비
아시아신과학권 (광산구 비아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지식연구소 · 아시아의학연구소
아시아전승문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전승놀이테마파크 · 아시아전승문화공연장 · 아시아전승문화아카데미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문화공원, 아시아자연문화연구센터 · 친환경 생태·예술시범단지 · 영산강 하천 습지생태원 · 의재로 문화의 거리 조성
교육문화권 (마북동 공군탄약고 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시범단지 · 에듀파크, 교육문화주거단지 · 에듀컬처 시범학교
시각미디어문화권 (북구 중외공원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인터랙티브미디어파크 · 아시아색채문화센터 ·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임방울 판소리’ 등 전통예술부터 광주비엔날레 등 현대 예술까지 광주지역의 기초예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자원을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 기초예술 및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복합레저도시를 연계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광주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분야 중 성장 가능성과 시장규모 등의 측면에서

광주가 비교우위에 있는 콘텐츠 6개의 분야(첨단영상, 게임, 음악, 공예, 디자인, 에듀테인먼트)를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즉, 에듀컬처(Educulture) 콘텐츠사업과 음악콘텐츠 사업을 통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아시아 및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7대 문화권을 조성하여 '문화국가'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 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제안

충남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첫 단계로 집중 육성할 문화콘텐츠의 특화분야를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게임, 에듀테인먼트의 4가지로 좁혀서 선정하고, 1차 산업인 문화콘텐츠 창작과 연구 개발 인프라 및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을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정주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연구기반의 『문화콘텐츠 R&D센터』를 설립하여 충남 지역기반의 콘텐츠 창작을 위한 문화원형 및 원천소재를 발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OSMU가 가능하도록 문화콘텐츠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기술을 연구·개발하며,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의 매체별로 콘텐츠가 다양하게 창작 및 개발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문화콘텐츠 R&D센터』는 현재 충남에 산발되어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인프라를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유치하는 동시에 산·학·연·관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충남지역 내 18개 대학 문화콘텐츠 관련학과의 졸업 작품 및 창작품을 시연하는 장이 되게 함과 동시에 상품화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의 장으로, 또 충남지역 기업체에 고급인력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마켓을 형성하도록 독려한다. 관련 기업체와 문화콘텐츠의 창작 및 개발, 상품화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이 집적된 천안을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되, 주변 도시는 문화콘텐츠의 체험공간으로 확대하여 지역축제와 조화로운 연계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개발 가능하도록 한다.

두 번째 문화상품 개발단계는 2차 산업인 가공 및 상품화 단계와 3차 산업인 유통 단계로 『산학협력·창업보육센터』와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업 유치와 스타 문화콘텐츠

의 창작 지원,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의 정착으로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산학협력·창업보육센터』는 지역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대학원 중심의 고급 전문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인력 및 업체 DB를 구축한다.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는 1단계 연구기반의 『문화콘텐츠 R&D센터』에서 창작 및 연구 개발된 One Source의 문화콘텐츠를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게임, 에듀테인먼트의 매체별로 Multi Use 할 수 있도록 2차 가공하고, 공예, 패션, 주얼리, 전시, 토이, 산업디자인, 포장, 웹 콘텐츠, 축제 및 이벤트, 공연 등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게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의 매체별 시장분석과 소비자분석, 비즈니스 정보 및 비즈니스 유통망을 구축하고, 매체별 콘텐츠의 파일럿 사전 제작 등을 지원하여 시장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장출시가 가능한 콘텐츠 상품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통망을 확보하고 판매한다. 이와 같이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 및 개발, 제작 외에 유통과 소비까지 포함하는 완결 구조를 가져야 한다. 유통 및 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야만 제품의 가치 실현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한 실용적 수익 모델의 창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단계인 브랜드 가치화 단계는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상품판매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단계이다. 충남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디자인의 성공사례로 『문화플라자』를 창출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심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충남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확립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충남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크고 작은 문화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도시디자인을 바탕으로 충남의 지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관광 문화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충남의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유통·전시·체험·판매·소비하는 기능을 집적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문화플라자』를 구축한다. 『문화플라자』에서는 1, 2단계에서 개발된 문화콘텐츠 상품의 상설 전시 및 판매와 일반 시민들, 문화콘텐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강좌를 개설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을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인지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규모를 확대하

여 충남의 4대 전략산업중의 하나인 첨단문화산업의 육성과 효과적인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상품과 브랜드를 확립하여 충남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표 5〉 충남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단계 및 추진목표

단 계		단계별 사업추진 목표
1 단 계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창작 및 개발 인프라 구축 ① 연구기반 R&D 센터 :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채용 문화원형 및 창작 소재 발굴, 문화콘텐츠 파일럿 제작 ②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벤처·중소기업 육성, 창업보육 지원 ③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게임, 디지털교육&정보등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홍보 마케팅 지원 · 산·학·연·관 연합 네트워크 혁신체계 구축 ·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 조성 및 성공적인 개최 : 창작, 고용, 네트워크의 산실
2 단 계	문화상품 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반 R&D 센터 : OSMU형 문화콘텐츠 개발기획, 제작기술 개발 · 산학협력 창업보육센터 : 지역기반 산업체 양성, 시장 및 소비자 분석 · 디자인상품화지원센터 : OSMU형 2차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마케팅 지원 - 공예, 패션, 주얼리, 전시, 토이, 산업디자인, 포장, 웹, 축제 및 이벤트 등으로 문화콘텐츠의 가공 및 상품화, · 대기업 유치 : 콘텐츠의 유통체계 확립 및 글로벌 판매시스템 구축 · 스타 문화콘텐츠 발굴 및 창작 지원 · 충남문화콘텐츠페스티벌 정착 : 문화콘텐츠산업의 붐업 및 마켓 형성
3 단 계	브랜드 가치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디자인 : 지역이미지 확립과 경제적 성과의 공동성장 · 관광 상품 개발 : 충남지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관광 상품 개발 · 문화체험 공간 구축 : 유통·전시·체험·판매·소비 기능을 집적한 문화체험 공간 · 문화플라자 : 페스티벌과 연계한 축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문화상품 판매

나가는 말

충남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문화전략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충남의 문화전략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활용한 문화 환경 정비 및 활성화 사업으로 충남의 이미지를 '강화' 하고 백제문화제 중심의 지역축제 구성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창출' 하는 유형으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4기 충남의 문화산업 육성전략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역사단지 및 문화산업지구 조성 등의 하드웨어 중심이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전략과 예산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⁵⁾ 활용이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적 삶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충남은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콘텐츠, 생명력이 있어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 구축단계이다. 즉,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를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문화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중장기적 육성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독특한 문화원형(Archetype)을 소유한 문화자산의 확보로 충남 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백제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문화원형의 DB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의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 문화자원의 9.0%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에서 5번째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⁶⁾ 그러나 충남은 전통문화자원, 역사자원에 비하여 콘텐츠 자원이나 상품자원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문화자원의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화자원의 개발전략은 개발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 공간 기능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개발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⁸⁾

두 번째,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을 조성하는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통해서 문화관광 인프라와 복합 문화 공간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다. 순수예술은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형성과 창

6) 문화재청(2006), 지정문화재 총괄현황

7) 충청남도(2006), 충남통계연보

8) 삼성경제연구소(2004), 문화자원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조직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표 예술단체나 공연기관 육성을 통한 문화관광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꾀하려면 창의적인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유적과 공원, 경관 등 문화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지역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적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단지 는 그 자체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장기적 육성계획 수립으로 충남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화와 산업, 교육, 관광, 체육 등을 결합한 시설의 복합화가 요구된다. 역사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은 문화관광 콘텐츠의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되고, 또한 문화예술행사, 문화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하는 가변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때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문화관광의 인프라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탈거리 등 관광시스템 구축이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수익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풍부한 지역문화와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독창성과 흥미를 갖는 테마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상품품목과 형태의 다양성을 갖추되 독창적인 소재와 재료, 디자인으로 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닌, 충남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것으로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즉,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고유성을 확립하고, 지역특화 이미지와 지명도 상승효과를 통해 관광마케팅을 벌여 문화상품의 브랜드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필시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민의 수익적 기반 확립으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고용창출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육성 방안

부경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머리말

최근 고유가, 아니 초고유가의 장기화와 지국의 장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대기오염의 방지, 그리고 에너지안보 제고와 지역경제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장기적 공급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부존 자원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산에너지로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차 에너지공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현실과 머지않은 장래에 교토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정, 무공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반드시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였듯이 2007년 현재 2.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 더 나아가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수립하였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혹자는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의 과거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룩했던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 반도체산업, IT산업의 경이로운 발전 속도와 우수한 중공업 기반을 생각한다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등이 새로운 산업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손색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제동향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21세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본 회의에서는 EU가 201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15%까지 확대하자는 목표(Global RPS) 설정을 제안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반대로 동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당시 독일수상인 Kohl의 제안으로 2004년 6월에 독일 본에서 국제신재생에너지 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for Renewable Energies)가 개최되었는데, 154개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NGO 등 약 2,500명이 참석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국제행사였다. 주요 의제는 재생에너지 시장개발(전략목표, 공정경쟁, 난방 및 수송부문), 재생에너지 금융(공공/민간 파트너십, ODA 및 IFIs, 탄소금융), 에너지시장전환을 위한 능력형성(개도국의 인적·제도적 R&D 역량),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역할(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소비자, 시민단체)로 하고 심층토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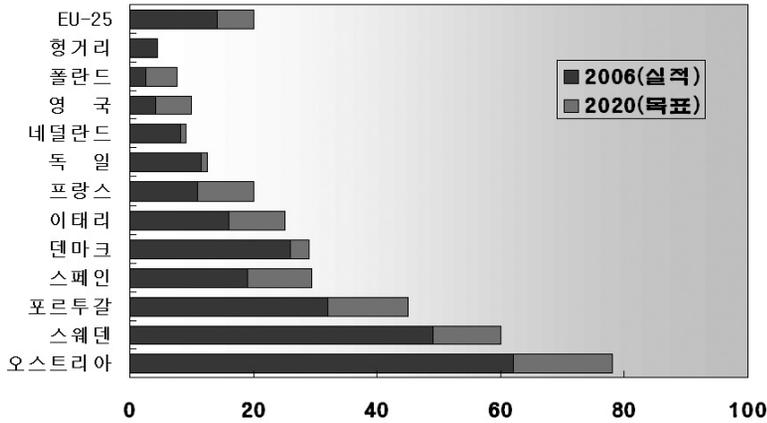
그 후 1년 뒤인 2005년에는 중국정부의 제안으로 북경세계재생에너지총회(Beijing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Renewable Energies: BIREC2005)가 개최되었다. 이는 WSSD 후속조치로 개최된 Bonn 국제재생에너지총회의 차기회의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200여개국 정부고위관리, UN 등 국제기구, NGOs,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석하였다. 핵심의제는 1)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 및 전망, 도전, 이슈분석, 평가, 2) 기업 및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3)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전망, 기술이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4) 남남협력 강화 및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3년간의 침묵 끝에 미국의 제안으로 워싱턴세계재생에너지총회(WIREC2008)가 제3차 세계재생에너지총회라는 공식명칭을 부여받고 2008년 3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동 회의는 장관급 회의로서 6,000여명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대표가 참석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부시 미대통령의 특별강연도 뒤따랐다. 핵심의제로는 1) 재생에너지의 경제 및 환경 편익, 2)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장애요인 규명 및 해결책 강구, 3) 재생에너지 시장 및 사업 확대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 4) 바이오산업 촉진을 위한 농촌 및 경제 개발, 5)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산림의 역할이 선정되었다. 회의 성과로는 참여국, 주정부, 기구, 산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대한 공약이 접수되어 세계 재생에너

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의 개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이중에서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APP-CDC) 산하 8개 테스크포스(T/F) 중의 하나인 APP-REDG T/F (APP Renewable Energy & Distributed Generation Task Force)가 2006년 1월에 결성되어 아태지역의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의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27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주로 호주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가 협력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APP 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의 신뢰성이 입증되어 국제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등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최근 EU의 움직임은 더욱 발 빠른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즉, 2007년 초 구주공동체(the European Commission: EC)는 2020년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즉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의무화하였다. 동 목표에는 수송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는 기존 목표, 즉, 2010년까지 전력소비의 21%와 1차 에너지의 12%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권장목표로 하는 것을 확장한 것이다.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20%, 공급목표는 전력의 3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EU 전체의 공급목표에 의거 회원각국은 <그림1>에 보듯이 자국의 여건을 감안, 국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회원국은 국가 실행계획에 대한 입법화를 마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이미 14% 목표를 법제화하였고, 독일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5-30%까지 늘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45%로 늘린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자료 : The European Union Energy Policies, 2007.



〈그림 1〉 EU의 재생에너지공급목표

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998년과 2007년의 10년간, 특히, 최근 5년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세계 각국과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천에 옮겨졌다. EU 회원국을 위시한 세계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이뤄졌다.

[미 국]

2005년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118GW에 이르러 총 발전량 1,060GW의 11.1%를 차지한다. 비록 미국의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수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풍력의 경우 독일과 스페인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의 경우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그리고 바이오매스와 지열은 세계 1위 보급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대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에는 2006년 발표된 신에너지 정책(Advanced Energy Initiative, AEI)이 있는데, 동 정책의 주요 내용은 1) 2007년 재생에너지 개발 예산의 22% 증액, 2) 발전부문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너지기술 개발 강화, 3) 수송부문에서 에탄올,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 자동

차 기술 개발 강화로 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지원법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생산세 면제 (production tax credit: PTC)가 있는데, 풍력발전에 대한 PTC가 대표적이다. PTC 외에도 연방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지원법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매에 대한 세금감면과 함께 연방정부 시설의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매를 촉진하는 지침서도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RPS)가 있다.

[일 본]

일본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석유위기 직후인 1974년부터 신에너지 R&D 및 보급의 공공-민간 합작 장기계획인 'Sunshine Project' 를 20년간 추진하여 왔고, 1993년에는 이를 'New Sunshine Program' 으로 개칭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일본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태양광 분야이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민간의 투자노력에 의해 세계 태양광 기술 선도국으로 생산, 보급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Sharp, Kyocera, Sanyo 등의 세계 유수의 태양광 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독일과 미국에 비해 뒤떨어진 풍력발전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0년까지 용량을 3배 높여 3,000MW 설치, 2030년까지 보급 용량을 11,800MW로 높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국의 화산대에 풍부히 부존되어 있는 지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지열발전은 전통에너지원으로 취급하여 발전부문의 주요한 발전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과거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자국 내 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바이오매스 니폰'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보급 계획의 실현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로 설정한 바 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세 가지 목표, 즉, 1) 에너지안보, 2) 환경보호, 3)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초의 법적 조치가 1978년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신에너지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신에너지 등의 도입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년에 성립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 및 시장보급의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2002년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RPS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3년에 3.28%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0년에 12.2%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 일]

독일은 재생에너지 R&D 프로그램의 목표를 1)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저감, 2)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3) 기존 네트워크로의 통합, 4) 연구개발에서 시장으로의 신속한 기술이전에 두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2005년 4.7%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 10% 이상, 2050년 5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시장성장률이 가장 높은 태양광 분야와 단위에너지 당 투자 단가가 가장 낮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2040년 이후 주 재생에너지 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70%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이 이와 같이 태양광 부문에서 보급을 늘리려는 이유는 향후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 이외에 자국 내 가용자원의 매우 낮은 비율이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활용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법 및 정책수단, 프로그램으로는 풍력발전에 대해 통상 전력 요금의 최대 90%까지 보조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력공급법이 있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기준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제도(Feed-In Tariff: FIT)가 있다. 기타, 연방정부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난방열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태양정부청사 프로그램과 함께 태양열, 바이오매스, 수력발전기의 교체나 확장시 비용의 10~20%를 보조금 및 융자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1~5kW급 용량의 주택용 태양광설비에 대해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10만호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10만호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중 국]

중국의 2002년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은 약 2억 4천toe로 총 에너지 소비량의 19%에 달한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85%는 바이오매스를 땀감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열에너지 활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수력이 약 11%로 바이오매스 땀감과 소수력의 재생에너지 중 비율이 96%로 절대적이다. 바이오매스의 열에너지 이용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의 에너지(전기 또는 차량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과 산업 창출효과가 큰 태양광이나 풍력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향후 R&D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2020년까지 열에너지 이용을 85%에서 35%로 꾸준히 낮추는 대신, 전기 또는 수송용 연료로의 활용은 1.2%에서 27.0%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또는 풍력의 경우에도 2020년 점유율을 2000년 대비 약 40~100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현재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수력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경에는 가용 자원 양의 약 75%에 도달하여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산단가가 낮은 바이오매스와 풍력이 수력 다음으로 대량 보급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선택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2004년 대비 2020년 증가량이 10배 인데 비해 풍력의 경우 2020년까지 2004년 보급량의 30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풍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2020년 풍력발전 보급 목표가 가용 자원량의 3%에 불과하여 보급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2020년 보급목표가 2004년 대비 약 17배로 풍력보급 증가율의 약 1/2에 불과한데, 이는 태양광발전의 높은 단가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원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였다.

중국은 2005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에서 전체 석유 소비량의 1/3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송부문에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부존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 적극적이다. 현재 중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100만kl 생산하여 휘발유에 10%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3,200만kl로 무려 32배 늘리는 것으로 되어 모든 재생에너지원 중 보급 증가율이 가장 높아 수송 부문에서의 연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 및 정책방향의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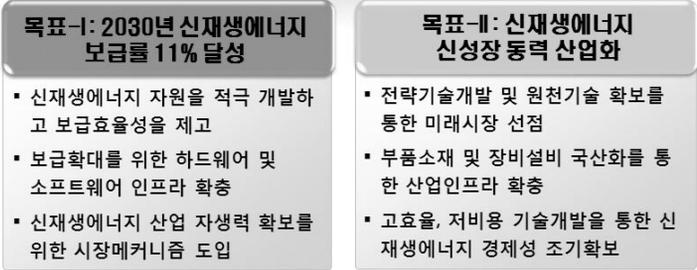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3년 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원년”으로 삼아 예산의 확충과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정비에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예산도 2000년 이전에는 몇백억 원 대에 그쳤던 것이 2000년 이후 천억 대를 넘어서면서 2008년에는 5,32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07년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국가 총 1차 에너지의 2.4%인 5,993천toe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42억불의 원유수입 대체 효과와 1,500만 톤의 CO₂ 절감효과(금액으로 환산시 4억5천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았고 기술개발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대비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기본전략,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실효성있고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표 1〉 제2차 및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차별화

구 분	2 차 기본계획	3 차 기본계획
기 본 방 향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치중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
보 급 목 표	보급목표 5% (근거희박)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대 상 시 장	국내시장	해외시장 진출
주 도 세 력	정부주도	시장주도
수 급 전 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계획의 시평	중장기(10년)	중장기, 초장기(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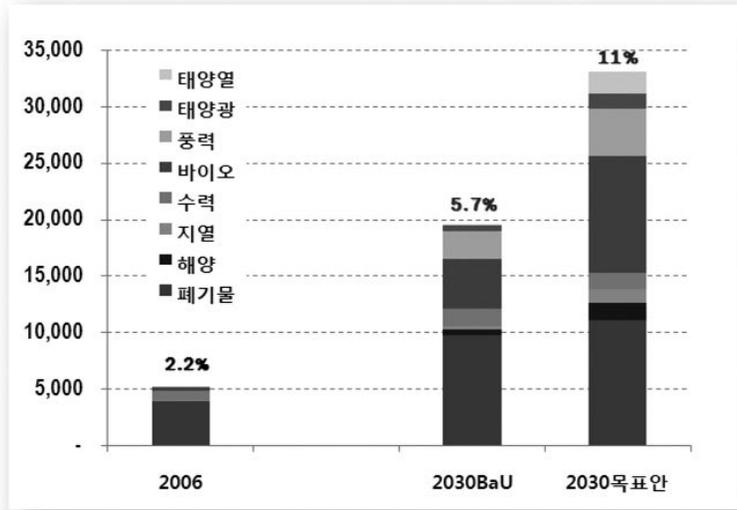
이렇듯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차별화된 접근방식에 따라 설정한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와 같다. 동 계획에서는 최상위 목표로서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현을 두고, 하위 목표로서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양적인 목표로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설정하였고, 질적인 목표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산업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 구현



〈그림 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3〉은 양적인 목표로서 제시된 2030년의 BaU 5.7%와 목표안 11%의 원별 믹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원별 믹스도 자연 재생에너지 비중의 제고로 선진국형 수준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원별 믹스

신재생에너지 부존 여건과 기술수준, 낮은 경제성, 열악한 산업기반 등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분야(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에 대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확대하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기술우위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보급정책 추진이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양산에 의한 제조원가 하락, 대기업의 본격적 참여, 수출산업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대형투자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동안 R&D와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나, 오랜 기간 관련분야에 투자해 온 선진국에 비해 절대투자액이 미흡하다.¹⁾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는 정부의 투자규모와 비례하여 이루어져 왔는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산업성숙도에 따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갖추고 상업화에 근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사용 의무할당제(RPS)를 과감히 도입하여 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고, 아직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재조정 및 지속적인 가격관리 등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R&D와 산업화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공급 및 소비하는, 말하자면 자기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 형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제 구축을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자체, 광역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거 10년간 R&D 투자액은 일본의 7%, 미국의 4% 수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수단 역할을 하기도 하나, 국내 시장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그리고 산업화와 국제화 전략을 전개하여 수출산업화하는 일련의 기술개발·산업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의 역량을 감안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제품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기술개발과 제품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진행하되 R&D, 기존의 원별 개발이 아닌, 기반/제품기술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자급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기술 개발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개발의 경우에도 민간산업체를 주도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제품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국내 부존여건과 기술개발수준, 시장규모, 경제성, 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다르므로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전개하여야 한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냉정한 SWOT분석을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세부기술을 선택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국내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겨냥하는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적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전략분야 R&D지원 강화를 통해 '06년 선진국대비 70% 수준인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그리고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 국산화를 통해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효율, 저비용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조기 확보하도록 한다. 특히, 대기업 및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 정책 추진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R&D 체제 강화, 국내 산업 기반강화 및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풍력발전의 경우, 해상풍력 보급기반 확충, 중소형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및 수출산업화하며,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국내 개발기술의 산업화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한다.

충남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성호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 분야로 정의된다. 이중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8개 분야이고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개 분야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화석연료사용에 의한 CO₂발생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지구는 무분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해 온난화라는 홍역을 겪고 있다. 2007년 2월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 활동이 지구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이며 90%이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 100년간(1906~2006) 지구온도는 0.74℃ 상승하였고, 특히 지난 50년간의 온도상승폭이 100년

간의 상승폭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CO₂ 농도가 550ppm(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에 이르면 지구온도가 최대 4.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21세기말 온도 상승폭을 1.8~4.0도 상승, 해수면은 18~58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협약(1994.3 발효)으로서 1997년 제1차 이행 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동 의무 부담국가가 전체 평균 5.2%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소위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년까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이행 기간 동안에는 의무 감축국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자원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비고갈성 에너지이다. 요즘 화석 연료의 고갈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경제성있는 유전개발의 속도가 둔화되고 Brics 등 신흥경제발전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여 기존 유전의 고갈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일피크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이미 오일피크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1970년대의 석유생산증가율은 매년 평균 4.3%에 달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1.9%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6년의 석유생산량은 2005년에 비하여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 최대의 유전으로 매일 5백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해 왔으며 전 세계 석유의 6.5% 정도를 감당해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제2의 유전인 쿠웨이트의 브르간 유전도 하루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있는 대형유전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막대한 석유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탐사가 이루어져 앞으로 대형유전의 발견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BP사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년 5월호에서는 2007년말 현재 석유는 41.6년, 천연가스는 60.3년, 석탄은 133년의 가채년수를 가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머지않아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라크 전쟁,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둘러싼 북-미간의 마찰 등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각축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우라늄 등 유한한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지열, 수력 등 무한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에너지이기에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원 고갈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국산에너지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33백만toe(세계10위)이며,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43.6%, 석탄이 24.3% 등을 차지하여 석유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7년 에너지수입액은 908억\$로 전체 수입액(3,451억\$)의 26.3% 차지하여 수입품목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총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374억\$, 자동차 수출액 329억\$를 합한 금액보다 많은 상태이다.

더구나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원유수입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7월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2008년 7월의 원유수입액은 93억불로 전년 동기의 51억\$보다 무려 81.3%가 증가하였다.

원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8년 7월까지의 무역수지는 무려 78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에너지이므로 이러한 에너지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태양열, 풍력 등은 물론이고 목질계 바이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등도 모두 그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은 반도체, 조선 등의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수출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 활성화는 무역수지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기술에 의하여 얼마든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의 고갈이 문제되지 않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환 사이클을 통하여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다. 이러한 무한에너지는 자원의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존재하는 자원들이고, 문제는 이러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면 석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자원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이 좋은 태양광셀을 만드는 기술, 태양열집열판을 만드는 기술, 성능 좋은 지열용 히트펌프를 만드는 기술 등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원부국이 될 것이다.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CLSA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07년 4.3GWp에서 2010년 10GWp 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하며, GWEC의 Global Wind 2006 Report에 의하면 풍력시장은 2006년 15.2GW에서 2010년에는 21GW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우리 기업이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아 시장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 등 소재산업, 태양전지 등 반도체 산업, 인버터 및 전기제어시스템 등 중전기산업, 건물일체형모듈 및 설치산업 등 건설 산업과 같이 여러 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LCD산업과 공정이 유사하며, 풍력 관련 산업은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타워제작 등 다양한 분야 산업 및 기술이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며, 수소연료전지산업은 수소생산, 저장, 운반, 연료전지제조 등 여러 분야의 기술발전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미국의 REPP에 의하면 1MW의 태양광 보급에 제조, 설치, 서비스, 판매 등 관련 산업을 총 포함하여 35.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전 세계는 초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EU는 2007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고효율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의 G8정상 회담에서는 EU, 일본, 캐나다 등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2009년까지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의 온실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보급 촉진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급촉진정책에는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설치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반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개요 및 충남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신규 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율은 최대 80%에서 최소 50%까지이다.

일반보급보조사업을 통하여 충남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약 7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53개의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된다.

구 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풍 력	집광채광	태양열냉난방
설치용량	545kW	2927㎡	938RT	22kW	80㎡	10kW
설비개수	26개소	12개소	10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수출전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10만호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치비의 6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통하여 충남지역에서는 총574호의 주택에 1,489kW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였다.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설치호수	24호	152호	172호	226호	574호
설치용량	52kW	330kW	465kW	642kW	1,489kW

지방보급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의 지원비율은 설비투자는 70%, 기획홍보 및 타당성 조사사업은 80~100%이다.

충남지역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34건의 사업에 약74억 원의 국비와 32억 원의 지방비가 투자되어 기반구축사업, 그린빌리지조성사업, 정책기획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연 도	사업건수	국 비	지방비	계
정책기획사업	2건	544백만원	136백만원	680백만원
기반구축사업	4건	297백만원	-	297백만원
시설보조사업	28건	6,574백만원	3,087백만원	9,661백만원
계	34건	7,415백만원	3,223백만원	10,638백만원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07년까지 248개소의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소 345MW가 설치되었다.

2008년 8월 현재 현재 충남지역의 발전차액 지원 대상 상업용 발전소는 수력과 태양광발전소 총 25개소 3,511kW가 가동중에 있다.

구 분	개 수	용 량
수 력	2개소	2,821kW
태양광	23개소	690kW
계	25개소	3,511kW

충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21세기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전담추진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일종의 보조자 역할만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예산은 거의가 중앙정부의 예산이었고 보급프로그램의 운영도 중앙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예산 및 조직의 한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화가 코앞에 닥쳐있으며,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중점추진과제로 삼아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 추진의 동력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 조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둘째,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방보급사업 이외에도 독자적인 신재생에너지보급 예산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충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보급여건이 취약하여 예산의 지원없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독자적인 예산의 확보야말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태양광 주택설치 지원 사업, 각종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수립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특화된 산업단지나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그간의 각종 보급정책에 힘입어 강력한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약 600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1,200억불로 약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셀, 모듈, 제조장비 등 관련 부품산업 시장에서부터 완제품의 제

조, 판매, 설치 등 광범위한 시장이 존재하며 이미 세계 각국은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2005년도에 59개 기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8월 현재 총 2,359개 기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지역에서도 127개의 전문기업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용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전 세계는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충남지역이 부디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적절하게 부응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메카가 되길 기대한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사업 현황과 전망

박호성 | 태안군청 미래전략추진단

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유가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비롯하여 풍력, 조력, 지열, 태양열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도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공급방식이 중앙 공급식에서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맞물려 환경, 교통, 안보 등을 고려한 Local자원의 활용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너지원과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미래 산업, 차세대 산업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태안군에서는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관광태안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안군의 장기적인 관광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태안군은 충남 백합산업 등 화훼산업 분야에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농업용 면세유 제공의 폐지와 더불어 점차 상승 국면에 있는 국제유가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태안군에 관광, 에너지, 농업을 상호 연계시켜 태안의 사회·문화·경제·산업·농업 등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합목적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을 중심으로 한 태안군 북부지역인 이원 간척지와 주변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약 1,800만 평방미터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간략하게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상풍력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열에너지사업(태양열 집열시설, 지열시설, 집단화훼 원예단지 조성), 바이오에너지사업(경관농업지역, 바이오디젤 정제공장 조성), 에너지·환경 홍보관 조성사업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상되어 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한 12개의 신재생에너지 중 5개의 에너지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변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와 시설 내에 설치 중인 소수력발전소,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소와 연계한다면 모든 재생에너지 시설을 한데 어우러져 관찰하고 견학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전무한 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다(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주변 여건과의 조화가 어렵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지원이 어려워 본 특구사업에서 제외).

이러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기반으로 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은 약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입각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이자 성공할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상풍력 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이원방조제 앞 해상 약 800만 평방미터에 2.5MW급 해상풍력발전기 40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5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이원방조제 앞 해상은 풍력발전 잠재량이 총 300MW규모로 아주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해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파고소리에 의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적합한 대상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션파일 공법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어민들의 어획고 향상을 위해서도 주변에 어초 등을 설치하여 어민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해상풍력 측정 마스트 3기를 설치하여 풍속을 측정중에 있으며, 관련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이다. 태안군은 연간 일조량이 3,200시간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에 아주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시행 예정이며, 현재 1단계 14MW급 태양광발전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상용발전 단계에 있다. 1단계 사업부지는 약 29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예전 폐염전 지역으로써 통풍이 잘되고 일사량이 매우 좋은 곳이라 사업대상지로는 최적지로 분류되고 있다. 사업비는 약 1,100억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단일규모 태양광발전소로는 동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발전소 조성기간이 3개월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단기간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이다. 2단계로는 약 16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로 현재 태안화력발전소의 바텀애쉬 처리장인 제1회사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태양광을 방해하는 산, 건물 등이 없어 태양광발전에 최적의 위치를 구비하고 있다.

다음은 열에너지 사업이다. 열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사업과 집단화훼 및 원예시설단지로 구성이 된다. 총 사업비는 약 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약 450만 평방미터의 이원 간척지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태안군의 지역특화사업인 시설원예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열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리터당 450원으로 10a당 시설원예 사업시 연간 경유 소모량이 1만5천 리터가 소요되며, 이는 원화로 환산시 연간 약 95억 원 정도가 연료비로 소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열과 지열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초기 투자비가 높은 점이 단점이나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면 원예사업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 저하에 대비가 가능하며, 약 73%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과 에너지가 결합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대규모 시설단지의 조성으로 판로확보와 물류비 절감으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창출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이다.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이원간척지 내의 농업지역에 유채나 해바라기 등의 경관성이 좋은 작물을 약 444만 평방미터의 농지에 식재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활용한 경관농업지역 조성과 경관농업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정제하여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정제공장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약 2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휴경기 유휴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벼와 이모작 경작을 시행하면 농지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모작의 사업성과 채산성 분석을 위해서 본 사업대상지 내에서 휴경기철 경관작물 이모작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있는 작물 및 품종을 위해서 현재 경관작물 시범포를 운영중에 있다.

마지막 사업으로는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내에 조성된 에너지단지 외 화력발전, 조력발전 등 전체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홍보 역할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안 종합에너지 홍보관 조성사업이다. 에너지 홍보관은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의 센터역할 및 태안군 북부권 지역의 관광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부권 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사업은 2003년 이원방조제 관리동에 풍력측정 마스트기(30m)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풍력측정 마스트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풍력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2006년에 본격적으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간척지를 활용하고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5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특구계획안 공고, 공청회 실시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2007년 9월 28일 제13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로 지정·결정되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본 사업에 사업추진의 개연성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굴지의 여러 대기업들과 접촉한 결과, LG CNS, 포스코, 현대건설 등 국내 굴지의 여러 업체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그 중에서도 본 특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의 경제성 이외의 부분까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원이나 투자희망자의 추진의지, 군의 이익, 사업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7년 6월 13일 태안군과 (주)LG CNS 간 5,2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양해각서 체결 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내부적으로 조율한 결과 사업자를 (주)LG CNS, 포스코건설, 에너지환경연구소, (주)DMS,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다비하나로 결정하게 되었고, 2008년 1월에 이들을 사업별로 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라마이어, 테라와트, 그리고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의 용역기관인 국내의 에너지환경연구소와 2007년 6월 14일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에 가장 선진적이고 우수한 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태안군과 기술양해각서를 체결, 사업의 자금조달 및 기술력확보 등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조성에 순항중인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는 2012년 12월까지 모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3월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이원간척지가 준공되고 열에너지사업, 바이오에너지사업, 또한 현재 3기의 해상풍력 측정 마스트기를 통하여 월간 풍속을 측정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재원 선택 등 현재의 상황이 마무리된다면 2009년부터 모든 사업이 궤도에 오르리라 생각된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가 조성이 된다면 정책적·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및 치솟는 원유가격에 의한 에너지 안보위기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본 특구의 조성을 통하여 IT, BT, NT사업과 더불어 21세기 첨단 신산업을 태안군 북부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태안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으로 알려진 태안군에 특구가 조성됨으로써 2007년 12월 7일에 발생된 허베이스피리트 호 유류유출사고로 실추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무에 따른 에너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태안군 북부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청정사업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등 태안군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태안군의 전략사업 및 특화사업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 뿐

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에너지시설 및 새로 설치될 에너지시설과 연계한 에너지 관광동선의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태안군의 특화사업인 시설원예사업의 냉난방 시설엔 기존에 사용했던 경유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킴으로써 연료비용 절감으로 고유가시대에 시설 원예사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시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태안군 전체에 경제적 가치 상승도 전망된다. 연간 약 35만MWh의 전력 생산은 약 11만 가구 이상에 충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태안군 전체가구의 전력을 충당하고도 남는 양이다. 그리고 석유 약 55만 배럴, 석탄 17만 톤을 절약하여 외화 6,000만 달러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 또한 약 30만 톤의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국가에너지 안보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사업은 태안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사업을 통해서 태안군은 에너지산업과 관광, 농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기존건설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신설예정인 조력 및 에너지특구를 상호 연계시킨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조성하여 태안의 경제·관광·산업·농업발전은 물론, 다양한 자원개발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충분히 대비하여 국가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위기에도 대처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단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한다.

문화마케팅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재창조되며, 문화가 성립되는 과정은 인간생활에 기인한다.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는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첫째, 유럽과 미국 스타일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주택 등)을 말하고, 둘째,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문화인·문화재·문화국가 등)를 의미하며, 셋째,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종교·예술·과학 등을 가리킨다.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문화와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에 대해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원래 산업화 이전의 문화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었으나 산업화 이후의 관리된 사회에서 조작되어지는 문화산업은 문화의 역할과 의미를 정반대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문화산업은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1940년대 중반 공동집필한 "계몽의 변증법 속의 문화산업 :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은 문화산업을 시민적 개체의 의식을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총체화를 위한 도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가 대중사회로 변모하게 되면서 사실상 19세기 이후 엘리트주의 내지 특수계층을 위한 선택적인 정책으로서 문화정책 역할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 대신 문화정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현대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아 왔다. 또한 문화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문화의 개념 자체

가 학문적 경계를 넘어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정체성은 동일성 측면인 전통적 뿌리의식(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개별적 측면인 사회변동(환경변화)에 주체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다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며, 문화적 정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다운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특이성(特異性)과 우월성(優越性)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미지¹⁾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는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가 된다. 도시가 지니는 문화적인 정체성은 유형적인 공간의 장소성 문제이기보다는 시민과 삶, 문화공간과 도시구획, 예술가와 예술 활동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적 공간성의 구축을 의미한다.

도시 마케팅의 근본적인 목적이 도시의 정체성을 재확립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즉, 문화를 통한 도시재활(再活)정책의 성패는 도시환경을 둘러싼 내·외적인 요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문화예술 공간·문화예술 프로그램·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활동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도시문화

공간을 창출하는데 달려 있다.

문화 환경은 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 문화 환경의 조성목적과 활성화에 따른 부가적 이익의 창출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화는 매우 중요한 도시 마케팅의 전략으로 활용되는데, 문화적인 활동을 도시회생(都市回生)을 위한 전략과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이나 문화적 환경과는 무관한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할 수 있다.

문화는 태생부터가 공공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창조력은 공간이나 환경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문화와 사회의 발전적 의미는 양적 팽창과 산업적 생산력의 증대보다는 환경을 둘러싼 ‘삶의 질’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 인적 자원과 서비스 등이 균형있게 성장할 때 비로소 도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가 지니는 문화적인 정체성은 유형적인 공간의 장소성 문제이기 보다는 시민과 삶, 문화공간과 도시 구획, 예술가와 예술 활동이 어우러진 문화적 공간성의 구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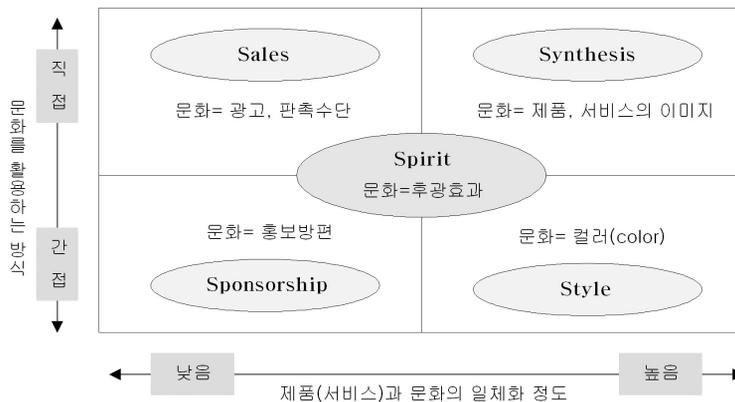
1) 이미지(image)는 대상물에 대하여 유발된 내적 표상 중 그 대상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구조적 동일성(isomorphism)을 가진 표상을 의미한다. 그림이나 회화는 이미지를 구체화한 대상인데, 이 그림을 보고 관람자들은 지각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은 그림이 표상한 대상 그 자체가 관람자에게 일으킨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성질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지와 그 대상간에는 구조적 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2. 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 마케팅

문화마케팅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문화마케팅은 크게 ‘마케팅을 위한 문화’(culture for marketing)와 ‘문화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for culture)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문화지원 및 문화경영을 전자로 본다면, 문화산업의 마케팅활동을 후자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마케팅의 수단에 대한 합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화마케팅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 판촉(sales), 문화 지원(sponsorship), 문화 연출(synthesis), 문화 도시(style), 문화후광(spirit)으로 분류된다. 이를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도입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판촉은 문화를 광고, 판촉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문화적 이미지를 상품 또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시켜 광고, 홍보와 도시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것이다. 아커(Aaker)는 브랜드 자산을 강화시킬 수 있는 판매촉진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판매 촉진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판매촉진과 품질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브랜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판매촉진 등이다. 이러한 판매촉진에 문화를 연계시킨다면, 문화판촉의 대표적 사례로 영화나 드라마에 도시의 상품이나 문화, 유명명소 등을 노출시키는 전략(PPL:Product Placement)이 있다. 또한 도시 특산물 구입상품권을 발행하고 자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고객의

문화마케팅 5가지 유형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연, 영화, 여행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문화지원은 도시를 홍보하거나 도시 이미지 개선의 방법으로 문화 활동의 지원을 통한 문화마케팅은 도시브랜드 가치 구축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지원은 도시의 일반적인 지원을 넘어서 도시와 문화·예술 간의 상호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이에 속한다.

셋째, 문화연출은 도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화적 이미지를 체화하여 차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는 예술이 도시 브랜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신념하에 도시상품의 문화화, 문화의 생활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도시는 새롭고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도시내부의 문화존중 풍토가 문화마케팅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자치단체에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참여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후광은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기업들이 후광효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고객은 기업의 상품과 가격 이외의 도시의 문화적 특성이 상품에 체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은 도시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초예술 투자가 문화적 자존심과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미술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게이크헤드의 볼틱 현대미술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독일 베를린의 타클레스·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그리고 칼스루에의 ZKM 등은 전문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이들 미술관은 독특한 운영방식으로 작가들에게 작품 활동의 기반도 마련해주고,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계의 관광객들까지 유인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내 도시들은 문화적 정체성에 토대를 둔 지역 이벤트를 통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의 지역발전 전략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직접 유발효과와 간접 유발효과를 통해 지방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²⁾ 이후 도시의 발전 전략은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나름의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된 경쟁력을 갖춘

문화상품, 즉 지역 이벤트를 통한 장소 마케팅(Marketing Place)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3. 문화마케팅과 도시브랜드

일반적으로 브랜드란 '특정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와 식별하기 위하여 만든 명칭, 술어, 상징, 도안 또는 이것들의 조합'을 말한다. 기업브랜드는 '기업의 이름, 제품, 언어, 종업원, 기호, 디자인 등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타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기업브랜드는 기업의 인적 경쟁력, 혁신적 경영시스템, 고객관계관리 등과 함께 기업의 4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경쟁력향상을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한 방법으로서 도시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시브랜드는 기업브랜드 전략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식 및 여가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 이미지 자체가 인재와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구축된 도시 브랜드는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부인에게는 지역에 대한 신뢰성, 방문하고 싶어하는 열망, 해당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동기를 일으키게 한다. 도시브랜드 자체가 기업브랜드처럼 어떤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도시브랜드는 지역에 대한 안전, 공생, 문화, 복지, 개방성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수익성 확보, 기업과 인재의 유치 등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또한 도시브랜드 그 자체는 축제, 특산물, 문화유산 등 해당지역에 소재한 하위 브랜드와 직결되어 있다.

도시브랜드는 그 지역의 특유의 개성 및 특징과 함께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 등의 하위브랜드에 의해 구성되는데, 지역의 문화축제 행사는 그 '도시(지역)'라고 하는 상위 브랜드에, 그 '도시(지역)'는 문화축제 행사의 하위 브랜드에 의하여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브랜드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각 브랜드들을 어떻게 상보·상생적 관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뉴욕의 I Love New York 브랜드 슬로건은 뉴욕시 마케팅 개발공사(NYC Marketing)의 '빅 애플'(Big Apple) 캠페인과 함께 관광진흥과 시민통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

2) 포스트 포드주의는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을 포드주의로 규정하고 그 위기와 원인을 포드주의의 경직성에서 찾음으로써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격을 달리하고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유연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생산의 효율성, 노동의 인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포드주의' 이론들은 대체로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작업자들의 소외감, 무기력, 열악한 작업환경이 제거되고 숙련 향상, 자율권 향상이 이뤄짐으로써 노동의 인간화가 점차적으로 달성될 뿐 아니라, 작업조직의 혁신은 생산 효율적 비교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한다.

욕시 마케팅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강력한 브랜드에 대한 잠재력을 연구·조사하며, 뉴욕을 '세계 제1의 도시, 세계의 수도' 라는 이미지 마케팅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타임스퀘어를 뛰어넘는 아이덴티티, 통합이미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가치 증가를 통한 경쟁력 개선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한 도시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장기비전의 슬로건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뉴욕 도시브랜드 'I love New York' 로고가 새겨진 상품이 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것처럼,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도 지니게 된다. 이런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형의 가치이다. 도시브랜드를 인식한 지역 주민들은 강한 결속력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자부심과 결속력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도시브랜드의 파워가 강하면 도시의 문화 및 공공성을 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I Love New York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이제 단순한 관광, 경제적 이익의 단계를 벗어나 '러브' 라고 하는 사랑과 평화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우범지대와 공공장소에서 금연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이용된다.

또한,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문제해결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개선 등 문화마케팅적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뉴욕의 브랜드는 외부에는 훌륭한 도시, 투자가치가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내부적으로는 소속감과 동질감, 자부심과 자긍심 등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욕은 다양한 민족과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색채를 보여주는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맨해튼의 도로인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경제 및 문화가 발생한다. 이런 뉴욕은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여 도시 전체가 세트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면서 영상미와 함께 또 다른 각각의 흥미로움과 연계돼 부가가치를 형성한다.

4.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

디자인은 도시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사회적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디자인의 존재가치는 산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디자인의 각 영역은 계몽의 원리로서 산업사회의 시스템에 적용되어서 성립되어 왔다. 디자인의 문화적 전환은 이제 디자인이 산업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삶을 위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이 곧 문화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디자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난해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visualize)하고, 고정 관념을 벗어나 자유롭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도시경영'으로 확장되었으며, 파급효과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 디자인은 각 도시의 '아름다움, 기능, 편리함, 경제성, 짜임새, 최적화, 인간적, 어울림, 잘 배열된 콘텐츠 등 도시경영 관점에서 도시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도시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 디자인은 시설, 매체, 공간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이용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거주민에게는 도시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

시 내 거주 욕구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나아가 내·외부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도시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투자자와 투자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도시 성장의 기반이 된다.

특히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하고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은 경제적 문화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전체 도시공간의 질서를 정립하고, 도시 이미지와 융합해 성공적인 도시 아이덴티티로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달주·허웅, "문화마케팅을 활용한 명품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7권, 2호, 2006.
2. 박효식, 『국제경영학』, 한울출판사, 1998.
3. 박은실, "박물관과 도시마케팅 실천전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포럼중계』, 2006.
4. 심상민, "문화마케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제372호, 2002.
5. 장효민, "지역문화 상징의 다원적 개념과 정체성 확보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아도르노(theodor Adorno),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4.
7. 이무용,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한국공간학회, 2002.
8. 이정훈, "중소도시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제3의 문화전략", 『관광경영학연구』, 제8권, 2004.
9. www.NYC.gov, "NYC Marketing."

도시재생을 위한 충청남도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분석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는 도시민들에게 상업, 업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도시경제와 상업에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도시 확산 과정 속에서 기성시가지 내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던 가로는 시가지 주변의 개발과 신시가지·신도시 가로의 조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중심의 가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잠재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중심시가지 가로의 노후화와 활력저하는 도심공동화와 맞물려 도심의 쇠퇴를 심화시켜 도시발전 저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로 문화까지도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도심회귀와 컴팩트한 도시공간 조성 등으로

가로기능의 재정립과 기성시가지 내 가로환경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주변 대도시의 성장으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소도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환경 실태파악의 미흡, 관련법 제도의 미비, 재정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를 재생과 함께 기성시가지 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환경의 실태조사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지원체계의 도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중심가로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도시재생과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

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있다.

- 첫째,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활성화 요소 분석
- 둘째, 충청남도 및 시군 가로환경에 대한 가로 만족도 및 도시재생에 필요한 요소별 요구도 조사 및 분석

내용적인 범위로는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기존연구의 동향, 가로활성화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요인에 따른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이론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가로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가로환경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요구도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남도 전체 및 16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 대상가로로서 시·군의 구도심 중심상업가로를 대상으로 하며, 가로의 공간적 범위는 3차원적으로 건축물 입면과 맞은편 건축물 입면 사이에 있는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구 분	조사 설계 내용	
조사목적	▶ 가로환경 만족도 ▶ 도시재생, 가로활성화 요인 중요도	▶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조사대상	▶ 전문가	▶ 해당지역 중심가로 상인, 이용자
조사규모	▶ 총40명	▶ 16개 시·군 각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총480명)
조사방법	▶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현장방문 / 대면 설문조사
조사 주요내용	▶ 가로환경 만족도 ▶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요인별 중요도	▶ 가로이용목적 및 빈도분석 ▶ 가로환경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

Ⅱ. 가로 개념과 도시재생 요소에 대한 고찰

1. 가로 개념 및 기능

1) 가로 개념

가로[街路, street]는 사전적 의미에서 시가지(市街地)의 도로(道路)¹⁾를 지칭하며, 일반적(一般的)으로 교통(交通) 안전(安全)을 위(爲)하여 차도(車道)와 보도(歩道)로 구분(區分)되어 있으며, 가도(街道), 거리, 길이라고 한다.

어원적 측면에서 가로는 포장된(to pave)이란 의미의 라틴어 “stemeve”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계가 정해진 표면 즉, 양측에 줄지어 있는 건물들의 확장된 구역에 의해서 특징지워진 도시 구조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즉, 도로면과 그 도로의 양옆에 열 지어 서 있는 건축물의 입면이 형성하는 3차원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토목건설공학적 측면에서 가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의 일반 도로로서 도시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며 도시활동을 위한 근원이 되며, 가로구성은 차도, L형 측구(側溝), 보도로 되며 특히,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시민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한국의 실정으

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가로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란 장소적으로 시가지화된 지역에 입지하며,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는 3차원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2) 가로 기능

도시 속에 위치한 가로는 하나의 기능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가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교통로로서의 역할,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 주변 건축물로의 접근공간 역할, 도시 체험장 역할, 도시의 경관과 특징을 보여주는 장소 및 지역개발의 기준 및 구획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계기능

가로는 네트워크화 되면서 지역 또는 각종 시설들과 연계되어 자동차, 자전거, 보행 등 도시공간의 교통시설로서 주기능을 한다.

(2) 구획기능

가로는 지역과 지역, 지역과 시설, 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면서 도시의 가구나 근린주구 등의 도시공간을 구획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 민중서림, 옛센스국어사전, 1996

(3) 공공 오픈스페이스 기능

통풍, 채광 등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재난시 방화 및 피난 등의 공공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산책로, 광장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과 휴식 기능을 담당한다.

(4) 경관형성 기능

가로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건물로 이루어지는 삼차원의 구조로 도시형태 및 경관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며 보행자에게 도시에 대해 실제적으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5) 사회·경제적 기능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 자동차가 이동하는 차도, 목적 대상이 되는 건축시설물 등으로 형성되는 가로는 이를 상호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과 계획 요소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가로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가로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케빈 린치(Kevin Lynch)는 활

성화된 환경에서는 알아보기 쉬움(Legibility)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인식된 공간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활동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또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에게 의미와 장소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이콥스(Jacobs)는 가로의 활성화는 가로가 가진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것으로 1차적 다양성과 2차적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차적 다양성은 주거, 사무소, 공장 등과 같은 기능과 용도상의 다양성을 말하며, 2차적 다양성은 소매점, 놀이터 등 삶의 행위나 욕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시설과 공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다양성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은옥(2002)은 활성화된 가로는 활성화의 주체인 사람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편의를 고려한 건물 디자인 등이 활성화된 가로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민우(1992)는 활성화된 가로는 휴먼스케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로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정리되었지만,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은 미흡한 상태이며, 일부 연구된 대부분의 대상은 대도시

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ULI에서 제안하고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설계 원칙

ULI(Urban Land Institute)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가로환경 설계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 : 용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것
 진전한 도시 중심은 활력 있는 업무 및 레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폭넓은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낮과 밤 시간에 도심 가로에 방문하고 머무는 다양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용도는 업무, 주거 및 위락뿐만 아니라 소매점과 식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칙 : 컴팩트한 개발을 할 것
 가로를 중심으로 보행자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 시설, 활동센터 등의 집객시설과 노면주차장과 전면공지 등의

지원시설 및 공간들이 서로 기능적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설과 기능들이 떨어져있거나 격리되어 있다면, 보행자들의 활동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새로운 개발은 토지가격이 낮으며, 화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중심지 외곽에서 일어나기 쉽다. 도시 중심의 전통적인 소매 센터와 도보거리 내에 위치한다면, 주변의 고밀도 개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통적인 중심에서 새로이 개발된 지역을 걸어서 접근할 수 없다면, 중심지에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원칙 : 개발의 힘을 불러일으킬 것
 적합한 규모의 개발과 업무 또는 주거로 상층부 건물 공간의 생산적인 이용은 토지이용의 복합화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도심 중심부의 부동산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또는 가로수준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이 저밀도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들에서 기존 투자지역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심 가로계획, 법률과 조례, 그리고 검토과정에서는 건물들이 가로와 어떻게 관계되며

가로공간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4) 원칙 : 활동의 균형을 확보할 것

도시의 중심부는 낮과 밤에 활동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적합하게 만든 업무공간은 업무시간 이후에 중심지역을 공동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상점, 방문자 매력물, 그리고 주거들은 혼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주요한 용도들에 대한 과도한 균집은 피해야만 한다. 즉 특별 구역들의 조성은 - 많은 “극한 상태”환경의 보증인 - 그러한 용도들이 도시 중심의 재생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

(5) 원칙 : 접근성을 제공할 것

차량접근과 주차는 편리하며 효율적이지만, 보행 증진과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에게 명확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자의 체험을 증진시키는 충분한 폭의 보도와 어메니티들은 가로들이 장벽이 아닌 연계기능들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잘 구성된 동선패턴은 높은 질의 보행환경, 효율적인 차량 접근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우선해야 할 일은 중심 코어에 쇼핑과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간, 가로주

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가능한 한 도시 중심에 종일 교외통근자를 위한 주차장에 대한 증가되는 수요는 대중교통, 주변지역 주차장, 그리고 카풀 등을 통해서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지하주차장은 고품격의 부동산 소유자와 거주자들이 고밀의 업무와 주거개발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6) 원칙 : 기능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것

사람들은 활동 중심시설들을 걸어서 이용하는데 있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매력이 있으며, 그리고 편리한 연결성이 있는 가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보행자의 연계는 독특한 가로경관의 처리,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활동적인 가로-레벨의 용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 네트워크에 의해 진행되며, 이는 근교 근린주구 지역과 도시중심의 연계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 활동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거리에 직접적으로 접하는 곳에 불결한 벽들, 주차장 구획들 또는 주차용 구조물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보행자의 체험을 떨어뜨린다면 새로운 개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은 가로-레벨의 입면들이 보행자 환경에 흥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블록 사이에 중요 가로와 근처의 주차 구획들이 가능한 한 연결되어야 한다.

(7) 원칙 : 명확한 정체성을 만들 것

도시 중심부들이 사람들이 교감하는 매력적이며 흥미있는 장소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매활동, 문화적 활동, 위락,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프로그램들은 도시의 중심지 이미지를 흥미있는 장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주거와 도시생활의 증진은 또한 안전하고, 잘 유지되며, 그리고 살아있는 환경으로서 도시 중심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이벤트, 페스티벌, 무료주차기회, 그리고 특별한 인센티브 등이 결합된 마케팅과 촉진은 도시 중심의 속성을 증진시킨다.

2)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계획 요소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이용하는 가로환경에 있어 R. Brambila와 G. Longo는 계획대상의 물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요소들은 한편으로는 계획요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1) 물리적 요소

요 소	세부 구성 요소	비 고
교 통 망	· 광역교통(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대중교통시스템 등	접근성 관련
가 로 (차도+보도)	· 가로 폭, 바닥재, 차량진입방지시설, 횡단보도 자동차 정지선, 과속방지턱 등	안정성 관련
가로시설물	· 식재, 의자, 가로등, 깃봉, 키오스크, 가판대, 쓰레기통, 우체통, 공중전화, 화장실 등	쾌적성 관련
건 축 물	· 입면(facade), 층고, 가로와 접하는 접도면적, 건물색채, 건축물군의 형식미	

(2) 경제적 요소

요 소	세부 구성 요소	비 고
건 축 물 용 도	· 업무(오피스), 소매점, 주거, 문화 및 위락시설, 호텔, 컨퍼런스/컨벤션 센터, 공공서비스 등	용도의 다양성
지 가	· 개인·공공·단체 소유의 토지, 과세 가능한 부동산의 평가액	

(3) 사회·문화적 요소

요 소	세부 구성 요소	비 고
인 구 활 동	· 이용인구 (배후지인구, 통과인구 등)	
특 징 적 문 화 요 소	· 고건물, 지역의 지리·지형·지세, 상징물(랜드마크), 가로경관, 공공 예술품, 오픈스페이스 등 가로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적인 상징물 · 이벤트 및 장소마케팅 정체성	정체성

3. 검토종합 -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활성화 요소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가로활성화에 대한 요인은 연구의 접근측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Cy Paumier(ULI)로서 7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Jane Jacobs는 용도의 다양성, Kevin

Lynch는 알아보기 쉬움(Legibility)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을 사례로 연구된 활성화 요인으로서 신중진(2007)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6가지 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Cy Paumier가 제시하고 있는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항 목	Cy Paumier (ULI)	Jane Jacobs	Kevin Lynch	신중진 (2007)	정수진	검토 종합
1 용도의 다양성	○	○		○		●
2 컴팩트한 가로환경	○			○	○	●
3 적합한 규모의 개발	○			○		●
4 활동의 균형성	○					●
5 접근성	○					●
6 기능적 연계성	○			○	○	●
7 정체성	○		○	○	○	●
8 주민 참여				○		

- 1) Kevin Lynch의 경우 활성화된 가로는 알아보기 쉬움(Legibility)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체성 항목으로 분류함
- 2) 신중진의 도시재생을 위한 일본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 정비수법 연구(2007.5)는 정비원리 및 수법으로서 연계성, 협력성, 지속성, 지역성, 복합성, 공공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협력성은 주민 참여, 지속성은 적합한 규모의 개발로 분류함

Ⅲ.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1. 조사 및 분석의 틀

1) 범위설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 지역을 대상으

로 하며, 연구 기간과 내용의 한계 상 시·군의 대표성 있는 구도심의 중심가로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범위는 충청남도 시·군의 인구현황, 주변 개발현상, 낙후도, 역사적인 특징 등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하며, 유형별 대표 도시의 중심가로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지역	특 징
천안, 아산, 당진, 서산	① 개발의 활성화로 전체인구 증가 ② 신도심의 개발로 구도심 침체
홍성, 예산	① 인구감소 지속되고 있으나 읍지역 인구증가 ② 신도청 등 신도시 건설로 도심 쇠퇴 예상
금산, 연기, 공주, 계룡, 논산	① 인구감소 지속되고 있으나 읍지역 인구증가 ② 광역시와 인접하여 도심 쇠퇴 지역
청양, 서천, 부여	① 인구감소와 성장기반이 약화된 낙후지역
태안, 보령	① 지리적으로 서해와 인접 ② 관광인구 등 유동인구의 증가

2) 조사 및 분석방법

가로환경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는 전문가와 대상가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항목 및 내용

설문 조사항목 및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용과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설계 원칙을 참고하여 7개 대항목, 20개 소항목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표 1〉 설문 조사 항목

7개 대항목		세부 소항목
1	용도의 다양성	① 가로변 건축물 용도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업무, 주거, 위락, 소매점, 식당 등) 및 복합화가 되어 있는가?
2	컴팩트한 가로환경	② 보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가로규모 및 길이(300m이내), 보도폭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③ 가로변 시설물의 연결개발, 건축선 지정 등으로 시각적인 연속성 및 컴팩트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④ 보행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도 및 건물차량진입부 등이 정비되어 있는가? ⑤ 가로의 간판·사인 등은 잘 정비되어 있는가?
3	적합한 규모와 개발	⑥ 공공 및 민간차원 적절한 정비·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계획이 있는가? ⑦ 가로변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잘 정비되어 있는가? ⑧ 가로활동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규모 단일용도의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가?
4	활동의 균형성	⑨ 야간 조명 등 가로안전시설 확충되어 있는가? ⑩ 가로편의시설(벤치, 파고라, 가로수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⑪ 매력적인 가로편의시설물 또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매력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있는가?
5	접근성	⑫ 가로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시스템(버스, 철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차장 등을 잘 확보되어 있는가? ⑭ 대상가로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6	기능적 연계성	⑮ 가로 내 주요시설간 보행동선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보행로의 연속성, 적정 보도 폭원, 횡단보도 폭·간격·주기 등 ⑯ 보행장애시설물, 무단주정차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⑰ 가로안내판은 잘 정비되어 있는가?
7	정체성	⑱ 역사, 문화, 랜드마크적 건축·시설물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⑲ 건축입면, 색채 등이 개성있게 나타나고 있는가? ⑳ 가로 이벤트 등의 가로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가?

2.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로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

1) 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

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심가로의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7개 항목에 따른 요구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은 중심가로환경의 만족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표 2〉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조사방법	내 용
조사대상 및 표본수 (총 40명)	-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6명)
	-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건축, 교통 등 관련 연구직 (19명)
	-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건축 등 관련 대학교수 (15명)
표본추출 방법	- 엔지니어링, 연구직, 대학교수 등 의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추출 방법	- 엔지니어링, 연구직, 대학교수 등 의도 할당 표본 추출
신뢰구간	- 95%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 2.5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07년 8월 18일 ~ 30일

과제의 상대적 중요도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등 관련 전문가들로 엔지니어링, 연구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2) 전문가설문 응답자의 특성

전문가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최저 20세에서 최고 50세까지의 연령으로 30·40세가 전체 응답자의 43.2%이었고, 다음으로 40·50세가 29.7%, 50세 이상 10.9%이었으며, 응답자의 94.6%가 남성이었다.

전문가 설문 응답자 직업 및 전공은 연구원 47.5%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학/교수가 37.5%, 엔지니어링 15%이었다. 이들의 전공 분야는 도시계획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조경설계가 15%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지역경제(12.5%), 건축학(12.5%), 도시설계(10%), 인문계열(10%), 교통계획(2.5%) 등 순으로 설

문에 응답하였다.

3) 만족도

충남 가로환경에 대한 전문가설문 만족도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만족도는 2.6으로 약간불만족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불만족 42.5%(17명), 약간불만족·보통 각각 22.5%(9명), 약간만족 7.5%(3명), 매우불만족 5%(2명) 등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전문가 설문 응답자 직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직은 불만족 42.1%(8명), 약간불만족 31.6%(6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중 사자는 불만족 53.3%(8명), 보통 26.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엔지니어링은 보통 또는 약간만족에 각각 33.3%(2명)으로 나타났다.

- 각 전문가설문 응답자 직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직 종사자는 2.3 불만족을 나타냈고, 대학/교수 종사자 또한 2.1 불만족을 표시
- 연구직 종사자 및 대학/교수 종사자 등

- 은 비교대상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 우수지역에 비해 충남의 가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엔지니어링 종사자는 만족도 3.3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냄

〈표 3〉 전문가설문 가로환경 만족도 분석

구분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연구직	2.3	-	-	5.3% (1명)	15.7% (3명)	31.6% (6명)	42.1% (8명)	5.3% (1명)
대학/교수	2.1	-	-	-	26.7% (4명)	13.3% (2명)	53.3% (8명)	6.7% (1명)
엔지니어링	3.3	-	-	33.3% (2명)	33.3% (2명)	16.7% (1명)	16.7% (1명)	-
평균만족도	2.6 (40명)	-	-	7.5% (3명)	22.5% (9명)	22.5% (9명)	42.5% (17명)	5.0% (2명)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7	6	5	4	3	2	1	0

4) 중요도

충남 가로환경에 대한 전문가설문 평균 중요도를 살펴보면, 정체성(19.6%), 기능적 연계성(17.3%), 적합한 규모의 개발(15.7%), 접근성(12.7%), 컴팩트한 가로환경(12.5%), 용도의 다양성(11.8%), 활동의 균형성(1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설문 응답자의 직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직 종사자는 기능적 연계성(18.3%), 정체성(17.2%), 적합한 규모의 개발(14.7%),

접근성(14.4%), 컴팩트한 가로환경(13.9%), 용도의 다양성(12.9%), 활동의 균형성(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종사자 또한 정체성(21.7%)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접근성(15.5%), 기능적 연계성(15.2%) 등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종사자는 정체성(20%), 적합한 규모의 개발(20%) 등을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 순으로 기능적 연계성(18.3%), 활동의 균형성(13.3%), 용도의 다양성(10.0%), 컴팩트한 가로환경(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에 있어 개선항목별 중요도 분석

구분	용도의 다양성	컴팩트한 가로환경	적합한 규모의 개발	활동의 균형성	접근성	기능적 연계성	정체성
연구직	12.9%	13.9%	14.7%	8.6%	14.4%	18.3%	17.2%
대학/교수	12.5%	13.5%	12.3%	9.3%	15.5%	15.2%	21.7%
엔지니어링	10.0%	10.0%	20.0%	13.3%	8.4%	18.3%	20.0%
평균중요도	11.8%	12.4%	15.7%	10.5%	12.7%	17.3%	19.6%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1) 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 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심가로의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6개 시·군 각30명을 대상(총480명)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일반인 설문은 중심가로 이용목적 및 빈도, 가로환경 만족도 및 요구도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16개 시·군 기성시가지 내의 대표적인 중심가로서 각 3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표 5〉 주민 설문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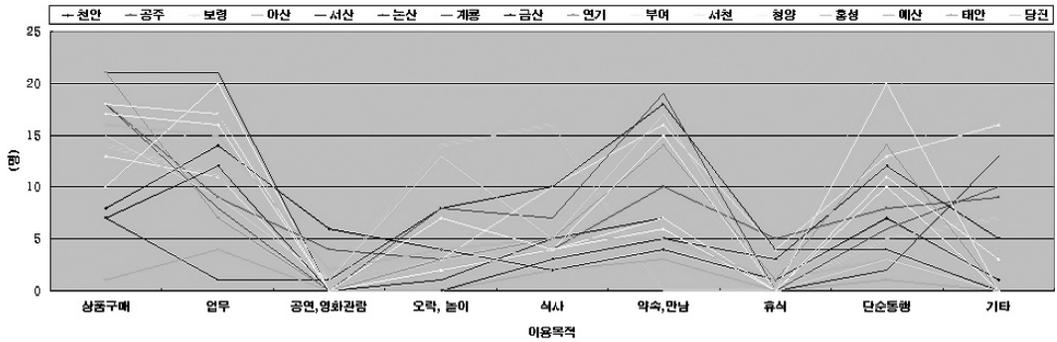
조사방법	내 용
조사대상 및 표본수(총 480명)	- 충청남도 16개 시·군 각30명을 대상으로 설문
표본추출 방법	- 16개 시·군 각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신뢰구간	- 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2.5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방문 및 대면 설문조사
조사장소	- 16개 시·군 기성시가지 내의 대표적인 중심가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6일 ~ 9월 15일

2) 이용목적 및 이용시간 분석

(1) 이용목적

16개 시군의 설문을 통해 중심가로의 이용 목적은 상품구매(21.2%), 업무(21.1%), 약속·만남(16.7%), 단순통행(14.4%), 식사(9.7%), 오락·놀이(7.4%), 기타(5.7%), 휴식(2.0%), 공연·영화관람(1.8%) 순으로 나타나 단순통행보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연·영화 관람(1.8%), 오락놀이(7.4%)로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로에 문화시설이 부재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로 용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항목별 요구도에서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 요구도보다 문화·공연시설 확충의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약속, 만남과 함께 가로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기능(2.0%)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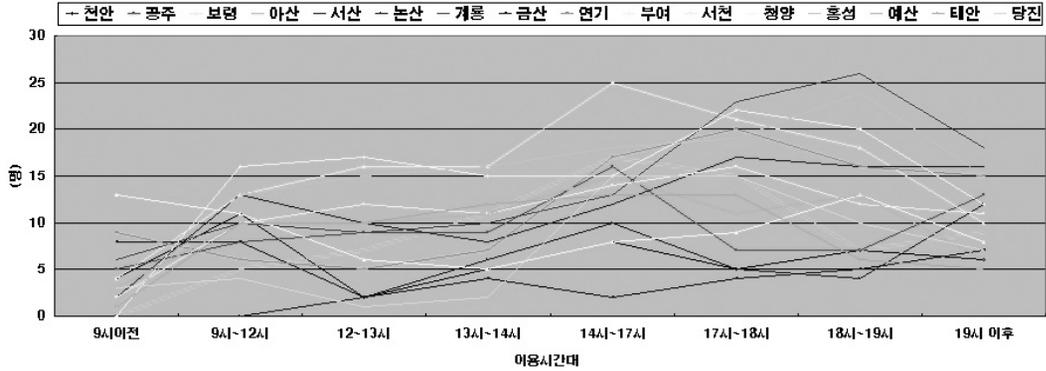


〈그림 1〉이용목적 분포

(2) 이용시간대

주민들의 가로이용시간대를 보면 14~19시 사이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여 오전보다는 오후, 오후 시간에서도 19시 이후에는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을 통해 조사된 16개 시·군의 중심가로의 이용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17시(17.1%), 17~18시(16.5%), 18~19시(14.9%),

19시 이후(13.8%), 9시~12시(11.6%), 13~14시(11.3%), 12~13시(9.4%), 9시 이전(5.4%)로 나타났다. 즉,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전시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이용활동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가로 활동균형성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주 이용시간대 분포

(3) 설문응답자 계층 및 직업

중심가로의 설문응답자의 연령계층은 20~30세(36.7%), 30~40세(20.0%), 40~50세(19.4%), 50세 이상(17.5%), 20세 미만(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성별 분포는 남자가 208명(43.3%), 여자가 272명(56.7%)로 여성응답자가 13.3% 높게 응답하였다.

중심가로의 설문응답자의 직업분포는 기타 28.5%, 학생 22.7%, 자영업 22.7%, 회사원 14.4%, 서비스업 10.2%, 농업 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3) 가로환경 만족도 및 개선요구도 분석

(1) 만족도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가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3.2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족도가 보통인 구간(4~3구간)에서 3.5기준으로 하여 3.5이상인 시군은 서산(3.6), 계룡(3.6), 금산(3.6), 서천(3.7), 태안(2.5) 등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수치는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가로환경이 그나마 나은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온 만족도로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음. 그나마 만족도를 보이는 약간만족(5~4구간)의 분포에 속한 시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충남의 가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만족도가 보통이며 3.5 이하인 시군으로서 는 공주(3.2), 보령(3.2), 아산(3.1), 연기(3.4), 부여(3.1), 청양(3.2), 홍성(3.4) 등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3미만으로서 불만족스럽게 나온 시·군을 살펴보면 천안(2.8), 논산

(2.7), 예산(2.9), 당진(2.5) 순으로 충청남도 전체 시군 중 당진군의 가로환경이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실제로 당진군의 도심은 구도심의 구조를 유지하며 차도와 보도가 혼합되어, 보행 안전성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3.2) 조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2.6)보다는 높게 나타났다지만 만족도 구간인 4~3구간에서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어, 도시재생과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로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시·군별 가로환경 만족도

구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천안	2.8	-	3.3%(1명)	6.6%(2명)	43.3%(13명)	16.7%(5명)	20%(6명)	10.1%(3명)
공주	3.2	-	6.6%(2명)	6.6%(2명)	56.7%(17명)	13.4%(4명)	13.4%(4명)	3.3%(1명)
보령	3.2	-	-	20%(6명)	46.6%(14명)	20%(6명)	13.4%(4명)	-
아산	3.1	-	10.1%(3명)	13.4%(4명)	36.6%(11명)	10.1%(3명)	29.8%(9명)	-
서산	3.6	-	10.1%(3명)	13.4%(4명)	63.3%(19명)	3.3%(1명)	6.6%(2명)	3.3%(1명)
논산	2.7	3.3%(1명)	6.6%(2명)	13.4%(4명)	20%(6명)	16.7%(5명)	20%(6명)	20%(6명)
계룡	3.6	-	-	26.6%(8명)	56.7%(17명)	13.4%(4명)	3.3%(1명)	-
금산	3.6	3.3%(1명)	16.7%(5명)	13.3%(4명)	46.7%(14명)	3.3%(1명)	3.3%(1명)	13.4%(4명)
연기	3.4	-	-	20%(6명)	53.4%(16명)	23.3%(7명)	3.3%(1명)	-
부여	3.1	-	-	10.1%(3명)	50.1%(15명)	33.3%(10명)	6.6%(2명)	-
서천	3.7	-	-	26.6%(8명)	66.8%(20명)	6.6%(2명)	-	-
청양	3.2	3.3%(1명)	13.4%(4명)	6.6%(2명)	43.3%(13명)	6.6%(2명)	16.7%(5명)	10.1%(3명)
홍성	3.4	-	-	10.1%(3명)	69.9%(21명)	16.7%(5명)	3.3%(1명)	-
예산	2.9	3.3%(1명)	-	13.4%(4명)	33.3%(10명)	20%(6명)	23.3%(7명)	6.6%(2명)
태안	3.5	-	-	36.6%(11명)	33.3%(10명)	26.6%(8명)	3.3%(1명)	-
당진	2.5	-	-	3.3%(1명)	36.6%(11명)	20%(6명)	40.1%(12명)	-
합계	3.2	0.8%(4명)	4.2%(20명)	15%(72명)	47.3%(227명)	15.6%(75명)	12.9%(62명)	4.2%(20명)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7	6	5	4	3	2	1
								0

4) 가로환경 개선 요구도

지역별로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는 평균 4.7로서 개선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요구도가 매우 높은 5.5 이상구간의 시·군을 보면 논산(5.7), 당진(5.6), 천안(5.5), 금산(5.5) 등으로 가로 환경의 만족도가 낮은 시·군

일수록 개선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5.5~5.0사이 구간의 시·군을 보면 공주(5.0), 아산(5.0), 청양(5.2), 예산(5.1) 등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요구도가 높은 5.0~4.0사이 구간의 시·군을 보면 보령(4.0), 서산(4.4), 부여(4.5), 홍성(4.1), 태안(4.3)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보통의 요구도(4.0~3.0)를 나타낸 시·군으로는 계룡(3.5),

〈표 7〉 시·군별 가로환경 개선요구도

구분	요구도	매우필요	필요	약간필요	보통	약간불필요	불필요	매우불필요	
천안	5.5	33.3%	26.7%	20%	16.7%	-	3.3%	-	
공주	5.0	30%	33.3%	6.6%	23.4%	3.3%	3.3%	-	
보령	4.0	3.3%	13.3%	23.4%	46.7%	13.3%	-	-	
아산	5.0	3.3%	56.6%	23.4%	16.7%	-	-	-	
서산	4.4	10.1%	23.4%	13.3%	49.9%	3.3%	-	-	
논산	5.7	46.7%	33.3%	13.3%	6.6%	-	-	-	
계룡	3.5	-	3.3%	20%	49.9%	23.4%	3.3%	-	
금산	5.5	36.7%	36.7%	16.7%	6.6%	3.3%	-	-	
연기	3.8	-	10.1%	13.3%	70%	6.6%	-	-	
부여	4.5	6.6%	13.3%	50.1%	30%	-	-	-	
서천	3.8	-	3.3%	30%	56.6%	10.1%	-	-	
청양	5.2	20%	46.7%	23.4%	3.3%	-	-	6.6%	
홍성	4.1	-	16.7%	33.3%	43.4%	6.6%	-	-	
예산	5.1	30%	23.4%	23.4%	20%	3.3%	-	-	
태안	4.3	-	23.4%	33.3%	40%	3.3%	-	-	
당진	5.6	40%	40%	13.3%	6.6%	-	-	-	
합계	4.7	16.3% (78명)	25.2% (121명)	22.3% (107명)	29% (146명)	4.8% (23명)	0.2% (3명)	2.2% (2명)	
		매우필요	필요	약간필요	보통	약간불필요	불필요	매우불필요	
		7	6	5	4	3	2	1	0

연기(3.8), 서천(3.8) 등이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개선 요구도를 보인 논산, 당진과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계룡은 구간 격차가 2.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세부항목별 요구도 조사

다음은 도시재생과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과제로서 7개 항목(①용도의 다양성, ②컴팩트한 가로환경, ③적합한 규모의 개발, ④활동의 균형성, ⑤접근성, ⑥기능적 연계성, ⑦정체성) 및 세부항목에 대한 지역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용도의 다양성

도시재생을 위해 가로의 용도 다양성 증진에 대한 평균 요구도를 보면 4.3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기능으로서 문화공연시설 확충(4.7), 상업시설 확충(4.5), 공원시설 확충(4.4) 등으로 요구도를 보였으며, 주거기능의 확충(3.7)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 천안의 중심가로에는 문화·공연시설확충(5.6), 공원시설 확충(5.6) 등이 필요도가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용도복합화와 상업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금산은 공원시설 확충(5.5), 상업시설 확

충(5.4)로 필요도가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문화공연시설 확충을 요구

- 청양은 상업, 업무, 주거 등 시설 간 용도복합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업시설, 업무기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가로의 주 기능인 상업(4.5), 업무(4.1)와 함께 이용자를 유인하고, 집객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공연시설(4.7), 공원시설(4.4) 등을 요구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지자체에 가로환경 정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현재 시군에서 예산, 토지확보, 사업추진 등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도심과 가로 외 근교지역에 문화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은 도심재생과 가로 활성화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공연시설 확충이 전반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온 반면, 시군별 환경에 따라 세부확충기능은 다르게 조사되었는데 상업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시군은 보령,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임

〈표 8〉 용도의 다양성에 증진을 위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상업시설 확충	업무기능 확충	주거기능 확충	문화·공연 시설 확충	공원시설 확충	상업, 업무, 주거 등시설 간 용도복합화
천안	5.0	4.8	4.1	5.6	5.6	5.1
공주	4.2	4.1	4.1	4.7	4.4	3.9
보령	4.3	3.7	3.5	3.9	3.9	3.6
아산	4.8	4.4	4.3	5.4	4.8	4.3
서산	4.3	4.1	3.4	4.8	4.3	4.3
논산	5.5	4.6	4.4	6.0	5.7	5.0
계룡	3.9	3.4	3.4	5.2	3.8	3.5
금산	5.4	4.8	4.3	5.3	5.5	4.7
연기	3.9	3.5	3.4	3.9	3.6	3.6
부여	4.1	3.8	3.4	4.1	3.7	3.9
서천	4.0	3.9	3.4	3.8	3.8	3.5
청양	4.8	4.7	3.9	4.3	3.6	5.1
홍성	4.5	3.8	3.4	4.1	3.9	3.5
예산	5.3	4.1	3.8	4.6	4.6	4.0
태안	4.4	3.7	3.4	4.2	3.9	3.6
당진	4.3	3.9	3.4	4.7	4.6	4.2
평균 요구도	4.5	4.1	3.7	4.7	4.4	4.1

| 매우필요 | 필요 | 약간필요 | 보통 | 약간불필요 | 불필요 | 매우불필요 |
 7 6 5 4 3 2 1 0

(2) 컴팩트한 가로환경

가로환경의 컴팩트한 조성의 전체 평균 요구도를 살펴보면 4.2로써 비교적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보행로 조성 및 정비(4.6), 건축물 연결개발(3.9), 건축선 지정으로 가로분위기 확보(4.1), 보행간섭

최소화(4.3) 등으로 보행로 조성 및 정비가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당진, 천안의 경우 요구도가 5.5 이상으로써 도심재생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보행로 조성 및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천안은 중심가로에 콤팩트한 가로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에서 보행로 조성 및 정비(5.6)에 대한 요구도에 필요성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필요로 나타냄
- 금산은 가로만족도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고 보행로 조성 및 정비(5.6) 항목에 대해 필요 요구도, 건축물 연접개발(4.4)에 대해서는 약간 필요의 요구도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의 요구도를 보임

〈표 9〉 콤팩트한 가로환경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보행로 조성 및 정비	건축물 연접개발	건축선 지정으로 가로 분위기 확보	건물집입 차량 등의 진입부 조절을 통한 보행간섭 최소화
천 안	5.6	4.5	5.3	5.4
공 주	5.1	4.2	4.6	5.0
보 령	3.8	3.5	3.7	3.7
아 산	4.9	3.9	3.9	4.0
서 산	4.1	4.2	4.0	4.6
논 산	5.3	4.5	5.3	4.9
계 룡	3.2	3.3	3.2	3.4
금 산	5.6	4.4	5.3	5.3
연 기	4.0	3.4	3.6	3.7
부 여	4.2	3.6	3.9	3.9
서 천	3.9	3.4	3.3	3.4
청 양	5.3	4.1	4.9	5.2
홍 성	3.9	3.4	3.2	3.4
예 산	4.9	4.0	4.1	4.5
태 안	4.1	3.5	3.4	3.6
당 진	5.6	3.9	4.6	5.2
평 균 요구도	4.6	3.9	4.1	4.3

| 매우필요 | 필요 | 약간필요 | 보통 | 약간불필요 | 불필요 | 매우불필요 |
 7 6 5 4 3 2 1 0

(3) 적합한 규모의 개발

도시재생을 위해 가로를 적합한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는 평균 4.0으로써 필요한 것으로는 조사되었으나, 다른 5개의 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적당한 개발 유도(4.4)로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로변 대규모 단일용도 입지제한(3.8), 가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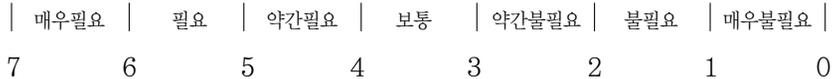
건축물 높이제한(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별로 적당한 개발 유도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곳은 청양으로서 요구도 5.6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 예산은 적당한 개발 유도(5.6)에 대한 요구도를 보였으며, 천안은 적당한 개발 유도(5.2)에 대한 필요의 정도를 나타냈

〈표 10〉 적합한 규모의 개발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적당한 개발유도	가로변 대규모 단일용도 입지제한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천안	4.4	3.9	3.4
공주	4.0	3.3	3.4
보령	4.6	4.2	3.6
아산	4.2	3.8	3.6
서산	5.4	4.7	4.4
논산	5.4	4.7	4.4
계룡	3.5	3.3	3.3
금산	5.4	4.7	4.5
연기	3.7	3.4	3.4
부여	3.9	3.5	3.3
서천	3.8	3.4	3.3
청양	5.6	4.3	4.0
홍성	3.9	3.1	3.1
예산	4.9	3.7	3.5
태안	4.1	3.5	3.4
당진	4.4	3.8	3.8
평균 요구도	4.4	3.8	3.6



고 나머지 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약간 필요도를 나타냄

- 금산은 적절한 개발유도(5.4)가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가로변 대규모 단일용도 입지제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약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룡의 경우에는 적절한 개발유도(3.5)로서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4) 활동의 균형성

활동의 균형성에 대한 평균 요구도를 살펴보면 4개 세부항목 평균 4.5로 필요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전시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이용활동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로 활동균형성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가로활동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설문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세부항목별 요구도에 있어 중심 가로활동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4.7), 주야간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가로조명 시설의 정비(4.4), 업무·주거·상업 문화시설 복합화(4.3), 매력적인 가로편의 시설물 설치 정비(4.2) 등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기 설문 요구도는 시군 가로환경이 최소한의 활동균형성을 확보하는 편의시설과 안전성 확보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어, 가로의 공지를 이용한 휴게시설 확충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조명시설 등의 확충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매력적인 가로편의 시설물 설치 정비 요구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필요성이 없기 보다는 아직 시군의 가로환경이 매력적인 시설물을 요구할 만큼의 기반수준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

특히,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인 계룡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도(5.8)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1〉 활동의 균형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업무,주거,상업, 문화시설복합화	매력적인 가로편의 시설물 설치정비	가로 조명 시설의 정비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
천 안	5.2	5.3	5.3	5.4
공 주	4.5	4.6	4.5	5.0
보 령	3.7	3.4	3.6	4.0
아 산	4.6	4.4	5.0	5.2
서 산	4.3	4.4	4.2	4.5
논 산	5.5	5.3	5.3	5.7
계 룡	3.3	3.1	3.3	5.8
금 산	5.4	5.6	5.0	5.3
연 기	3.7	3.4	3.7	3.9
부 여	4.0	3.8	4.1	3.8
서 천	3.5	3.4	3.7	3.8
청 양	5.1	4.9	5.0	5.2
홍 성	3.9	3.5	4.4	3.8
예 산	4.2	4.4	4.7	4.5
태 안	3.8	3.9	4.1	4.0
당 진	4.3	4.5	5.1	4.6
평균요구도	4.3	4.2	4.4	4.7

| 매우필요 | 필요 | 약간필요 | 보통 | 약간불필요 | 불필요 | 매우불필요 |
7 6 5 4 3 2 1 0

(5) 접근성

도시재생을 위해 접근성 확보는 용도의 다양성 증진 등 전체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요구도가 4.5로서 가장 요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세부조사항목별 평균요구도를 보면 대중교통시스템확충 4.9, 주차장 확보 4.8, 가로 안 내판 정비 4.3, 버스/택시 정류장 설치 4.1로

서 중요도를 보였다. 특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시스템 확충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군별 세부항목별 요구도는 가로환경과 여건에 따라 항목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접근성 개선의 기본방향과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군별 세부항목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논단 2

- 천안은 주차장 확보(5.8), 가로안내판 정비(5.5)에 대해 필요도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논산(6.0)과 서천(5.6)의 경우 주차장 확보보다는 대중교통시스템 확충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금산은 접근성에 대해 충남 시군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평균 5.6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항목별로는 주차장 확보(6.1)가 가장 시급하며, 다음으로 가로안내판 정비(5.8), 다음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청양은 주차장 확보(5.3), 가로안내판 정비(5.0)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당진은 주차장 확보(5.6), 대중교통시스템 확충(4.7), 가로안내판 정비(4.3) 순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12〉 접근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대중교통 시스템확충	버스/택시 정류장설치	주차장 확보	가로 안내판 정비
천안	5.2	5.0	5.8	5.5
공주	4.7	4.6	5.3	4.9
보령	3.7	3.5	4.0	3.4
아산	4.7	4.5	5.2	4.6
서산	4.5	4.1	5.5	4.5
논산	6.0	3.5	4.8	5.2
계룡	3.4	3.2	4.3	3.2
금산	5.4	5.1	6.1	5.8
연기	3.8	3.5	4.0	3.5
부여	4.0	5.1	4.0	3.7
서천	5.6	3.7	3.9	3.5
청양	4.5	4.1	5.3	5.0
홍성	4.3	3.7	4.0	3.6
예산	4.5	4.2	4.8	4.2
태안	4.1	3.7	4.5	3.9
당진	4.7	4.3	5.6	4.5
평균요구도	4.9	4.1	4.8	4.3

매우필요	필요	약간필요	보통	약간불필요	불필요	매우불필요	
7	6	5	4	3	2	1	0

(6) 기능적 연계성

도시재생과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의 주요시설에 대한 연계성 확보 요구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평균 요구도 4.3을 보여 필요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보행 장애 시설물 정비(4.4), 적정 보도 폭 확보(4.4) 등이 조사되었다.

- 이 설문 조사 결과는 단순한 요구도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시군 가로의 물리적 기반환경이 요구항목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음

특히, 당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 보도 폭 확보(5.2)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보행 장애 시설물 정비(5.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기능적 연계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주요시설간 보행동선체계구축	보행장애 시설물정비	적정 보도 폭 확보	횡단보도 폭, 간격, 주기조정	가로 안내판 정비	무단 주정차 억제
천 안	5.4	5.4	5.2	5.2	5.3	5.0
공 주	4.5	4.8	4.9	5.0	4.8	4.8
보 령	3.5	3.6	3.8	3.6	3.3	3.8
아 산	4.9	5.0	4.7	4.5	4.4	3.7
서 산	4.4	4.5	4.2	4.3	4.4	4.1
논 산	5.3	5.2	5.1	5.2	5.1	5.3
계 룡	3.2	3.2	2.9	3.1	3.2	3.5
금 산	5.4	5.7	5.2	4.8	5.4	5.6
연 기	3.5	3.6	3.9	3.5	3.4	3.6
부 여	3.6	3.8	4.1	3.6	3.7	4.0
서 천	3.4	3.5	3.9	3.8	3.5	3.8
청 양	4.9	5.2	4.6	3.9	4.7	4.9
홍 성	3.4	3.5	4.0	3.7	3.7	3.7
예 산	4.3	4.9	4.9	4.5	4.3	4.5
태 안	3.8	3.9	4.4	3.8	3.7	3.7
당 진	4.7	5.1	5.2	4.7	4.4	5.0
평균요구도	4.3	4.4	4.4	4.2	4.2	4.3

매우필요 | 필요 | 약간필요 | 보통 | 약간불필요 | 불필요 | 매우불필요 |
 7 6 5 4 3 2 1 0

(7) 정체성

도시재생을 위해 가로 정체성에 대한 평균 요구도는 4.0으로서 다른 5개 항목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다..

- 반면, 전문가 조사에 있어서는 정체성 확립이 전체의 19.6%로서 가장 높게 나왔음.
-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재 시군 가로는 정체성을 논할 만큼 기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선항목에 더 많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

문가 입장에서는 가로환경의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있는 가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시군별로는 금산(5.2), 논산(4.9), 천안(4.6) 등의 순으로 정체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가 조사되었으며, 항목별 평균 요구도를 살펴보면 가로변 간판정비(4.2)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독특한 가로시설물 설치(4.1), 역사·문화적 건축, 시설물 보존정비(4.0)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가로 정체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역사문화적 건축, 시설물 보존정비	건축입면 정비 및 색채 통일	독특한 가로 시설물 설치 (포장,가로수등)	가로변 간판 정비	가로이벤트 등 행사개최
천 안	4.6	4.2	4.7	5.2	4.4
공 주	4.5	4.1	4.1	4.6	4.2
보 령	3.2	3.4	3.5	3.5	3.6
아 산	4.0	3.6	4.1	4.2	4.3
서 산	4.1	3.7	4.4	4.3	4.1
논 산	5.3	4.5	5.2	5.2	4.5
계 룡	3.3	3.2	3.0	3.2	3.4
금 산	5.5	5.1	5.3	5.5	4.7
연 기	3.4	3.4	3.6	3.7	3.4
부 여	3.7	3.6	3.9	3.7	3.7
서 천	3.2	3.3	3.6	3.6	3.4
청 양	4.2	4.0	4.7	4.7	4.0
홍 성	3.3	3.3	3.5	3.6	3.6
예 산	3.9	3.5	4.2	4.4	4.1

〈표 15〉 가로 정체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요구도

구분	역사문화적 건축, 시설물 보존정비	건축입면 정비 및 색채 통일	독특한 가로 시설물 설치 (포장, 가로수등)	가로변 간판 정비	가로이벤트 등 행사개최
태안	3.5	3.5	3.4	3.5	3.6
당진	4.0	3.8	4.6	4.2	4.1
평균요구도	4.0	3.8	4.1	4.2	3.9

IV. 결론

충남 가로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문가 평균 만족도는 2.6으로서 이용주민 평균 3.2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충남지역의 시군 가로환경이 타 지역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둘째 주민들은 전문가 집단보다는 만족도는 높지만 요구도가 높아 가로환경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해 가장 개선 요구도가 높은 것은 기존 가로와 연계한 접근성 확보(4.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활동의 균형성 확보(4.4), 용도의 다양성 및 기능적 연계성 확보(각 4.3), 컴팩트한 가로환경 조성(4.2), 적합한 규모의 개발 및 정체성 확보(각 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서 시·군의 중심가로는 전체적으로 쇠퇴하며,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활

동의 균형성 확보와 증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재생과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과제 7개 항목에 대해 평균 요구도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역별·항목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각각의 도시 및 가로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기본방향은 일관되게 적용하되 세부적인 추진사업은 지역에 따라 시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천안시는 적합한 규모의 개발보다는 접근성개선(5.4), 기존 가로 활동의 균형성 확보(5.3), 기능적 연계성(5.3), 컴팩트한 가로환경조성(5.2) 등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내고 있어 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
- 보령시의 경우 기능적인 연계성 확보(4.4)와 함께 용도의 다양성을 증진(3.8)시키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음
- 금산군은 접근성(5.6)확보가 가장 필요한

충남논단 2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능적 연계성(5.4), 활동의 균형성 확보(5.3)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양군은 가로에 있어 전체적으로 활력이 저하된 상태로서 활동의 균형성(5.1) 등을 확보와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기타 콤팩트한 가로환경 조성(4.9), 접근성 개선(4.7)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홍성군의 경우 활동의 균형성, 용도의 다양성, 접근성 등의 개선을 추진
- 예산군의 경우 기능적 연계성을 개선하고, 활동의 균형성을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
- 당진군의 경우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콤팩트한 가로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추진

〈표 16〉 7개 항목별 지역 요구도

구분	용도의 다양성	컴팩트한 가로환경	적합한 규모의 개발	활동의 균형성	접근성	기능적 연계성	정체성
천안	5.0	5.2	4.6	5.3	5.4	5.3	4.6
공주	4.2	4.7	3.9	4.7	4.9	4.8	4.3
보령	3.8	3.7	3.6	3.7	3.7	4.4	3.4
아산	4.7	4.2	4.1	4.8	4.8	4.5	4.0
서산	4.2	4.2	3.9	4.4	4.7	4.3	4.1
논산	5.2	5.0	4.8	5.5	4.9	5.2	4.9
계룡	3.9	3.3	3.4	3.9	3.5	3.2	3.2
금산	5.0	5.2	4.9	5.3	5.6	5.4	5.2
연기	3.7	3.7	3.5	3.7	3.7	3.6	3.5
부여	3.8	3.9	3.6	3.9	4.2	3.8	3.7
서천	3.7	3.5	3.5	3.6	4.2	3.7	3.4
청양	4.4	4.9	4.6	5.1	4.7	4.7	4.3
홍성	3.9	3.5	3.4	3.9	3.9	3.7	3.5
예산	4.4	4.4	4.0	4.5	4.4	4.6	4.0
태안	3.9	3.7	3.7	4.0	4.1	3.9	3.5
당진	4.2	4.8	4.0	4.6	4.8	4.9	4.1
평균요구도	4.3	4.2	4.0	4.4	4.5	4.3	4.0

매우필요 | 필요 | 약간필요 | 보통 | 약간불필요 | 불필요 | 매우불필요 |

7 6 5 4 3 2 1 0

참고문헌

- Cy Paumier, "Creating a Vibrant City Center - Urban Design and Regeneration Principles", Urban Land Institute, 2005.
- 임준홍, 이정수, 김진경,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실태와 활성화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2006.
- 정은옥, 양우현, "상업가로의 활성화 요인 분석 - 명동 중앙로, 이대앞 패션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사례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현영,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연세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권대환, 윤은호, 채병선, "중심시가지 상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시 고사동 "건교싯은거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 정수진, "가로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본 도쿄시의 주요가로를 중심으로 - ",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6호 Vol.17 No.2, 2005.
- 이화연, 박소현, "구도심 근린상업가로(Neighbourhood Main Street)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서울형 모델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
- 신종진, 김태엽, "도시재생을 위한 일본 지방도시의 중심시가지 정비수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5호(통권223호), 2007.
- 강동진,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적 중심가로 재활성화 방법 분석 -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4호, 2007.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자족성 및 주변지역과 연계방안*

임형빈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I. 서론

1989년 충남도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후 18년 만인 지난 2007년 7월 도청이전 신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충남지역의 최고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충남의 지방행정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러한 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서북부권의 지역 발전축을 지역의 내부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세종시 건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태안기업도시 건설 등 21세기 국가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활동 측면에서도 충남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7%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충남의 제조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국민경제 및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 경제권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측면의 입지적인 잠재력과 중국과의 교역증대로 중심도시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북부 지역에 설비 투자의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은 연평균 8.85%씩 성장하였으며, 그 중 충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1%에서 2000년 6.9%, 2006년 9.4%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도내 각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이 1995년 71.4%에서 현재 8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타 권역의 제조업 생산액 격차는

* 본 원고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기반 산업구조 형성 및 인근 도시와 연계발전 전략연구'(신동호, 임형빈 외, 2008)를 수정·보완한 것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충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북부권의 산업 집중현상은 지역 내 공간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거점도시의 편향적 발달에 기인한다. 그 결과 정부축 및 서북부 지역으로만 지역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도내 권역별 인구 및 경제규모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는 불균형한 지역 발전축을 충남지역의 내부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확산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청 신도시는 행정서비스산업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생산 및 소비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이 필요하다. 건설예정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충남의 수위도시로서 위상에 걸 맞는 산업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도시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입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도시 내 지속적인 생산 활동으로 고용과 인구가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경제적으로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과 연계발전 및 파급효과도 주요하게 기대되며, 물리적·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권 분석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권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주변지역의 영향권과 건설 후 영향권 범위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중심지의 영향범위는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최상위 중심지의 영향권 범위의 변화는 다음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계획인구가 10만 명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건설은 건설 전 기존의 도시 영향권과 비교하여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출된 수요 변화¹⁾는 영향범위 내의 수요인 172,703명과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자체 담당수요인 계획인구 100,000명의 합인 272,703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

1) 본 연구에서 수요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수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는 통행(목적통행)이 변화를 의미함.



〈그림 1〉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지의 시장영역

신도시의 계획규모는 인구 10만 명이지만 도시의 영향권을 고려하면 기능적, 물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도시기능의 수준은 25만명 정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이것은 고용, 공공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규모에 의한 내부수요 규모와 모도시와의 거리, 도시의 생산기능,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Ⅲ. 도청 이전 신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

1 자족도시의 개념 및 적용

일반적으로 자족도시란 도시인구 규모에서 적합한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도시

1) 인구규모

도시의 자족성은 도시의 인구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도시규모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부수요와 도시 규모에 따른 경제

(scale of economy)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그 결과 도시의 자족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인구규모가 최소한 20~30만 명이 되어야 한다(안건혁, 1997). 그러나 지방도시의 경우 현재 인구의 정체 또는 지속적인 감소가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즉, 수도권의 경우와 같이 계획인구가 20~30만 명인 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의 신도시는 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규모가 설정되어야 한다.

2) 모도시와의 거리

신도시의 경제적인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도시로부터의 거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도시의 경제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이 모도시로 흡수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신

도시 사례조사에 의하면, 침상도시(또는 주택도시)는 모도시와의 평균거리가 약 25km정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 주변의 자족적 도시는 모도시와의 평균거리가 30k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기조, 1997). 런던 신도시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들은 주요 통근권 주변부, 즉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주변의 신도시들은 초기에는 자족적이었으나 교통시설의 공급 및 발달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도시의 자족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영국도시농촌계획학회,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도시와 신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이 신도시의 자족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큼을 가리킨다. 접근성의 향상은 바로 모도시와 신도시 간의 거리가 통행측면에서 볼 때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도시와의 거리는 도시의 자족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신도시에 있어서 모도시와의 거리는 수도권의 경우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표 1〉 국내외 신도시의 모도시와의 거리

구분	침상도시(주택도시)	자족도시
해외	일본: 25km	영국: 30.7km
	미국: 25.5km	미국: 37.3km
국내	21.7km	-

면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수도권내 서울과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주변지역에 미치는 도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모도시와의 관계가 자족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적절한 기능을 도입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와 달리 지방 신도시는 주택공급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도시의 생산기능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 내 고유한 생산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말해, 도시 내 생산기능이 없을 때 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도시 내에 생산기능이 없다는 것은 바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요를 전적으로 도시 외부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도시경제는 매우 취약하며 영세한 경제가 될 우려가 있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는 바로 도시의 생산기능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내 생산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은 도시의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신도시의 경우 도시 내 고유한 생산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도시의 자

족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4) 도시환경

도시의 쾌적한 환경은 도시민의 높은 효용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 인구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은 다양한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시 경제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 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내 사회간접자본과 복지 환경 등과 같은 인문사회 환경이 신도시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요건

우리나라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신도시가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규모와 모도시와의 거리 등은 기존 우리나라 신도시 요건과는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본요건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요건과 비교하면 기존 우리나라 지방 신도시의 인구규모는 10~15만 명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표 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요건

구 분	경제활성화 기본요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기존 신도시	지방 신도시	
인구규모	약 20~30만 명	약 10~15만 명	약 10만 명
모도시와의 거리	30km 이상	30km 이상	모도시 없음 (대전으로부터 70km)
도시의 생산기능	도시내고유한 생산기능 보유	도시내 고유한 생산기능 보유	행정서비스 중심
도시환경	쾌적한 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 문화 및 복지 시설 확보	100인/ha의 인구밀도와 26.2%의 녹지율로 계획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 커뮤니티를 중심의 문화 복지시설 계획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공사, 2005). 그러나 지방 신도시와 모도시와의 거리에 따른 자족성 확보 여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지방 신도시들은 모도시의 주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기 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설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인구규모, 모도시와의 거리, 도시의 생산기능, 그리고 도시환경 등 지방 신도시로서 도시 경제활성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 전략

자족성 확보의 기본방향별 공간차원의 세부 전략을 제시하면 〈표 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공간 전략을 종합하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공급, 지역 내 특화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조성, 대외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시설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공급 그리고 쾌적한 주거 공급 및 녹지·편의 시설 공급과 양질의 교육시설 공급 등이 있다.

그리고 자족성 확보 기본방향별 비공간차원의 세부전략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세부 비공간전략을 종합하면, 먼저 지역 내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계획,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의 질 향상 방안 수립,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대외 도시 홍보 계획 수립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있다.

〈표 3〉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의 공간전략

구 분	자족성 확보를 위한 방향	세부 공간전략
본방향 #1	·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첨단산업단지 공급 및 첨단산업체 유치 유도
본방향 #2	· 지역특화산업육성 · 대외 접근성 제고	· 특화단지조성 · 교통시설 공급
본방향 #3	· 도시생산기능개선	· 도시기반시설 공급
본방향 #4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공급	· 주거및 녹지·편의시설공급 · 질 높은 교육시설 제공

〈표 4〉 자족성 확보를 위한 비공간전략

구 분	자족성 확보를 위한 방향	세부 비공간전략
본방향 #1	· 지방세 감면 · 기금 마련 및 자금 융자 · 핵심 유치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본방향 #2	·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산·학·연 협력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도 ·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본방향 #3	· 중앙정부의 지원예산확보 ·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 · 직업훈련 및 근로자 복지향상	· 일자리창출 및 노동의 질 향상 방안 수립 ·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 대외 도시 홍보 계획 수립
본방향 #4	· 적극적인 지역 홍보 정책 마련	· 이벤트행사 개최

IV.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방안

1. 기능적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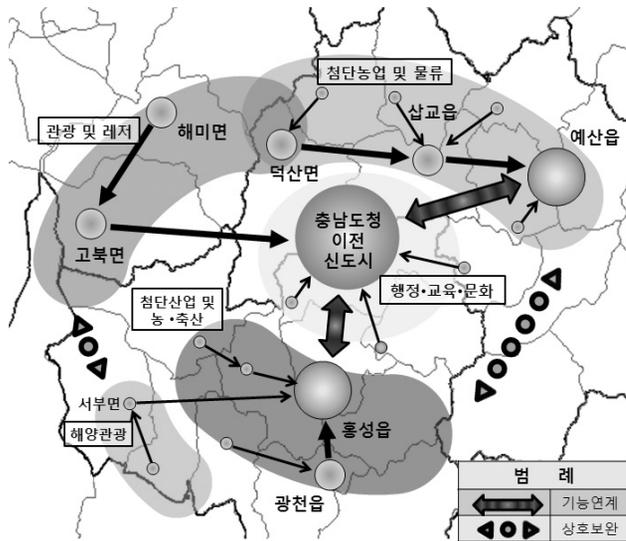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

은 도시는 주변 대도시나 인근 중·소도시와 적절한 관계를 통해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도시의 기능 중에서 상위기능은 집적이익과 임계규모 등에 따라 입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작은 규모의 도시에는 기능의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도시의 경우 자족성 확보가 아닌 도시간

의 기능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상호 보완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의 일관성 유지, 기존 생활권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지역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의 도시 특성을 살려 광역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주변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특화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력공급, 그리고 주변지역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통으로 특화된 산업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로서, 구체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과 농업 등의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는 기존 상위계획과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특화 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 및 주변 지역 간 협력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 방안

위의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홍성군의 경우 첨단산업기능 및 농축산물의 가공·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서해안권 일대의 해양과 관련된 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군의 경우 첨단·환경농업 중심의 첨단·생태 농업기반산업을 구축하고, 고속도로·철도 등의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된 유통·물류기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지상 계수를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에 공통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과 농업 및 임업 등이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과 BT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첨단산업 육성과 고속도로 및 철도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활용한 농축산 물류단지 건설 및 활성화 등으로 첨단산업과 농업 그리고 물류산업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특화 산업에 대해서는 광역공간체계 및 기능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생산기능의 집적 입지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특화산업과 관련시설에 대한 계열화 및 연계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이들 지역에 대

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지역의 특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로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상위등급의 중심지로서 각종 문화·복지서비스를 주변지역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충청남도 이전 신도시 건설은 단순히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주택공급으로서의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의 최고 행정기능을 갖는 도시의 건설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서북부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도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간적 변화에 따른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권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으로 25만 정도의 도시위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

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로 자족성의 개념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하여 도출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와 비교하여 자족성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자족성 확보 전략을 공간적 측면과 비공간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을 살펴 보았다. 특히 기능적인 연계를 모색하였으며 이때 산업측면에서 기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족성 요건은 생산과 소비가 도시 내에서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내 산업 단지의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건설 초기 인구 유입수요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촉매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박기조, "신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 성준용, "Berry and Garrison의 중심지 계층성에 관한 견해", 한국도시지리학회, 2001.
- 안건혁,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 대한주택공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사례 조사분석 연구」, 2005.
- 충청남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2008.
- 홍성군, 「홍성통계연보」, 2007.
- 예산군, 「예산통계연보」, 2007.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7.
- 통계청, 「사업제기초통계보고서」, 2007.
- 통계청, 「지역계정」, 2007.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만들기, 오부세정

유학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오늘날 일본농촌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쇠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농촌경관유지·관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등 각종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시책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전통, 국민소득, 농촌생활환경 정비 수준, 주민참여의식, 지역 리더의 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와 시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시사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해외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선진사례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만들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있었다. 출장은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의 나가노현(長野県), 군마현(群馬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자치단체를 둘러보았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 나가노현 오부세정(小布施町)의 지역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사례지역의 개요

나가노현에 속한 오부세정은 ‘밤과 북제(北齋)¹⁾와 꽃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인구는 약 1만

1) 북제(1760-1849)는 일본의 유명한 풍속화가이며, 1844년부터 1848년까지 오부세정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 당시 그린 작품들을 비롯한 많은 그림들이 오부세정 시내에 건립된 미술관인 북제관에 전시되어 있다.

2,000명이며, 면적은 19.1km²으로 나가노현의 정(町) 가운데 가장 면적이 작은 곳이다.

예부터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었으며, 에도(江戸)시대 후기에는 오부세정을 가로지르는 강을 이용한 해운과 육로를 통한 운송의 중심지로 변창했다. 그 영향으로 부농과 부상들이 다수 출현했고,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유명한 예술가(화가)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오늘날 오부세정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3차 산업부문의 비중이 44.6%로 가장 크다. 주요 농산물은 밤, 사과, 포도, 화훼류이며, 특히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밤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여 밤을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Ⅲ. 오부세정 지역 활성화의 네 가지 포인트

오부세정의 지역 활성화는 ‘지장산업의 활성화’, ‘정병수경(町並修景) 사업’, ‘문화경관 가꾸기’, ‘꽃의 마을 만들기’ 라는 네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장산업의 활성화

오래 전부터 오부세정은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난 밤이 지역의 특산물이며, 밤을 이용한 과자 및 떡 등 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가공품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이 지역의 중요한 지장산업의 하나이다. 현재 오부세정에서는 7개의 회사에서 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여러 개의 밤 가공 회사들 중에서도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 ‘오부세도우(小布施堂)’이다. 오부세도우는 밤을 주원료로 한 소주, 양갱 등의 밤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단순히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부세정의 가로 경관 조성·관리, 지역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지역만들기(마치즈쿠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오부세도우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전통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밤소주’를 만드는 양조장과 상품직매장 등을 개조하여 관람 및 학습공간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오부세의 거리를 구성하는 오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전통적 형태로 개조한 후, 적합한 용도의 지역 공동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는 방문자들을 위한 식당과 여관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을 겸하기도 하였다.

오부세도우는 오부세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한다. 지역 상가연합회·농협 등과 더불어 오부세의 전통적 문화와 경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며,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여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부세정 지역 뿐만 아니라 오부세도우를 홍보하는 그야말로 win-win 전략이 되었다.

오부세도우를 포함한 여러 밤과자 회사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의 90%를 가공 공장들이 매입함으로써 밤의 판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로는 지역 주민들이 회사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림 1〉 밤 가공품의 예

2) 정병수경 사업

정병수경 사업은 오부세정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을 가꾸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1984년부터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아름다운 오부세정 거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에서 건축업과 조경업에 종사하는 몇몇 지역주민들이 선구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밤 가공회사들도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2명의 개인, 3명의 사업자, 행정 등 6개의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어 1989년까지 정병수경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이 토대가 되어 오부세정 행정기관이 경관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지역 활성화 사업에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오부세정의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되었다.

2006년까지 경관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협력 조례에 불과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오부세정 외곽에 맨션 등 고층 건물 짓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행정기관에서는 또 주민들이 집을 신축할 때 행정지도를 하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2004년에 제정된 <경관법>에 맞추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강화하였다.



<그림 2> 정병수경 사업의 예

3) 문화경관 가꾸기

오부세정 활성화의 세 번째 포인트로는 ‘북제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경관 가꾸기’ 활동을 들 수 있다. 1976년 오부세정에 북제미술관이 건립되었다. 오부세정과 깊은 인연을 가진 북제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랑거리를 잘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에 ‘논 한가운데 미술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북제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야심찬 시도였다.

또한 북제미술관 건립은 오부세정이 관광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제미술관 주변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개관하였고 북제와 다른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미술관들은 모두 오부세역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오부세정 중심가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4) 꽃의 마을 만들기

1990년대 초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마다 1억 엔의 교부금이 제공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오부세정의 주민들 100명이 유럽으로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연구를 떠났다. 이는 정병수경 사업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인식이 고취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꽃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이다.

꽃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원은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개방정원(open garden)을 가꾸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정원이란 일반 개인주택의 정원을 누구라도 둘러 볼 수 있게끔 개방시켜 놓은 정원을 말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며, 현재 약 90개의 개방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 개방정원의 예

자동차로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의 도로는 남측 통일 대교~군사분계선(5km), 북측 군사분계선~개성공업지구(5.1km)이었고, 자동차로 1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개성공단에서의 모든 사진은 밖에서 공단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만 허용되었고, 공단에서 밖을 향해 촬영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은 흰색과 초록색의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안에 처진 초록색 철망은 공단에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남한 주민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철망이고, 밖에 처진 흰색 철망은 북한주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철망이었다.

눈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든 산은 들은 바 대로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가 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은 척박한 토양만 남게 되어 식목을 하여도 나무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어린 묘목을 떨감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묘목 뿌리가 착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현지 관계자의 말로는, 공단 토지만 빼고는 모두 남한에서 가져



의류공장 내부 전경



개성공단의 제화공장 내부모습



공장내 주차된 자전거



제화공장 내부 전경

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생산 근로자는 모두 북한 주민이다. 북한의 일반 근로자가 월급으로 2만5천원내지 3만원을 받는데 비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는 약 7만원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매우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개성공단의 인기도 높다고 한다. 공단 내 산업이 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물, 의류, 제화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고 있다. 개성시와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버스 수십대가 이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었고, 일부 근로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은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 물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황해북도 개성시 일원의 총면적 65.7km²(공장구역 : 26 km², 생활·관광·사업구역 등 : 40km²)에 건설비용 2,641억원(기반시설 : 1,51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남북한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07년 12월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기반구축,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동북아 거점 개발 등 3단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표 1〉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1단계 (공단 : 3.3km ²)	2단계 (공단 : 5km ² , 배후도시 : 3.3km ²)	3단계 (공단 : 11.6km ² , 배후도시 : 6.6km ²)
봉제·신발·가방 등 노동집약업종 중심 공단	기계·전기·전자 등 기술집약적 공단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의 복합공업단지
중소기업 우선분양, 중소기업 활로 개척	산업구조 조정, 수도권 연계개발	해외유망기업 및 대기업 유치
남북경협 기반 구축	세계적 수출기지 육성	동북아 거점 개발

현재는 1단계 개발이 진행중이며, 2008년 3월 현재 188필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2단계 개발은 2008년 설계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입주기업을 가동할 예정으로, 공장구역, 상업·생활구역,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51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5,957달러로 증가했으며, 공단에 종사하는 북한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000명에서 22,53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2〉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근로자 현황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08. 3. 20

개성공단건설의 효과로는 첫째,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커다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은 수도권에서 가까워 수많은 남한기업들의 배후 생산기지로써 고임금, 인력난, 노사분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 위치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만큼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개성공단 건설을 동북아 시대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즉, 서울과 인천, 평양과 남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은 동북아 허브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개성공단건설은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민의 정부 이

후 추진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포용정책을 통해 적대적인 군사대치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남북 간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었으나, 북한에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유도하였다.

본고에서는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북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포용정책은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포용정책을 통해 적대적인 군사대치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남북 간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었으나, 북한에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유도하였다.

1998년 이후 정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 3원칙 하에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협의하였고, 그 결과 남북 간 인적의 증대,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 3대 경제협력사업(금강산·로 연결)의 본격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 도모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북한 핵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북핵 3원칙(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해결, 주도적 역할)하에,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남한은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04.9)를 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제1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구현을

목표, 추진방향들 제시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5.12)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대북정책의 3대원칙, 6대 추진방향,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는 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② 상호 신뢰와 호혜, ③ 남북당사자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6대 추진방향으로는 ① 한반도 비핵화 달성, ② 평화와 협력의 조화 병행, ③ 민간자율성 존중, ④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⑥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 속에서 ① 2·13합의 성실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개성공단·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⑤ 이산가족 상시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⑥ 3통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 국회보고 및 국민참여 확대 등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등의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남북교류의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조성렬 2007). 첫째, 참여정부 초기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낙관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북핵문제가 한반도문제의 최대현안으로 남아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에 이전 문민정부의 대북정책 이후 10년 동안 포용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북핵 위기 상황에 맞게 진화시키지 못한 채, ‘채찍’ 없이 ‘당근’에만 의존하는 포용정책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해 ‘퍼주기 논란’을 유발하였다. 셋째, 대북정책이 평화적 관리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변화와 같은 통일지향성이 미비하여 ‘분단체제의 현상유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Ⅲ. 실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구상

1. 인수위 및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경험 원칙

실용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MB독트린과 ‘비핵·개방·300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교정책 전

반을 다른 MB독트린은 ▲전략적 대북 개방 정책,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 기여 확대,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코리아’ 지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할 경우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 기간 중에는 이를 위해 국제자본을 포함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펀드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한편 인수위는 이산가족 상봉과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이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3단계로 협력 사업을 이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셋째, 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 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에 추진한다.

그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대북 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한미공조 및 한·미·일 3각 공조강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북 경협추진의 4대 원칙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이 4대 원칙에 따라 「10.4정상선언」 합의사항 등 참여정부의 대북 경협사업을 ▲우선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으로 구분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

2.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대북분야 국정과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용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개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관계분야 국정과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조성렬 2008, 9-10).

1) 이명박 당선인의 외신기자들과의 회견, 2008년 2월 1일

첫째,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 시장경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등 ‘시장 평화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핵문제와 경제협력의 관계에서 여러 해석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내용만으로는 단정지을 근거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모든 대북 지원과 경제적 협력을 제공하는 조건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북한 1인당 소득 3,000불 달성 지원을 제시하면서도 압박책으로 국제공조와 인내를 제시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수단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로 평화를 산다는 ‘평화경제론’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면 「비핵·개방·3000구상」의 ‘先 비핵화론’은 자칫 평화와 비핵화 모두 놓칠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독립적인 국정과제에서 누락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과제가 오직 비핵화 문제 한 가지로 환원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1995년 문민정부 이래 추진해 온 과제이며, 특히 「9.19공동성명」 이후 지속 추진키로 약속된 과제이다.

〈표4〉 실용정부 남북관계 관련 국정과제

핵심과제 (4개)	중점과제 (4개)	일반과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섬 구상 추진 · 동북아신협력체제 구축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 인권 및 문화외교 강화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통제 추진

3. 실용정부 대북 경험정책의 의미

지금까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대북정책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동용승, 2008). 첫째, 한미공조 우선이다. 한미공조 우선은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룰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부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경협이라는 국내관계를 활용했다. 북한을 테러국가에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남북경협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접근과 속도를 같이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경협과 상호 연계될 수도 있다.

둘째, 경제우선이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면에는 대차대조표에 따라 손익이 분명하게 계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지원을 하다보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점도 기존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에 맞춘 경제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경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북정책의 바탕에는 국정정책 전반에 흐르는 ‘창조적 선진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실용주의’라는 방법론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내정된 대북정책 관련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북한 전문가들 보다는 대부분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부분 북한 전문가였던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및 안보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관계를 풀어나가는 외교문제의 종속변수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외교정책은 “한국의 선진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도 “한국의 선진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비핵·개방·3000’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먼저, ‘비핵·개방·3000’은 연계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고 개방하는 조건에서, 1인당 GNI 3,000불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접근법이다. 즉, 핵시설이 확실히 폐쇄되고 북한이 추후에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조건부 지원구상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북핵 해결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존 경협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문제는 국제적·국내적 상황과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비핵이 ‘3000’의 필수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용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문민정부의 대북경제 협력방식으로서의 회귀를 의미한다. 문민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한데 반하여, 국민정부 이후에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비핵·개방·3000’에서 이전과 다른 점은 ‘개방’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개방”이라는 용어가 남한이 김정일 체제의 와해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북한의 기피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개방은 기업 CEO 경력의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지향적 기본이념과 일치된다. 즉, 남북경제협력을 시장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칙은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타당성이 확인되고 남한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先 타당성조사 後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 시절 제시된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원칙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남북한 경제협력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방”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은 전제의 성격을 지니며, 개방은 “3000”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니며, “3000”은 목적을 나타낸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대북협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3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VI. 향후 대북 경제협력의 방향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이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개혁·개방은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자급자족경제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런데 북한이 시도한다고 여겨지는 경제개혁·개방은 중국의 등소평이 과거 개혁을 시도할 때와는 다른 국제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적 환경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과거의 국제적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구화시대에서의 개방이다. 지구화시대에서 성공적인 개혁·개방을 위하여 과거와는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화(Globalization)의 논리는 시장원리의 전일적인 확산으로 요약된다. 시장경제에서 중요시 되는 윤리는 신뢰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지구화된 시대에서는 경제주체사이의 신뢰, 신용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한 국가 및 해당기업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졌다. 이와 같

은 시장에서의 신뢰는 주로 경제요인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치 및 외교·군사요인의 산물이기도 한다. 정치군사적 요인이 주된 외교활동의 요소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범주 또한 주요 외교의 범주에 포함된 오늘날, 국가의 대외신뢰성은 국가의 외교반경을 넓히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구화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북한도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경제개혁 및 개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자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남한 역시 경제위기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을 위한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외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IMF와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중채무국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특별신탁기금, 홀스트기금, 기술지원신탁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²⁾ 남한 재계는 2000년 4월 12일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 중 남북경협에서 필요로 되는 SOC투자자금 등의 자금조달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자금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관은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들었다. 이 방식으로 SOC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 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겨주는 BOT(bulid-operate-transfer)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조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제개혁과 경제협력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북한에서의 SOC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및 북일 관계가 중요시되며, 특히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태도가 중요 변수이다.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계속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라고 부르면서, 부시행 정부는 북한을 테러국가에 계속 포함시키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 중 하나는 품목규제의 문제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한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상당수 첨단기술분야의 투자나 교역에서 품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품목규제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저해할 것이다.

2) 조명철, 한겨레신문 2005.05.23.

북·미간 신뢰회복은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영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제영역에서의 신뢰도 중요하다. 시장경제에서의 행동양식과 규칙에 합당한 행동을 북한이 보여줄 때,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대외신뢰성은 제고될 수 있다. 지구화시대의 '불량국가'는 테러와 같은 정치·군사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다. 지구화시대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행위를 한다면, '테러국가'로 분류되는 행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테러국가'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테러를 자행한 후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현재 미국무부의 연례 보고서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시리아, 수단, 북한 등 7개국이다. 미국에 의해 지명된 '테러지원국'은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인종청소를 감행하였던 세르비아, 각종 테러를 일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지 않음이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테러지원국' 결정은 미국의 자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는 다분히 미국과의 親疎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포함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자행하였고 또한 테러세력을 지원하였기 때문이지만, '테러지원국'으로 결정된 국가를 보면 하나의 공통된 속성, 즉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과 협력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포함된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배경은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은 이에 합당한 정치·군사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로 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여 남북경제협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제경제기구의 가입이 필요하다. 1999년 북미 간 베를린회담을 통해 수출입은 허용되었지만, 정상관세가 부여되지 않아 북한산 제품의 실질적인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의 가입이 요구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 했던 의도는 이를 설명해 준다.

남북경제협력에서 합의할 제도적 장치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청산결제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쌍무 경제협약을 금지하는 IMF 25조의 의무사항에 의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WTO체제에서 민족내부 간 교역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한의 신뢰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 이외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PEC, IMF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외의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이룩하려면, 북한은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신뢰를 획득하여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점은 북한이 개혁 및 개방의 길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규범을 익힌다는 데에 있다. 시장에서의 신뢰획득은 북한경제주체들의 시장원칙에 합당한 행위의 결과이다. 설령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섰다하더라도 북한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 및 국가경영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익히지 못한다면,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실용정부가 시도하는 북한의 개방은 지난 10년 동안의 ‘피주기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혁 및 개방은 북한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때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면, 실용정부는 대북 경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주의원칙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되었다. 다만 남북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에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여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포용정책은 현실적으로는 ‘先供後得’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先供後得’은 먼저 경제원조를 주고 후에 협력·평화를 얻자는 비동시적 교류이다. ‘先供後得’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하여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개성공단 건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 화해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정책의 지속적인 성공은 ‘주는 측’과 ‘받는 측’의 변하지 않는 여건과 태도에 달려있다. ‘주는 측’의 현실이 여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한 ‘받는 측’의 대답이 ‘주는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먼저 ‘주는 측’인 남한의 여건을 생각해본다.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

있기에 자주 비교되는 동서독과 남북한을 생각하면, ‘주는 측’인 남한의 경제력은 서독의 경제력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남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상당수 남한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근원적인 북핵문제는 오히려 악화된 데 비하여, 북한에 퍼주기만 하였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받는 측’인 북한의 입장은 어떠한가. 남한의 포용정책의 전제는 이 정책이 평화체제의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용정책의 後단계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포용정책은 남한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남한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여 군비증강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는 측’의 사정과 ‘받는 측’의 대응이 ‘先供後得’ 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식량과 같은 인도적인 지원에 대하여는 민족의 관점에서 희생하는 자세로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기타 경제협력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의 기업, 정부가 상호주의적 경제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거하여 무리하게 대북 경제협력을 지속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성공적인 개방도 유도하지 못하고 남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남한의 경제회복은 성공적인 포용정책의 디딤돌이다. 대북 사업에서 이익을 본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는 투자의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뤄질 대북 투자는 아직까지 정당한 투자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2000년 11월 20일 제임스 켈리 태평양포럼 대표의 언급은 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가 아닌 남한의 일방적인 시혜에 의한 협력이었음을 말해 준다.

상호주의원칙은 경제 분야 뿐 만 아니라 군사, 인권분야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북한의 필요성에 의하여 남북한 경제교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인권 및 군사 분야에서는 등한시되었다.

이에 관하여 제기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남한이 군사 및 인권분야에서의 상호주의를 요구하면, 그나마 미미하나마 진전이 있던 화해 및 경제 분야의 교류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이는 先後가 바뀐 논리이다. 먼저 아쉬운 쪽·어려운 쪽에서 협력을 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식량원조, 비료원조, 전력원조 등을 요구한 것은 북한이었고, 이는 북한이 아쉽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단절될 것을 먼저 염려하여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과거의 포용정책은 아쉽게도 어려운 북한이 남한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남한이 북한의 협력을 요청하

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상호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북한과 독일의 수교협상은 대북 관계에서 상호주의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1년 3월 독일과의 수교협상에서 북한은 독일에게 북한 내 활동보장, 언론 취재 활동보장, 원조사업 모니터링, 인권·군사문제에서의 논의를 허용하였다.³⁾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통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받아낸 것은 독일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에 따른 개방·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은 ‘베푸는 자’의 요구를 정당히 제기하였고, 협력이 아쉬운 북한은 기존의 思考를 바꾸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 경제논리의 의한 대북 경제협력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정책에는 정경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좁게는 대북 정책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넓게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정부관계와 민간관계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의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논리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서해에서는 교전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진행되었음은 정경분리원칙을 잘 설명해준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약의 활성화’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며, 기업인의 방북 확대, 투자규모의 상향조정, 경험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의미에서의 정경분리원칙에 정당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경분리원칙은 그 본래의 의도대로 전개되어 왔는가? 좁은 의미에서의 정경분리원칙

3) 2001년 3월 북한은 독일과의 수교협상에서 ① 북한 주재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② 북한내 독일 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독일기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③ 독일원조기관이 원조 진행상황을 직접 시찰하는 자유를 보장하며, ④ 인권·지역안보·군비축소·대량살상 무기 및 로켓기술 비확산 문제를 망라한 군비관리에 대해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은 준수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준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북 경제협력은 주로 기업 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간 경제협력은 남한의 경우 그 주체가 기업이기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접근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역시 경제논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에 의한 남북경제협력도 시장원칙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적 지원과 기업에 의한 경제협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前者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시장원칙보다는 민족애·인간애에서 그 동기가 찾아지는 반면, 後者の 경우에는 기업적·상업적 동기에 의한 교류이기엔 시장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기업의 대북 경제교류는 시장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한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투자 역시 기업의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대북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 경제교류는 민간기업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잘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착수 동기는 차치하고라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시급한 구조조정과정 시기에 진행된 금강산관광사업의 과정은 구조조정과정에서 특혜를 기대하는 기업적 동기와 정권재창출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융합되어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해준다.

이러한 대북 경제협력분야에서 국내에서의 정경연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원칙에 의한 대남한 경제대응이 아닌, 정치논리와 역지에 의한 대응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주었다. 남한기업의 대북 경제교류가 기업의 시장원칙에 의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대 남한기업에 대한 협력과 대응도 시장원칙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 분야에서의 대북한 협력이 시장원칙에 의해 진행될 때, 북한은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원칙을 학습할 기회를 갖으며, 경제개혁과 개방이 정치논리와 역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은 경쟁의식, 효율제고 등 '시장경제 학습기회'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논리를 따르면서 민간 기업이 대

북 경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성, SOC시설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정치적 논리를 중시하는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돌출행동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시장경제체제의 민간 기업에 의한 대북 투자는 기대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북 사업은 적대적인 분단국 사이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배제한 순수 경제협력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필자는 이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적대적인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미의 경제논리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남북경제협력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지 않았다면, 북한은 남북경제협력 및 개혁·개방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개방은 북한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최후의 선택이란 말은 대안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게임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이 최후의 선택으로 개혁 및 개방을 선택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8년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핵심을 이루고 있는 원가·가격·수익성에 대한 개념을 헌법에 도입했다. 이는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 이외의 다른 탈출구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러기에 경제 분야에서의 시장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논리에 의해 대 북한 경제협력이 진행될 경우, 북한당국자의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안정성의 이유로 어느 기업도 대 북한 경제협력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북한이 남북경제협력 및 화해교류마저 파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1992년에 북한은 체제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식량난을 겪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은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즉, 개혁·개방이 식량·에너지문제보다 체제유지에 더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고,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은 이 위기해결에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록 극심한 식량위기를 해결하여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급속히 와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식량과 에너지문제는 북한체제 유지에 중요한 문제이다.

탈냉전과 지구화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남한의 협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북

한당국이 인지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과거와 같이 남북경제협력 및 화해교류를 파기하기는 어렵다.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체제존속을 위해서는(비록 단기적이기는 할지라도) 개혁과 개방이 현실적 대안임을 북한당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의 상황과는 비교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다시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난에 봉착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민간부문에서의 경제논리 적용은 더 이상 북한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V. 충남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향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실용정부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무모한 투자도 어렵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리스트 제출 및 6자 회담의 재개로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호전되다가 갑작스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등 남북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교류는 더욱 어렵다.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통일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남북교류는 통일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남북교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동포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북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향후 남북교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교류에서는 단계적인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초기단계에서는 비정치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된 다음 교류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류의 목적에서도 초기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상호신뢰 구축에 우선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교류사업의 선정이다. 초기에는 충남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이 적절하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초기에는 북한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농업 위주의 교류가 바람직하다.

셋째, 적절한 남북교류 대상기관의 선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서 적절한 교류대상기

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지속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류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동일한 행정계층에 포함되는 북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시기능, 문화예술기능, 경제·기술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관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동용승, "비핵·개발 3000구상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평화재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세미나 자료, 2008.
성태규, "시장의 신뢰와 대북 경제정책", 『신아세아』, 제9권 제1호, 2002.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촉진과제",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2005.
정진상·윤황,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과 과제", 『산업경제연구』, 제17권 제6호, 2004.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세미나 자료, 2008.

서해 포구의 정취와 토굴 새우젓이 있는 발효식품의 본고장, 광천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광천의 과거와 현재



현재 광천읍 전경모습

광천은 조선시대에서 근대까지 서해 내포지역의 어염 집산지였으며, 현재는 토굴 새우젓, 조선김 등의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인구 1만2천의 도시이다.

어염집산, 가공 기능은 용암포구 배후인 용암리 가촌 및 현 중앙시장 부근의 광천시장 등에서 수행되었으며, 1931년 장항선 광천역이 신진리 일대에 설치되면서 절정에 이른다.

1970년대에는 용암포구에 이르는 갯골이 좁아져 폐항이 되었지만, 용암리 가촌의 서비스 기능들은 지역적 관성으로 남아 도로망을 통해 새우젓이 계속 집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광천시장에 새우젓 골목이 대규모로 형성되었고, 1990년대에는 용암리의 광천-보령 간 도로변에 새우젓 판매점들이 대규모로 입지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광천읍의 각종서비스 기능은 광천역과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배후 정주 및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2. 입지 및 자연환경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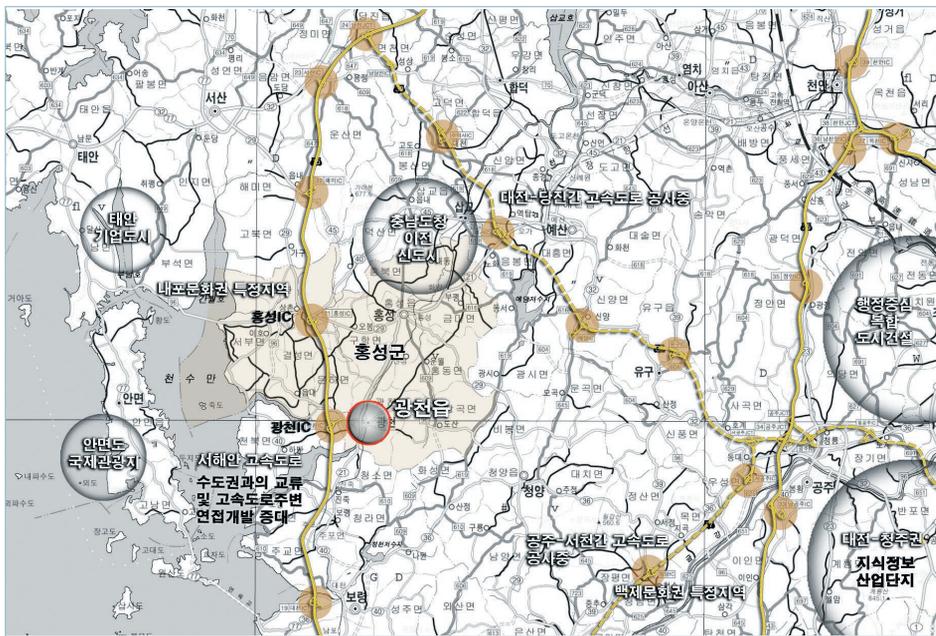
광천은 충남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주변지역의 개발로 발전 잠재력과 충남 서해안권 물류 소통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태안 해양관광권 및 기업도시, 남쪽으로는 보령, 북쪽으로는 충남도청이전 신도시예정지와 접해 있다.

충부권 주요 도시와의 공간적 거리는 대전 72km, 서산 35km, 보령 19km 위치에 있으며, 장항선 철도 및 국도 21호선(보령→광천→천안)이 광천읍 내를 통과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로부터 3.7km대에 있다.



광천읍 위치도



광천 입지 및 주변현황도

지형, 지세 및 수계

광천읍 내 지형은 대부분 낮은 구릉과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남부에는 금북정맥의 최고봉인 오서산(790.7m)이 위치하고 있다. 광천천변 동남방향에 비옥한 농경지인 내죽평야가 전개되고, 상지천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상지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광천읍 내에는 광천천, 상지천, 담산천 등 3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상지천은 읍의 서북에서 서남으로 흐르며 광천천과 합류하여 천수만으로 유입되고, 담산천은 오서산에 근원을 둔 지류로서 읍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광천천과 합류되며, 광천천은 서쪽의 상지천과 합류되어 천수만으로 흐르고 있다.

기상 및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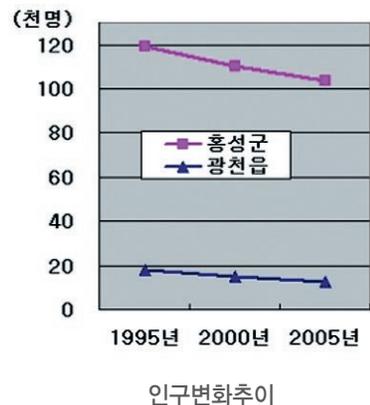
연평균 기온은 12℃이며, 연평균 최고기온은 18.6℃, 연평균 최저기온은 6.6℃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은 전국평균보다 적은('01~'06) 1,280mm이고, 전체 강우량 중 50% 이상이 7, 8월에 집중되고 있다.

3. 인문·사회환경

인구 및 가구

2007년 현재 광천읍 인구는 12,402명(홍성군 인구의 13.7%)으로 홍성읍은('95~'05) 1.6%로 증가하고 있지만, 광천읍의 인구는 연평균 -3.3% 감소 추세로, 1995년 이후 광천읍 인구는 홍성군 소재 읍·면 중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천읍은 2002년도에 노인인구가 16.5%로 고령사회에, 그리고 2005년도에 20.1%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토지이용

광천읍 면적은 35.07km² 이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내 면적은 9.4km²로서 시가화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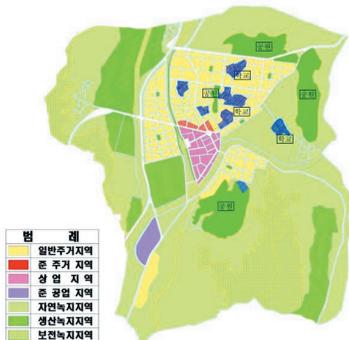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7.6km²(80.9%)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자연녹지지역 면적비율은 5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구 분	총면적 (천m ²)	주거지역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녹지지역			
		계	일반주거	준주거			계	자연	생산	보전
면 적	9,400	1,546	1,511	35	160	93	7,601	5,173	1,338	1,090
비율(%)	100.0	16.4	16.1	0.4	1.7	1.0	80.9	55.0	14.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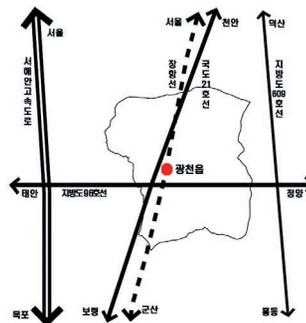
교통

남북간을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1호선(보령→천안), 장항선 광천역 등이 있다. 동서축 교통망은 남면(태안군)-은하(홍성)-광천읍-장곡(홍성)-비봉(청양군)을 연계하는 지방도 96호선 등이 구축되어 있다.

광천읍 시가지 가로망은 광천역과 광천5거리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광천천과 담산천을 따라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광천읍 도시계획현황



광천읍 주변 광역교통망

교육시설

광천읍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가 있으며, 홍성군 전체 학생수 비율은 초등학생의 14%, 중학생의 18.7%, 고등학생의 28.1% 등을 차지하고 있다.

광천 공공도서관은 홍성군에서 두 번째로 큰 공공도서관으로 약 44,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과정별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 치 원	5	6	88
초등학교	6	46	855
중 학교	4	26	650
고등학교	3	39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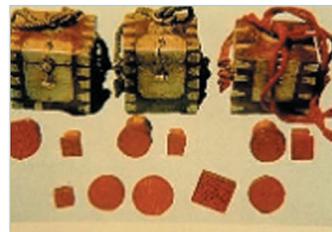
광천공공도서관 현황

대 지	1897m ²
건 평	746m ²
장 서 량	약44,000권
열 람 석	130석
행 사	문화강좌

역사자원

■ 보부상유품, 6군상무사 - 중요민속자료 제30호 지정

6군 상무사는 충남 서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홍성,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상인단체로서, 광천의 6군상무사는 상무사의 업무 일체를 총괄 관할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보부상 유품으로 청금록 등 1괄 34점이 되어 있다.



보부상유품

충남의 도시14 - 광천

■ 땡땡이장 - 충남무형문화재 제31호 지정

땡땡이덩굴 줄기를 이용하여 농촌에서 생활도구로 널리 쓰였던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능을 가진 인간 무형문화재로서, 땡땡이덩굴로 만든 공예품은 1960년대초까지 농촌 생활도구로 널리 쓰였으나 기계제품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현재 이러한 공예품을 만드는 곳은 제주도와 충청남도 등 몇몇 곳에 불과하다.



땡땡이장

■ 응암당산제

당산제는 응암포구가 서해안 해산물의 집산지로 번창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제이다.

현재는 마을과 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산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

■ 관음사·정암사

관음사는 오서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서 광천주민 및 등산객들에게 안식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암사는 백제26대 성왕 3년(서기 527년)에 지어진 절로서 당시에는 10여채의 건물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조선 철종(35대) 2년에 대운선사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금목칠불 4좌가 봉안되어 있다.



정암사

관광자원

■ 수목원 - '그림이 있는 정원' (홍성 8경 중 4경)

광천읍 매현리에 위치한 '그림이 있는 정원'은 2005년초에 개장한 국내 9번째의 사립수목원으로서, 수목원 내에는 50종 6만여 점의 수목 및 화훼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이 있는 정원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통 옷칠가구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서 미술관, 유리온실, 카페테리어,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호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 오서산 펜션

오서산 상담마을에서 운영하는 통나무 펜션으로 5인실 4호, 10인실 2호로 되어 있으며, 펜션 인근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방댐이 있어, 산과 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매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오서산 펜션

자연자원

■ 수변자원 - 담산천, 광천천, 상지천 등

광천읍은 오서산 산자락의 담산천, 광천읍을 관류하는 광천천, 상지천 등이 흐르고 있으며, 광천천에는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 서해안의 해산물과 교역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인 용암포구가 있다.



오서산 역새플

■ 오서산

광천역에서 직선거리로 약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최고봉의 정상을 중심으로 약 2km의 주능선 역새밭이 장관을 이루며, 푸른 서해바다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산이 높으면서도 험하지 않고 골이 깊고 수목이 울창하며 물이 맑고 약수터가 곳곳에 있어 등산지,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오서산 관광객 현황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관광객수(명)	42,927	57,562	76,699	148,610	148,831	317,297	291,406	251,347	28.72%

상업문화

■ 웅암포구

고려시대 물물교환으로 매매가 형성되었던 때부터 광천에는 새우젓 장터가 형성되었으며, 조선 말에는 서해안 일대의 고기잡이 돛배들이 새우를 잡아 거래하는 포구로서 번창하였던 포구였으나 현재는 토굴새우 산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웅암포구(옛모습)

■ 광천재래시장

1926년 개설된 광천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적 상업기능을 수행하며 광천지역의 특산물인 젓갈류, 조선김 등으로 특화된 재래시장으로서, 광천역·시외버스터미널·읍사무소 등과 인접하여 광천읍 상업문화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천 재래시장

과거에는 1, 2, 3차 품목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상권 위축에 따라 판매품목이 (토굴)새우젓, 조선김 등으로 점차 특화되고 있다.



토굴 새우젓 산지

■ 토굴 새우젓 산지

행정구역상 광천읍 웅암리에 위치하며 새우젓 숙성을 위한 토굴과 판매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 5일근 무제 활성화로 인한 관광수요 증대,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토굴 새우젓 숙성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굴 새우젓 축제

■ 토굴 새우젓·조선김축제

1996년부터 매년 10월초 3~4일간 김장철 전에 광천토굴 새우젓·조선김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광천의 명

물인 새우젓, 조선김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가요제, 보부상 재현, 요리대회, 풍물공연, 고적대 퍼레이드, 영화제 마당극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인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축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토굴 새우젓과 조선김에 특성화한 축제내용과 프로그램이 없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5. 산업경제

도시 전체 산업인구 중 90%이상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상업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총 취업인구 3,125명 중에서 2차 산업의 종사자수는 643명(20.6%), 3차 산업 종사자수는 2,466명(78.9%)로, 도매 및 소매업·교육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산업구조

(단위: 명, %)

구 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 계
종사자	16	643	2,466	3,125
구성비	0.5	20.6	78.9	100.0

주 : 2차산업=제조업+건설업

자료 : 홍성군, 홍성통계연보, 2007

그러나,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수는 각각 연평균 -5.7%, -3.4%씩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체수는 통신업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수에서는 제조업,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수 외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지역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충남의 도시14 - 광천

광천농공단지 현황

위치	광천읍 신진리
규모(m ²)	144,652
입주업종	전자, 비금속 등
업체수/가동업체	15업체/11업체
종업원수	110명
가동율	73.3%
생산액	14십억원
수출액	4백만불 (러시아, UAE, 남미)

자료 : 홍성군, 2006, 지역경제과

산업부문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농·축산

농산물부문 생산량은 식량작물이 전체의 83%며, 기타 인삼재배, 과실류, 채소류, 엽연초, 특용작물 등의 순이다.

주요농산물 현황

(단위 : ton)

구분	계	식량작물	인삼재배	과실류	채소류	엽연초	특용작물
농산물 생산량	71,705	59,615 (83%)	4,994 (7%)	3,655 (5%)	2,322 (3%)	625 (1.2%)	494 (0.8%)

축산부문 현황은 사육가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사육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축산사육규모의 대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육종은 돼지, 닭이 가장 많으며, 친환경농법을 위해 오리 사육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상업

광천읍 시장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일반재래시장	특화시장	중형할인매장
개소	1	1	1

광천재래시장(공설시장) 내 노점상(점포상인 제외)과 인접한 도로변의 노점상인 수는 총248명이며, 노점상들의 업종분포를 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187개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광천읍 재래시장 현황

구 분	광천정기시장
소재지	광천읍 광천리 230번지
대지면적	24,917㎡
건물면적	5,049㎡
점포수	1,950개
시장특징	187
취급품목	5일장 (4, 9)
상인조직	광천특산물 영어조합법인
주차대수	50대
화장실	3개소
경쟁업체	· Q마트, 흥성젓갈류특화시장, 용암리가로변젓갈시장

광천재래시장 업종 및 상인구성현황

구분	상인수	특 징	상인업종구성
노점상	248명	시장 내 및 인접지역현황	수산(92), 농산(89), 일용잡화(19), 의류신발(18), 음료(13), 축산(6), 먹거리(4), 회원(3), 기타(4)
점포 상인	118명	시장 내 업종별 현황	농산(21), 수산(20), 새우젓(15), 섬유의류신발잡화(15), 건어물(5), 정육·슈퍼(4/30), 기타(20)

자료 : 홍성군, 광천재래시장 재개발 및 활성화 방안, 2007

■ 수산업관련 가공 및 도·소매업

광천읍은 전국 생산량의 7.4%, 생산고의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남의 광천 젓갈류 생산량, 생산고는 각각 91.1%, 56.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젓갈류 생산고 현황

구 분	전 국		충 남		광천읍	
생산량 (M/T)	37,992	100%	3,070	8.1%	2,795	7.4%
생산고(백만원)	163,950	100%	51,374	31.3%	28,876	17.6%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 2006, 관련기관 내부자료

또한, 조선김 생산량, 생산고도 각각 연평균(03~06년) 3.7%, 3.7%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도시14 - 광천

광천읍 수산물가공식품 판매현황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생산량	생산고
젓갈류	1,971	9,967	2,795	1,2059	2,844	8,208	2,948	28,876	14.4	42.6
조미김	599	599	602	602	625	625	668	668	3.7	3.7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

광천에서 생산되는 젓갈류 생산은 새우젓, 멸치젓, 조개젓, 굴젓, 황석어젓 등 순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고 또한 새우젓이 다른 전체 젓갈 판매금액의 약 8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수산물가공식품 판매지 현황

광천에서 수산물관련 유통의 대부분은 읍내의 광천재래시장, 웅암리에 위치한 토굴새우젓 판매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광천재래시장에서는 1, 2, 3차 품목을 종합적으로 판매하였으나, 새우젓, 조선김으로 점차 특화되고 있다.

토굴새우젓 판매는 광천읍 재래시장, 특화시장, 그리고 웅암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웅암리의 토굴새우젓의 숙성을 위한 지하동굴은 총 25개로 대부분 웅암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저장 규모는 연간 약 20,000드럼의 새우젓을 숙성시킬 수 있다.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

6. 발전과제

광천은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산물 등 전국적 경쟁력과 인지도를 가진 향토산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에 유리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재래시장의 침체, 향토산업 낙후로 지역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부재 및 교육기능 약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력있는 도시기반시설 부족은 도시적 개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홍성군과 광천읍에서는 다섯 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 특화산업(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산물) 육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둘째, 토굴새우젓산지·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정비

넷째, 지역특산물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

다섯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 다섯 개의 과제는 소도읍 등 중앙정부와의 연계사업 및 홍성군, 광천읍 및 주민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천읍을 서해지역의 선도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28회 금산인삼축제

마당 열어라 하늘선물 '금산인삼' 나가신다~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참 오래되기도 했다.
 어지간한 사내아이, 태어나 대학에 입학한 후 졸업해 직장인이 되었을 만큼 역사가 깊은 축제였다. '금산인삼축제'는 올해로 스물여덟 번째를 맞는다. 1981년 10월 1일, 2일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 주관으로 제1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한 후 오늘에 이른다.



인삼축제의 유래를 설명한 글을 보면 이 역사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 남쪽으로 금산이요, 북쪽으로는 개성이다. 일제 강점기 인삼신사를 건립하고 매년 10월 상달 길일을 택해 삼엽계 원로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올리고 제등 시가 행렬과 폭죽 행사 등을 펼쳤다. 이 때 개성처럼 '인삼신사'까지는 건립하지 않았지만 금산에서도 개별적으로 '삼장제'라 하여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돌아오를 때 이 고장에 인삼을 재배토록 허락해 준 산신령에게 감사하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인삼축제의 기원을 이 때로 본다면 이제 족히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일제강점기에 제를 올렸다는 것이 좀 거슬리지만 그만큼 '인삼'을 여느 작물과는 달리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다. 최상품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6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니 신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사함을 기원해야 했으며,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인삼을 키우는 땅과 하늘에 어찌 감사함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민참여 끌어낸 본무대

가을햇볕이라고 하기엔 여름햇살의 그 독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8월 마지막 일요일, 금산을 찾았다. 축제장을 찾아가는 도로에서 벌써 축제가 한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꽉 막힌 도로는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최 측에서 임시로 마련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인삼축제가 한창인 금산인삼관 광장으로 접어들었다. 안내 텐트에서 팸플릿 몇 장을 챙겨 들고 광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첫 느낌은 2006년 인삼세계엑스포를 개최하며 개발한 콘텐츠와 역량을 축적한 축제라는 점이었다. 인구 5만 명 남짓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열고 있는 축제 치고는 짜임새도 갖춰졌고 최소한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언뜻 콘텐츠가 너무 다양해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라는 정체성을 잘 살리고 참가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지능적 배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 초입에 중심무대에서는 각 읍면별로 날을 정해 행사를 무대에 올리는 모양이었다. 8월 31일은 군북면민의 날이었다. 그날 중앙무대는 군북면 주민들 차지였다. 지역 주민들이 자칫 소외되고 외지인들의 잔치로 끝나기 십상인 특산물 축제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고도의 전략이었다. 중앙무대는 잠시 후 '전국인삼요리 경연대회'장으로 탈바꿈했다.



건강체험관 인기몰이

다양한 상설운영관에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각종 체험관은 표를 받아두고 한참 줄을 서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 중 건강체험관은 홍삼족욕, 홍삼팩마사지, 발마사지, 인삼스킨 만들기, 인삼비누만들기 등 인삼과 각종 약초를 이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관심을 모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 혈압측정 등 개인 건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높였다.

체험관에 약초향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무료 한방처방 및 뜸, 수지침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모습도 보였다. 일부 체험의 경우 약간의 참가비를 받았지만 몰려드는 참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금 체험관도 흥미로웠다. '대장금 금산 수라간'이라 이름 붙은 그곳에서는 시간대별로 갓 만들어 내 놓은 떡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수라를 받는 왕과 왕비의 복장을 갖춰 입고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해 역시 긴 줄을 만들어 놓았다.

꼬마참가자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말타기, 힘겨루기 등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놀이기구는 꼬마참가자들이 축제를 지겨워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등 공신이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이런 놀이기구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끌어들이고 해를 거듭하면서 이들이 계속 발걸음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였다. 부리면 선원리에서 개최한 인삼캐기 행사도 자연학습을 겸한 가족단위 체험행사로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에 축제 '풍성'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인삼교역관이였다. 우리나라에 인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다. 일반 참가자들만을 위한 전시관은 아닌 것 같았다. 9월 1일, 개막한 국제인삼교역전을 겨냥한 전시관이였다.

금산인삼 가공업체 34곳이 참가했고 12개 나라에서 초청된 30여 명의 국외 바이어가 이곳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상담도 나누었다.

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전국 단위 이벤트도 함께 벌였다. 충남도지사기 등반대회, 금산인삼 전국마라톤대회, 외국인 축구동아리 초청 축구대회, 인삼고를 자전거 대행진, 어르신 장기대회,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금산 인삼기 전국 족구대회 등이 모두 이번 인삼축제가간에 함께 열린 이벤트 행사다.

여기에 '파워 존'에서는 전국팔씨름천하장사대회와 줄다리기대회까지 열렸으니 가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와 축제의 어울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축제의 주제는 없다시피 하고 각종 이벤트만 설쳤다면 주객전도를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주제는 이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잘 살아 있었다. 또 금산인삼축제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전국 최대의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가 아니던가?



당귀차에 피로 풀고

몇 바퀴를 돌아도 내리찍는 태양빛만이 부담스러울 뿐 축제현장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인삼 깎기부터 도량체험 소소한 이벤트 등이 끊임없이 그 얼굴을 달리하며 참가자들을 맞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먹거리 장터에서 인삼 비빔밥과 인삼 파전, 인삼 튀김 등 인삼을 첨가(인삼튀김을 제외하고는 인삼의 함량이 아쉬웠지만)한 음식을 먹고 돌아 나오는 길, 무료로 제공하는 시원한 당귀차는 한참을 돌아다니느라 지친 몸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었다.

금산인삼축제는 하늘 선물을 잘 활용해 지역 특산품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공주 허수아비 축제

허수아비에게 새 생명을! ‘창조의 기쁨’ 맘껏 즐겨

공주 허수아비 축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간이 무척 길다. 한 달간 만들고 한 달간 전시하기 때문이다. 재료도 따로 챙길 필요없이 마을에서 다 준비해 둔다.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허수아비를 만들고 싶다면 옷가지나 필요한 것을 챙겨가도 된다.



가을을 앞두고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정안면 문천리, 공주시로 진입해 마곡사 가늘 길로 한참을 가다보니 하나 둘, 허수아비가 나타난다. 깡통로봇을 닮은 허수아비부터 아저씨·아주머니·개구쟁이 아이·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허수아비가 전시(?)되어 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난다. 참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과연 놀라서 도망갈지, 아니면 어깨에 앉아 여유를 부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동네 할아버지의 든든한 응원

사실적으로 잘 그려 놓은 마을 앞 현황판에 따르면 마을엔 모두 78가구 216명이 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은 아니다. 마을회관 옆,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이 허수아비 제작소였다.



어찌할지 몰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사이 마을회관 앞 주택에서 서정식(76) 할아버지가 나온다. “허수아비 만들러 왔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걸로 얼른 만들어요.”

처음엔 그냥 어디 다른 집에 마실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예 주저앉아 허수아비

뼈대를 골라주고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미 앞서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만들어 정자에 기대놓은 허수아비가 많아 그냥 각자 알아서 만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다.

할아버지에게 축제에 대해 묻자, “이게 매년 하는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야 다 일하러 가야 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가 관리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녀. 아주 귀찮아 죽겠어”라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처음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축제 홍보를 보고 찾아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별로 좋진 않았다.

아무튼 그렇게 허수아비 제작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골라준 천을 허수아비 머리 부분에 둘둘 감고 잔뜩 쌓아 놓은 옷 중에 입히기 어려운 것을 골라 몸통도 만들어 주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기면서 가족단위 체험객이 하나 둘 마을에 들어온다.

할아버지의 손길도 바빠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도록 톱질을 해 작은 뼈대도 만들어 주고 제작방법을 일일이 소개하느라 정신없다. 그 모습이 꽤 흥에 겹다.

할아버지는 완성되어 가는 허수아비를 보며 “아이고, 처음 만들어 보는 솜씨가 아닌데...”라며 허수아비 만드는 걸 도와주시며 칭찬도 잊지 않는다. 귀찮고 싫다는 할아버지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좀 씁스러워진다.

우수작품엔 ‘정안 밤’ 선물

“저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제발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 허수아비 도둑이 그렇게 많더라고. 하하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여러번 통을 넣었으나 할아버지는 톱질을 멈추지 않았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 또 오게 되네요. 애기들이 좋아 하니깐요. 철사나 옷가지 등 재료들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전시하는 것도 보아야죠.”

이숙희(32·공주시)씨는 남편을 앞세우고 예쁜 두 딸과 함께 허수아비를 만들러 왔다.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허수아비 만드는 것을



돕는(?) 아이들의 모습이 해맑다. 공주시 허수아비 축제에서 잘 만들면 우수작품을 선정해 집으로 밤을 보내준다. 공주시 정안 밤이야 맛있기로 소문났으니 은근히 기대가 된다.

허수아비 축제에서 만든 작품은 9월말까지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에서 내분리, 약 8km 구간에서 전시한다.

비록 여타의 규모있는 지역축제에 비해 조용하고 조용한 분위기라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축제이지만, 축제를 한번 다녀간 참가자들은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매니아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좀 더 많은 지역민에게 축제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느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충남 축제를 소개합니다

■ 제54회 백제문화제

- 일시 : 2008년 10월 3일(금) ~ 12일(일)
- 장소 :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

백제문화제는 1955년 시작해 벌써 50년을 훌쩍 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다.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700년 대백제의 꿈'이라는 주제로 (재)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백제의 의식주와 금제왕관만들기, 말타기, 활쏘기 등 다양한 백제를 체험할 수 있고, 대백제 기마군단 행렬과 백제문화 퍼레이드 등도 볼 수 있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학술회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홈페이지 : <http://www.baekje.org>



■ 공주국제미술제

- 일시 : 2008년 10월 3일(금) ~ 30일(목)
- 장소 :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임립 미술관
4개국 70여 명의 작가를 초대해 다양한 미술세계를 보여 줄 '공주국제미술제'가 10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실내전과 함께 실외전으로 '물과 조각미술의 만남전,' '백제의 모 습전' 등이 펼쳐진다. 가족과 연인끼리 미술 관람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뭉신 감상할 좋은 기회이다.

홈페이지 : <http://www.limlipmuseum.org/>



■ 천안흥타령축제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 5일(일)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천안역광장, 종합운동장 광장 등

올해로 6회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하는 우수축제다. '다함께 흥겨운 춤을'이라는 주제로 춤 경연과 거리 퍼레이드, 자유공연 등이 펼쳐진다. 춤 공연에는 200여개 팀,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ancefestival.or.kr/>



■ 기타 축제 몇 가지

- 축제명 : 예산사과축제, 연산대추축제
- 일시 : 2008년 10월 중순 ~ 11월 초순 사이
- 장소 : 예산공설운동장 일원, 연산면 일원
가을은 결실의 계절답게 탐스러운 사과, 배, 대추 등 먹거리 축제가 풍성하다. 특히 예산사과축제와 연산대추축제가 대표적인 예다. 각종 체험행사와 오감을 만족시켜 줄 행사들로 가득하다니 가족과 함께 때맞춰 둘러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리라 확신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예산군 홈페이지 : <http://yesan.go.kr/culture/index.jsp>

연산면 홈페이지 : <http://yeonsan.nonsan.go.kr/>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류철희 | 前 충청남도부지사



올림픽 선수단이 개선하던 8월 25일 밤, 서울광장에 모인 관중은 물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모든 국민은 기쁨과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지 목청이 터져라 환성을 올리고 손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됨' 만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늙은이와 젊은이, 배운이와 못 배운이, 잘사는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잔치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뿌듯하게 한 것은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투혼을 불태우며 잘 싸운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 가르기와 패거리 싸움이 그칠 날 없고 오직 이긴 자에게만 박수를 보내 진 사람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던 현실을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날의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개선 국민대축제'는 가슴 벅찬 한 편의 드라마요,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서울 광장에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면 분위기와 열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지난 날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촛불집회 광경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뜻이야 두 집회 참석자들의 가슴에 똑같이 흐를텐데 현장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떨어져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너그러움, 상대가 서로 다름을 받아들

이고 공동선을 찾으려는 지혜로움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남의 떡이 크게만 보일 때 불평과 불만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만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일' 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 이라고 어떤 현인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무지개원리"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가톨릭 신부가 쓴 책인데 대형서점 경제코너에 진열 된 것이 새롭다고 느껴져 한권을 샀습니다. 신부가 쓴 책이니까 종교적인 냄새도 다소 풍기고 성경말씀도 많이 인용했지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일반인, 특히 경영자나 지도층 인사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다 옮길 수는 없고 중요한 원리 7가지를 소개하면

-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2)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 (3) 꿈을 품어라.
- (4) 성취를 믿어라.
- (5) 말을 다스려라.
- (6) 습관을 길들여라.
- (7)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각 항목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 그 내용에 맞는 성경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종교인은 물론, 경영자, 직장인, 학생, 주부들에게까지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추진하고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분의 방식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꿈을 갖되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또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며 초등학교 때 두 번 낙제하고 성적이 달려 일
반대학을 포기하고 사관학교를 지원했으나 두 번 떨어진 끝에 합격했고 정계에 진출해서도
낙선의 쓴잔을 거꾸 마신 끝에 당선한 영국총리 처칠경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침울한 영국민들의 가슴에 "나는 피와 땀과 눈물을 줄 수밖에 없다"
고 호소해 마침내 영국을 승전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이 명연설
을 듣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을 때 그는 관중을 천천히 돌아보며 천천히 한 말은 아주 짝막
한 일곱 마디였습니다.

-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 Never-Never-Never-Never-Never-Never give up

올림픽 개선 축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촛불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정신이 함께 흐를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꿈일까요?

새해 들어 친지들에게 나누어준 덕담이 생각납니다. 책을 읽다가 하도 좋아서 베껴온
내용은 "隨處作主, 入處皆眞" 여덟 글자입니다.

- 언제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모두이고 전부다.

모두가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용웅 | 前연합뉴스대전충남지사장



정부의 성급한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과 쇠고기 수입 반대 국민 촛불 시위, 이로 인해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 국민 신임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일본 수상의 독도 관련 망언과 미국의 독도 표기 오류, 상대방 탓만 하며 헛돌고 있는 국회, 기대에 못 미친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성과, 천정 부지의 고유가에 휘청대는 정부의 경제정책,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부익

부 빈익빈 현상,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갖가지 명목의 세금폭탄 등으로 점차 더 피폐해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수 십년 끊임 줄 모르는 노사갈등과 파업 시위, 대졸자 및 석사 박사 등 고급 인력의 취업난과 고용불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구태를 벗지 못해 의혹만 증폭시킨 삼성비리 폭로사건 수사, 입시문제와 조기 해외유학 붐 등 영어 교육 하나 해결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국민세금 축내며 철 밥통에 안주하려는 일부 무능 공직자들.

이런 유들의 외우내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주소다. 혹자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나라 살림살이를 잘못해 온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의 지도자와 지도층의 탓이 크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과 현행 제도상 권력 감시기능의 맹점 및 여론을 호도하며 국론 분열에 한몫 해 온 언론 등에 그 탓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일리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보다는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못살겠다는 데 맥없이 공론만 일삼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선과 총선을 치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식상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고 국회도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선택,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만큼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허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국민 신임도는 낮 뜨거울 정도로 낮아졌고 여기저기에서 “잘못 선택했다”느니, “배신당했다”느니 원성이 높아 가고 있다. 심지어 퇴진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국민의 먹거리인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서둘러 미국과 협상하는 바람에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설득력이 약하며 조급한 성과주의 내지 지도력 과시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자란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워 바로잡거나 가난과 혈벗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한 토대를 마련한 업적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한 민주화에 기여한 공이 크나 아집과 고집, 독선, 무능 등으로 실정한 면이 적지 않다.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다. 하늘은 천심이요, 천심은 곧 민심이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뜻이다. 비록 투표에 의한 것이지만 지도자는 백성이 뽑아준 것이요, 백성이 뽑아준 것을 하늘이 받아들이는 것인 만큼 지도자가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역대 대통령들은 하늘은 고사하고라도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필자는 위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공과를 지적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은 대통령은 그가 독재자였든 민주투사였든 간에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두려워하겠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광역 및 각 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회의원 또한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어느 정권에서든 한마디로 기대 수준 이하의 평이었다. 혹자는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각종 이권 개입 등에 눈멀어 녹봉만 축내는 이들을 싹쓸이했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주인인 백성은 줄 것 다 주고 뺨맞는 꼴이니 국민들만 봉인 셈이다.

따져 보자.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로 인한 국민저항과 갈등, 일본 수상 독도 자국영토 주장, 미국의 독도 표기 오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평성 논란, 고급 인력 취업난 등의 문제가 정녕 국민들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했단 말인가? 아니면 나라를 책임진 장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삼척동자라도 알 일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격언이 있듯 그래도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으면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지역주의에서 깨어나야 하고 각종 부정·부패·비리, 권력 남용, 독선, 권위주의에서 깨어나야 하고 상생 없는 경쟁 제일주의와 정경유착에서 깨어나야 하며 지역·집단·부처 이기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듯 투명한 국가사회야 말로 정의가 바로 서고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이운형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급등 지속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불거진 경기침체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기업 경기 및 자금사정을 조사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8년 7월 동향 및 8월 전망)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업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자금사정도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 원인이 유가급등 등 국제경기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본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지역 등 각 자치단체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금융은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 중심은 전국적 규모를 가진 대형은행이 되고, 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의 영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스스로가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보 및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기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제품 판로의 체제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자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애용하고 구매한다면 지역경제를 지켜온 향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역제품 판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구매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볼만 하다.

셋째, 중소기업공업단지 재정비 및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산업단지를 확보하여 공급해야 한다. 최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 등 산업단지 관련규제가 대폭 개선되었고,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이탈방지와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넷째, 지역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이 아닌 글로벌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일찌감치 보호막을 걷어내고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진 상태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를 받으며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각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하여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여 중소기업의 사기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혁파,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고통을 분담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성과 정신사의 미래자원 유교문화

이해준 | 공주대 사학과 교수¹⁾



오늘날 일부 문화비평가들 중 유교문화를 부정적으로 매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 등등 유교문화가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은 만약 유교문화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사조로서 과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겠나 하는 점이다. 또 양반 선비들의 충절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 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으며,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이 양반 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충남의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은 결코 보수적·관념적이라고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혁신적이고 강경하여서 보수진영의 강한 견제를 받았다는 점을 대개 간과한다. 만약 조선조의 충청도 선비정신에서 올바르게 본받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부족하고 퇴색된 이러한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을 우선적으로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사편찬위원, 역사문화학회 회장

되찾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오늘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신, 지성사의 올바른 전통을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가치 부여가 아닌가 한다. 전통은 “필요로 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하여 보물처럼 재활용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양반과 선비문화를 연구, 정리, 개발, 활용함에 있어 고려되거나 짚어보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

유교문화는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되었다. 오히려 유교문화는 21세기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사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폄하해서 그렇지 조선 시기는 누가 뭐래도 ‘도덕과 지성’이 존중된 사회였다. <양반 = 선비>의 문화 수준은 적어도 현대 인문학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량, 관심의 폭(문학-정치-사상 종합지식)이 그렇고,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런가하면 그들은 왕도(王道)·도학(道學)·성현 정치(聖賢 政治)를 추구했던 도덕집단이었다. <君子와 小人>의 격을 가르고, 비판(批判)과 공론(公論)을 통한 민의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실천을 중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과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어쩌면 오늘의 지성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될 만하다. 그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사회문화적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 등 제 부면에서 현대인들이 귀감을 삼고 부러워해야 할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인의 부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현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시할 “어른”이 없다고 걱정들이다. 그 대안과 교시를 우리는 충남의 유교문화전통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미래의 경쟁력이 될 유교문화 유산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관심과 자원 활용을 해왔을까? 비평한다면 각개 유적과 인물을 나열하는

수준,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진행됨 등이 지적된다. 향교에 가도 건축구조가 주로 설명되고, 서원에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로 부가되는 인물 설명은 특정 가문 선조의 영웅적 일화가 중심을 이루며, 그 유적의 유교적 가치나 문화의 올바른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크다.

그 같은 비평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① 고증과 자료 정리의 과정 미흡, 생략 ② 후손과 연구자 중심의 권위 과시형(?) 사업 ③ 대규모, 성역화, 추모 중심 논리가 아직도 강함 ④ 조경, 건축 외형 중심의 유적 복원 (H/W 중심) ⑤ 효율적 활용과 자원화의 아이디어 창출 노력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유교문화 유적에 무관심하게 되며, 현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재생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건축물 중심, 가문 중심의 유교문화 확산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양반-선비문화의 정신사적 유적들은 다른 “유형적” 문화자원보다도 훨씬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문화·정신적인 부면에서 미래의 중요한 문화가치가 될 수 있다.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점을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에서는 직시하고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유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서원이나 향교, 고택의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핵심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유교문화의 대상·범위·유형도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기를 기대한다.

지방연구원의 도약(跳躍)을 말한다

박헌주 | 주택도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겸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연구기관이 있다.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지방연구원),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구원, 대학 연구소, 각종 학회, 시민단체 연구소, 개인 연구소 등 형태도 다양하지만, 연구기관 수도 만만치 않게 많다.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그만큼 많고, 모든 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60여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最貧國)에서 10대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는 기적 같은 압축 성장은 이러한 연구기관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이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세방화시대(世邦化時代)이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지방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과거 국책연구기관이 맡았던 국가사회 발전의 두뇌(think tank) 역할을 이제는 지방연구원이 맡아야 할 때이다. 지방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이제 지방연구원의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물론 지방연구원도 천차만별이다. 나름대로 국책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연구체제를 갖춘 기관이 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생색내기 지방연구원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인식하는 지방연구원의 일반적인 수준은 아직 발전도상단계이다. 이는 지방연구원의 노력이 부족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연구원에 대한 인식 부족이 더 크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지방연구원이 미래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몇 가지 공통적 고민이 있다. 예산부족과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 곤란, 그리고 적절한 과제 선정 및 우수한 연구의 질 확보이다. 지자체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종합행정과 지원행정을 다루는 지자체 행정의 특성상 연구 업역(業域)이 매우 넓다. 또한 지원행정에 부응하는 집행적 성격의 연구 수요가 많아 연구진의 전문성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방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등 다른 형태의 연구기관에 비해 독특한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충남발전 연구원의 경우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수요자와의 공동학습 및 협동연구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별 10명이상의 연구 협업자(collaborator) 확보,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선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고객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coaching)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국책 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도 도입해야 할 바람직한 연구체계모델이다.

모든 연구기관은 나름대로의 고객이 있다. 연구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다. 지방연구원은 국가, 도와 시·군 행정뿐만 아니라 도내 주민이 고객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연구원은 연구 인력이나 규모에 비하여 과제수가 많은 반면에 출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은 다른 연구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고객은 당장 활용할 구체적이며 실용적 연구 결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연구진들은 더 나은 처우를 향해 미련 없이 연구원을 떠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경쟁적 시장이 잘 형성된 연구 인력시장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불리한 여건은 우수인력 확보를 더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제 해결 중심에서 문제 제기(問題提起) 기관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혁신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은 고객이 제기한 문제의 실무적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 문제의 해결방안은 관련분야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고객들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지방연구원이 현안 해결에 역량을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조류(global trend)를 바탕으로

새롭게 닥칠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협약(저탄소사회 구축 등), 에너지, 식량, 삶의 질, 여성과 감성의 시대 등은 국제적 현안이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자체의 현안을 찾아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연구는 대부분 시책, 사업구상, 계획 등의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감성과 창의, 상상력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의 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는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등 지역특화 연구 및 집행과정에서의 성과 자문(performance consulting) 연구에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매년 겪는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Global Trend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시대(Female Age, The Age of Women)와 혼합의 시대(The Age of Mix)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은 여성중심의 도시 및 지역 공간 창출과 계층 간·지역 간 통합의 공간계획 및 공동체 형성 정책 등에 관한 선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우수한 연구 질 확보는 연구원의 생명이다.

우수한 연구의 생산은 지방연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연구기관의 어려운 경영 여건은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연구원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연구 질의 우수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지방연구원들이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연구심의회를 내실화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방연구원 연구의 질적 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질은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이 없어 무한경쟁(無限競爭)만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기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생산(보고서 작성), 연구결과의 전파와 활용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 가급적 일련의 연구수행시스템 전담기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우수한 연구의 생산은 연구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 연구의 기획과 과제 선정단계에서

전문가와 유관 공무원 및 실무업계 종사자 등으로 지식 소그룹과 같은 연구개발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과제는 가급적 대형화, 융합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체계화하여 최소한 연간 5~6개의 대형 또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다년간(多年度)에 걸쳐 여러 연구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사전 기획연구(事前企劃研究)가 필요하다.

연구의 질과 연구내용은 연구진이 최고 전문가이다. 따라서 연구 질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연구심의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내용 및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방법론 등 현안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정을 수시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한 외부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네트워킹형 연구수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부 전문조직과의 협동연구는 연구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의 실용성 확보에도 기여한다.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및 실무종사자들과의 협업적 연구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연구역량의 강화와 체계적 내재화(內在化)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은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개인의 창의적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조직에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연구 성과의 내재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부문에서 대표적 연구원, 일명 스타연구원을 키워야 한다. 스타연구원은 연구기관의 브랜드와 입지를 강화하는 데 유무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연수(研究研修)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공 영역을 늘리고 이전공(異專攻) 및 신구연구(新舊研究)인력이 조화된 통합적인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I자형”에서 “T자형”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연구기술과 방법론이 선배로부터 후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개인의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조직의 연구역량 강화는 연구조직 및 지원체계를 함께 개편 강화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트랙을 작성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연구전담인력이 적은 데 비해 연구수요가 많다보니 팀 담위 소조직으로 조직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 연구 인력은 30명 정도인데 팀이 7개로 세분되어 연구역량 발휘가 어렵다. 특히 전공별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통섭적(conciliative) 연구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다양한 전공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조직으로 연구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구원 개개인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집중시키는 “벌떼 작전”이 가능토록 내부 조직간 벽을 허무는 매트릭스(Matrix)형으로 조직하여 연구팀, 연구실간 협력연구를 강화하고 개인의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한다.

연구원은 인적 자원(Human resource) 확보가 연구원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소수인력으로 연구의 양, 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연구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복지와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그리고 연구원 내부에서의 멘토링제 활성화, 재학습과 재충전 기회의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방연구원의 자체 수익사업은 인센티브 제공에 전액 투입토록 제도화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원 개개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연구역량 강화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연구지원체제 강화이다. 지방연구원은 독자적으로 수많은 지식과 정보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축적하고 연구원들이 쉽고 편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국내외의 유관 외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지식정보를 신속히 연구원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팀 1~2개를 지식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업무에 투입한다면 조직과

개인의 연구역량은 배가(倍加)될 수 있다.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정리 및 체계적 활용은 연구업무보다 더 중요한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이다.

넷째, 연구 성과의 효과적 전파가 중요하다.

연구기관은 연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된 연구 성과를 이해관계자가 적극 활용하여 연구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생산된 연구 성과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빠르게 전파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대부분 연구보고서 작성에 특별히 노력하지만 이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이 어떠한 형태로 연구 성과를 전달해주길 원하는지는 무관심하다. 잘 전달된 연구 성과는 지방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암묵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전달 메커니즘과 전달 양식 개발 등 효과적인 연구 성과 전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엄청난 분량의 연구보고서는 극히 일부 관심 있는 전문가 이외는 찾지 않는다. 매우 간결하고 쉽게 정리한 요약자료가 훨씬 유효하다.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역량 구축이 연구보고서 작성보다 더 중요하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요약보고서 작성방법을 벤치마킹하고, 모든 연구원들이 이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 위주의 요약보고서의 수시 발간과 웹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양한 통로로 전파해야 한다.

실용적 지방분권 추진 방안 마련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상징적 제도로 인식돼 왔다. 최초의 주민 직선 지방자치제는 1953년 해방 이후 극심한 빈곤과 정치사회적 혼란 및 전쟁의 참화 속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중단된 후 자치제의 부활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1980년대 말 국민적 저항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종식되면서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회복됐다. 1991년 3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자치제 부활은 지역주민 상호간 연대감과 소속감 및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지닌 공동사회의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의 자치와 자율역량도 크게 증진됐다. 지방의회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의 위상을 확립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에 의존하는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피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지역은 오히려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민선4기 2년간 38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 유치와 377억 달러의 무역흑자, 그리고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충청남도는 지역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만을 가져 온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많은 정치적 의지 표명과 정부의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 노력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업적과 명분 쌓기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성과달성에 매달려온 지방분권 추진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중앙집권적인 행정 시스템과 제도를 타파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부처들은 정책결정과 예산배분 권한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별적인 지방이양과 분권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2007까지 중앙정부 사무 중 약 3,000건이 지방에 이양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세와 국가사무 비중이 각각 80%와 71.8%에 달한다.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체계와 예산배분 구조를 방치하고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지방분권은 정치적 이념의 실현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은 제도적 형식과 정치공방에 밀려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밀착성이 부족했다. 향후 지방분권은 주민복지,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발전 촉진 등 실용적 가치 실현에 치중해야 한다. 지역 밀착형의 지방이양과 함께 사무와 재정의 동시적 이양 및 수요자 중심의 목표 지향적 일괄이양 방식이야말로 실용적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분권은 지역 선도적이고 상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됐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이양 추진방식은 지방자치와 자율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지방분권의 실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창의가 존중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 선도적 실용적 지방분권 추진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중도일보 7월 10일자 21면 게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최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은 사업주체와 사업종류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 안보 및 사법 등 극히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이 지역개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개발사업은 그동안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등 8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사업 종류만 17개에 달한다. 이중 13개는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도 사업주체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청과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청이 각각 기술개발, 산학연계, 창업 및 벤처 육성, 산업기술양성 및 지역대학 육성 등 23개 분야의 혁신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지원시책의 난립상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은 무려 11개 부처 5개청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사업내용도 금융, 인력, 창업과 벤처, 기술, 마케팅, 정보화 지원 등 총 10개 분야에 50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조차 분야별로 어떤 시책과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 정책목표가 분명한 지역개발사업을 수많은 부처와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게 되면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사업을 과도하게 세분하여 추진하면 단위사업은 영세화되어 사업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 특히 동일 분야의 시책과 사업을 상호 전략적인 연계와 조정 없이 추진하면 지역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이 어렵고, 투자의

시너지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농촌지역의 경우, 부처별로 사업추진단위를 마을·면·군 단위 등으로 각각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분할관리 현상까지 초래했다.

정부는 최근 부처별 유사사업의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나 부처별 유사사업의 연계와 조정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 연계와 조정 노력만으로는 분산된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수립 차원의 연계나 조정이 자동적으로 집행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상호 연계, 조정되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 등 지역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배분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의 주체로서 파편화된 정부 시책과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미 여러 정부부처 소관인 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금산군은 7개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는 12개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단일 사업으로 통합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시·도와 시·군에서는 농촌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 및 환경관리 등 지역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문제의식 공유와 지속적인 학습, 행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맞는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상호 연계, 조정, 통합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느냐에 보다 많은 지방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

*중도일보 8월 7일자 21면 게재

대전·충청권 공조 네트워크 강화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6개월, 대전·충청권내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폐지, 축소 및 왜곡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구와 정원 축소, 행복도시추진위원회의 개편 및 도시건설 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은 구체적 진전 없이 재검토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현안사업의 폐기와 축소 추세가 계속되면 대전·충청권 전체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대선공약사업인 대전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사업 무산을 시작으로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또 다른 대선공약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단순한 투자 사업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 테크노밸리,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 및 천안·아산 크리스탈밸리 등 대전·충청권내 대규모 거점개발사업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은 초 광역적인 첨단기술 산업벨트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대전·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 성공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도 더욱 크다.

그러나 현재의 불리한 정책여건과 치열한 지역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들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전·충청권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서는 일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만족할만한 공조 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전·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협력과 상생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니고 있어 공조의 가능성은 높다.

대전·충청권은 그동안 3개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0년 “충청권공동발전계획” 수립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냈고,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에는 “충청권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의 공조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현안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조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충청권 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지역협력과 상생활동을 보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갖추는 데 치중해야 한다.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 구축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협력과 상생활동을 추진하기 어렵다. 둘째, 지방행정기관 주도의 공조를 지역 학계, 언론, 시민단체 및 산업, 경제계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토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론이 뒷받침될 때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제한된 협력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전방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협력과 상생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동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역상생과 협력문화의 정착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협력과 상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보다 큰 미래와 발전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대전·충청권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중도일보 9월 1일자 35면 게재된 원고 수정·보완함

녹색성장 패러다임과 지역발전 과제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제63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녹색성장이란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물론, 녹색성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녹색기술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 100조원, 연구개발에 11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욕적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충남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청정 재생 에너지 개발 및 방제 등을 위해 ‘기후변화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태안의 종합 에너지 특구, 보령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녹색기술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산업의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환경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육성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우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유치에 치중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생산과 투자규모가 큰 기업 및 투자 유체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기업의 투자 유치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소홀했다. 우리나라의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선진국들과 달리 지난 20여년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됐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하여 지난 20여 년간 생산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배 이상 줄이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투자가 신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구조와 행태도 변화되어야 한다. 물질만능의 의식구조와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를 막는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전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 건축, 도시 및 교통 분야가 녹색전력이 필요한 대표적 소비 생활분야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5% 정도 줄이기 위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과 대중교통비중을 각각 10% 및 70%로 높이고, 도시 면적의 50%가 넘는 녹지 공간과 도시 바람길 확보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에도 '저탄소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저탄소도시' 건설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녹색도시건설 전략은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개별 주택과 건축물의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최소화의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축 주택과 빌딩에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녹색 건축물의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간기업, 학계 및 NGO 등 각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된 녹색성장 이념의 구체적 실천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재와 조정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성숙한 지역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중도일보 9월 4일자 21면 게재

충남도, 유망 중소기업 28개 업체 지정

- 6년간 정보·기술·금융 지원받게 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충남도는 도내 28개 중소기업체를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였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28개 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35개 업체 중 도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첨단기술·특허보유·품질인증·해외수출유망제품 등을 고려, 최종 지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6년 동안 도·시군·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기술·금융 등을 지원받게 돼,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충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시 추가 이차보전 1.0% 우대금리 적용 ▲전시회·박람회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참가시 우선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기술지도 및 지원 ▲금융관계 지원기관으로 부터의 우대지원 ▲유망 중소기업 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44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75개 업체가 지원이 완료됐고, 26개 업체가 지정 취소돼 현재 14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도 도내 유망중소기업 지정 업체 (28업체)

시·군명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천안시 (11)	1	(주)세림티앤디	김창동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50-30	2000.7.1	자동차부품	12	
	2	(주)스마트에이스	전원섭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제4산업단지	2002.12.20	반도체장치	123	수출
	3	서우테크놀로지(주)	박상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39-1	1990.10.27	반도체금형	19	수출
	4	(주)펜믹스	김용옥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7-5	2004. 4. 2	아모크라	54	수출
	5	(주)동국일렉콘스	김교봉	천안시 백석동 555-31	1998.11.13	계측제어시스템	9	
	6	자경케미칼(주)	이기석	천안시 성거읍 341-2 (산업단지)	1989. 9.10	제지용오염방지제	34	수출
	7	(주)성진하이메크	구영석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13-1	2002. 8. 1	평판표시장치	77	수출
	8	마노자동차(주)	한봉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451	2003. 6. 1	컨버전벤	20	
	9	(주)두선	이상택	천안시 입장면 유리 228	2001. 7. 1	자동차부품	110	수출
	10	(주)메티스	박기현	천안시 목천읍 응원리 134-13	1999. 7.23	LCD설비제어기	5	
	11	덕성산업	김병옥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128-8	1999. 1.13	지중전선관	12	수출
공주시 (1)	12	(주)한남하이텍	최만목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33-10	1998.4. 20	산업용 양면 아크릴폼 테이프	52	수출
보령시 (1)	13	(주)폴리텍	이기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2002. 1.17	폴리에틸렌관	13	
아산시 (3)	14	(주)드리미	최애희 (女)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3	2004. 2. 9	LCD제어판	32	여성
	15	동서메탈(주)	조경호	아산시 실옥동 239-1	2002.11. 1	가스보일러부품	25	

시·군명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16	(주)코텍지오메트	조규용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8	2002. 3.12	볼트류 코팅	43	장애인고용
서산시(1)	17	(주)그린	김진학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1990. 6.12	꼬치류, 어묵류	99	
논산시(1)	18	(주)한테크	김환섭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85-5	1987. 2.16	안전강화유리 집합안전유리	30	장애인고용
금산군(4)	19	(주)미라이후손관거	장호윤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2003.10.30	내충격PVC하수관 내충격PVC오수받이	32	
	20	(주)신우기계	구완희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121	2003. 1.30	이륜차부품 (완충장치), 예초기	24	수출
	21	(주)성호이엔지	전은숙 (女)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09-4	2003.12. 8	이동식부탄연소기	26	여성,수출 장애인고용
	22	삼화엠테크(주)	정주석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327	2005. 2. 1	내압방폭 모터	23	수출
연기군	23	(주)더멋진바이오텍	이인영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0	2000. 1. 2	베타글루칸, 캐피어, 사료첨가제	10	
청양군	24	(주)필택산업	송준호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979-7	2001. 5.11	악취탈취기 액비살포기	14	
	25	신기산업(주)	김동복 (女)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56401	1985. 5. 5	상토, 유기질비료	14	여성
당진군(3)	26	(주)신화기공	황부희	당진군 송악면 석포리 844	1985. 5. 1	자동제진기, 감용기 등	15	
	27	(주)새한공업	노승학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10-1	1997. 8. 1	자동차 차체부품	30	
	28	(주)토우	박형준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899	1998. 8. 1	점토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38	

충남도 조직개편관련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과장급이상 간부 47명 승진 · 전보인사

충남도는 7월 9일자로 조직개편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과장급 이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조직안정과 연말 통합인사를 감안하여 인사폭을 최소화하고, 사람보다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조직의 기능,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① 업무수행능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발탁승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와 실국장 토론과정을 거쳐 복지정책담당 고영희 사무관을 발탁했으며 앞으로도 도정시책추진 유공자와 업무능력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제도를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으며, ② 여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이 3급 승진과 함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정효영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승진하는 등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도정사 처음으로 3급 여성국장급 공무원이 탄생하는 의미있는 인사로 충남도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잔잔한 자긍심을 던져주고 있다.

그외 인사 주요내용으로는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이 2급 승진과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으로, 임현용 농림수산물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이성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농림수산물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필수 감사관은 서산부시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주식 의회 전문위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유제곤 정보화담당관이 꽃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농업기술원장에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되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로는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이 서산부시장으로, 서덕철 태안부군수가 감사관으로, 서범석 공보관이 태안부군수로,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이 홍성부군수로 전보되었으며, 한근철 홍성부군수는 道의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서기관 승진에는 이상준 도의사회담당, 김종화 인사담당, 홍민표 유비쿼터스담당, 이두훈 예산총괄담당, 유득원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장, 나창호 도청이전본부 행정도시지원담당, 정효영 여성정책담당, 고영희 복지정책담당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기술서기관 승진에는 박국진 도로계획담당, 이강우 연안관리담당, 한동희 식량작물담당이 각각 승진했다.

한편 道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전인 이달 중순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선 4기 후반기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2일, 당진 예술의 전당에서 주요인사·주민 등 500명 모여 개청식 가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7월 22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태봉 충남도회의위원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이명수·김낙성·변웅전·원유철(평택)·김성희(화성)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민중기 당진군수, 송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 앞서 당진읍 수청리 소재 원당 드림타워 건물에 마련된 구역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식전행사로 당진군립합창단의 '축가합창', 그룹 비트서클의

전자드럼과 전자북으로 연주하는 ‘타악 퍼포먼스’ 축하공연에 이어, 공식행사로 김성배 청장의 경과보고, 이윤호 장관의 축사, 이완구·김문수 도지사 인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룹 시사이의 ‘잉카문명 전통 안데스’ 음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8월 24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 31일 재정경제부 지정 신청에 이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약 4개월간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오늘 비로소 개청식을 갖게 됐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를 통해 “오늘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신 성장엔진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것을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건설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기지가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족한 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과의 기구로 출범, 충남도 64명, 경기도 65명 등 모두 129명이 근무하며, 이완구 지사와 김문수 지사는 지난 1월 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에 세우고,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 평방미터의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구는 9만6천 세대,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7조4천여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구역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2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실적 눈에 띄게 개선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차 17.44점으로 크게 감소 경영실적 상향 평준화

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 평가과정에 피 평가기관의 참여확대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 고객지향 경영유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평가는 관리부문, 경영부문, 고객만족도 부문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부문에서는 충남 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정책개발원이 상위그룹에 랭크되었고 ▶관리부문은 충남발전, 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가 ▶경영부문은 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객만족도 부문은 신용보증재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의 경영이념 및 가치가 기관의 비전과 연계되어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우선 순위 조정, 또는 전략사업 개발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년도 경영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년 평가에서는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과의 격차가 30.1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2.66점으로 크게 줄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년도 경영평가와 차별화하였다고 한다. 첫째로 평가의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관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 도입했

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출연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고객만족도 반영 비율 조정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수요자 중심의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自然을 품는다

-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충남도가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에는 미리 공공디자인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문화 충남』을 구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심에 설치되는 공원·교량·도서관 등의 公共空間과 벤치·공중화장실 등 公共施設物 및 교통표지판·광고판 등 공공매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관광자원개발 등의 공공사업에는 전문가의 공공디자인 자문을 받도록 하여 아름답고 매력적 정감이 넘치며 다시 찾고 싶어지는 도시의 명소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국정과제로 Global Korea 시책의 일환으로 『디자인 코리아 2020』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공공디자인 관련법안 발의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를 편제하고 대학들도 앞다퉀 관련학과를 증설하는 등 공공 및 학계, 민간 모든 분야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충남도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건축 및 도시개발분야와 한 곳에 묶어 편제하면서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선발 및 관계공무원 정예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디자인 波紋효과(Rippling Effect)를 노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였다.

충남도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채 산발적이거나 무계획적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조성과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거시적·미시적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로시설물 시스템화 등을 통한 통합 디자인(Total Design) ▲불필요한 공간·시설물 제거 및 인간친화적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Human Basic Design) ▲주민 자율협정제를 통한 참여형·체험형 디자인을 위한 소통의 디자인(Community Design) ▲자연과 인간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순환가능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백제문화의 숨결이 반영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Regional Identity Design) 등 5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공공주도형 지구단위 마스터플랜(Block Unit Plan)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은 도와 시군 및 전문가와 주민이 중앙부처·언론·유관기관·학계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도에서는 정책개발 및 사업구상과 공모사업 실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원론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추진 및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 등 민간을 선도할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학교수 연구소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체는 디자인 컨설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은 주민협정제를 통한 사업추진과 디자인 공모 참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디자인자문을 받게 될 공공사업으로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와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 등이 디자인자문을 받게 되며 기타 도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조성사업, 테마형 관광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시책도 디자인자문을 받게 된다.

충남도, 2008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4일부터 19일까지, 태국왕립군악대 등 31팀 1,500명 참가

충남도는 9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강태봉 도의회 의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학영 계룡시 의회의장, 지역출신 도의원, 군관계자,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화합과 평화의 메아리, 군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군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군을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행사기간(3일 → 6일) ▲ 공연장 규모(2,800석 → 4,000석) ▲ 프로그램 참여인원(1,000명 → 1,500명) ▲ 해외참가 군악대(1개국 → 미8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등 2개국) ▲ 참가 프로그램 수(27개 종목 → 53개) 등이다.

특히, 군악공연은 육·해·공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미8군취타대 등 국내외 6개 군악대가 참가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합동공연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을 연출하게 된다.

「하나됨의 울림」이라는 합동공연의 경우 군악대와 의장대, 성악병사, 민간합창단 등 모두 442명이 출연하며 객석에도 연주자를 배치하여 관람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공연모습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여명의 육·해·공군 군악대 합동공연과 성악병사, 시군 합창단의 전쟁영화 음악과 오페라 아이다, 개선행진곡 등을 연주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올해 처음 과거부터 현재 군의 발전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특히, TV나 영화에서 사용했던 삼국, 고려, 조선시대 전통군복의 실물전시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 UN참전국의 당시

군복과 소품을 확보하여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기회도 마련한다.

행사기간 공연장 주출입구에 궁궐수문 세트를 제작하고 전통복장을 착용한 장군 및 병졸 30명이 출연하는 전통수문장 근무교대식이 하루 4회 실시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퍼레이드로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엄사리 시가지 1.5km 구간에서 군악대, 의장대, 학생밴드 등 15개팀 500명이 현장에서 즉흥 연주와 동작 등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시민과 관람객도 깃발과 캐릭터를 손에 들고 참가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룡군문화축제 기간에는 육군본부가 주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장병들과 똑같은 식사를 맛볼 수 있는 병영식사 체험, 화상면회관, 병영생활관 등 육군의 발전상을 한 곳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2008계룡군문화축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남발전연구원 곽유신 사무처장 취임



곽유신(59·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씨가 7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곽 사무처장은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발전과 정책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처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1980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도 감사담당관·관광과장·자치행정국장, 연기군 부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박사, 美人명사전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은 환경생태연구팀 정옥식 박사(37세, 전공-야생동물.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09년판에 이름을 올렸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는 충발연이 1995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 박사는 최근 “동북아시아 독수리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2007)”, “한국 서해안의 붉은어깨도요와 꼬까도요 체내의 *Acanthoparyphium Tyosenense* 감염상(2007)”, “큰부리바다오리의 국내 첫 관찰 보고(2007)” 등의 논문 발표를 통해 야생동물보호관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 왔다.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 박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200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조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1899년부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충남발연, 2008년 제1차 연구자문회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 및 연구원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0명과 함께 “2008년도 제1차 연구자문회의”를 가졌다.



주요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수행업적에 대한 평가

-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수요자와의 공동학습 및 협동연구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객원연구위원 및 연구원별 10명이상의 collaborator 확보,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선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고객의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coaching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연구수요자 공동학습 및 협동 연구는 국책 연구원도 도입해야 하는 연구모델임
- 특히 도와 시·군 행정뿐만 아니라 도민을 연구원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함
- 그러나 연구원 규모에 비하여 과제수가 너무 많고, 출연금 지원 등이 타시도 연구원 등에 비하여 낮아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둘째, 연구 질의 개선 방안

- 연구 질은 「연구과제 선정→연구기획→연구수행→연구결과생산(보고서 작성)→연구결과의 전파와 활용」의 전반적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과제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지식 소그룹 등 공무원 집단이 연구개발 동아리 운영하면 과제 선정에 도움 가능

- 연구 질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함. 둘째 자체적 연구심의회를 내실화하고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 연구결과의 생산과 전파 활용에 더욱 신경써야 함.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달 메커니즘, 전달 양식을 개발 활용하여야 함. 특히 본 보고서 외에 보다 간결하고 보다 단순한 요약 (청와대 17 포인트, A4 2매 이내) 자료 작성 역량 구축해야 함

셋째, 조직적 연구 역량의 강화 방안

-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 연구조직 및 지원체계의 개편이나 강화가 함께 하여야 함.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별 연구트랙 작성, 지원방안 마련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위한 2-3년차 연구수행 로드맵 작성 노력 필요
-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전담인력이 30명 정도에 불과한데 7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세분되어 연구역량 발휘가 어렵게 되어 있음. 특히 전공별 팀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나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전공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별떼 작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간 벽 허물기 가능한 연구조직 조정 필요
- 연구지원 체제를 강화하여야 함. 조직적 연구역량의 강화는 어떠한 연구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됨. 특히, 지식, 정보자료의 축적과 활용 증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넷째, 2009년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 방향과 내용

- 충남발전연구원은 시·도 연구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현상 및 실태조사와 분석 및 추세 전망연구에 치중해야 함. 예를 들면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와 전망과 같은 연구임
- 또한 시도연구원은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개발효과 및 추진 평가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면 지역발전과 함께 국가정책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수많은 국책사업이 지역적 연계와 협력 체계마련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이라고 생각함
-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안과제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변화

와 global trend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연구 필요. 예를 들면 기후협약, 에너지, 식량문제, 삶의 질, 여성과 감성시대 도래 등

- 현재의 연구는 대부분 시책과 사업구상과 계획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디자인 등 지역특화 연구 및 집행과정의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 및 주요 연구과제 제시(안)
 - 황길식 위원 : 지역개발집행지원 (performance consulting) 연구
 - 김정석 위원 : 충남 동서연계와 균형발전방안, 충남물류기능 활성화와 대응계획 연구
 - 차미숙 위원 : 지역현장 실태와 추세전망 연구, 국책사업의 지역적 추진체계 및 지역화 연구, 지역개발사업의 평가 연구
 - 김선배 위원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핵심사업 및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연구,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및 3개 시·도 협력사업 연구
 - 박동호 위원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도시혁신과 지역혁신 위한 디자인 연구
 - 박종관 위원 :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연구, 정부통합평가 대비 연구
 - 임경수 위원 : 농촌공간구조변화추이와 전망, 농촌지역경제연구, 에너지 분야 연구
 - 박헌주 위원 :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trend와 지역대응 연구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원 환경에 적용된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다음 연구자문회의에 연구원 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충남도정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충남도는 7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환경,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충남도정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산업경제 분야 주제 발표를 한 박종찬 고려대교수는 "지난 2년간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과 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도내 서남부권을 육성하는 등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비롯해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경제 클러스터 구축, 의료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과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 최봉문 목원대학교수는 "현재 충남이 직면한 도시지역개발의 주요 과제는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문제, '지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인적자원 수급 및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 기업도시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주제발표자인 최진하 UNDP금강습지사업관리단장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는 등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주체를 정하는 한편 도시·환경·에너지 통합형으로 충남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 분야의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혜 상명대학교수는 "충남의 7대 역점시책 가운데 하나가 '가치가 살아 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인 만큼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또한 생명력 있는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민선4기 후반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 : 연합뉴스 7월 28일자



충남발전연구원,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펴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최근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기 위해 학술지 “충청지역연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될 이번 학술지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각 분야별 논문을 접수, 심사를 통해 뽑힌 우수 논문에 대해 편당 100만원의 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논문 모집은 10월 말까지이며, 학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웅 원장은 “학술지 발간은 연구원의 얼굴이자 우리 지역의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연구에 대한 대표 학술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발전研, 한밭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8월 28일 오전 11시 한밭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설동호)와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충발연과 한밭대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연구원 위촉 및 교류,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공동 활용,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기술자문 및 지역연구의 공동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 가능한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연구역량 강화로 충청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밭대학교 이상호(도시공학) 교수의 해외 도시계획 관련 주제의 특강도 함께 가져 이번 조인식의 의미를 더했다.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 총회 및 세미나 가져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용웅, 이하 협의회)는 9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충청남도연구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해 8월 가진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 간 학술·연구교류협약에 의해 구성된 이 협의회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등 총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별 연구과제 공유, 공동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각 연구기관별 운영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웅 협의회장은 “지역연구기관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간 공동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의 질 개선, 연구 예산 확보 방안, 도정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충남발전연구원 공동 주최



2008년도 제3차 “지역경제연구회”가 2008. 7. 24(목)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대전·충남지역의 경제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역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 혁신협의회의 연구회 조직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가지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1주제 발표는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주 책임연구원의 “참여정부 지역 혁신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아래 참여정부 초기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마련되어진 지역혁신협의회의 그간 활동 성과와 진단,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2주제 발표에는 한국은행 박창귀 과장의 “충남지역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충남의 경제상황에 대한 특징 파악, 발전방향 모색에 참석자들의 많은 고견이 제시되어 다시 한번 우리지역의 경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된 자리였다.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설명회 및 시·군협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

- 유류유출 피해지역 갈등 예방과 사고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시급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토록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 신장 도모 및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13일 충청남도 와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충청남도에 설

치되어 있는 13개 시·군협의회 의 수월한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공모사업설명회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시·군협의회 의장단 및 담당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군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역 내에서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시·군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오는 9월 5일 도 자체평가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에 3개 과제를 접수하게 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협의회에는 약 6,5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며 올해 12월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 관련 4개 시·도 실무협의회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지난 8월 22일 충발연 대회의실에서 금강수계 4개 시·도 관련기관을 초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협력 및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 이상진 센터장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현안 및 기본계획 수립 방안’, 충북환경총량센터 배명순 연구위원의 ‘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개 시·도 관련기관의 협력방안과 주요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질의 및 건의토록 하여 원활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조와 역할이 강조되는 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8월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부연구진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1핵심과제 중 2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개발”을 주제로 하는 3차년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도시 유형별 재생전략 기법개발(1-2)”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가 주관하며, 세부과제로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1-2-1)”,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2-2)”,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1-2-3)” 등 충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협동기관이 되어 11개월간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방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는 지방도시재생의 개념 정립과 지방도시의 쇠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지방도시의 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추진계획,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도시 재생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종합지침 및 매뉴얼 작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도시 재생기법의 개발유형을 신기능·신시설형(전면철거형), 기존 기능·시설정비형(개량형), 기존 기능·시설 활

성화형(지역사회참여형)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이를 중심시가지, 산업쇠퇴지역, 도시전체쇠퇴 지역별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 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 개발을 주 연구내용으로 한다.



“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통합 연계방안”은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와 통합 및 패키지화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케 하고 국가지원재정의 절약은 물론,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의 촉진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지방도시재생 지원 프로그램 실태 및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전략 발굴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핵심기관 및 내부 연구진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목원대 김혜천 교수, 영동대 백기영 교수, 목원대 최정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진 박사가 외부 전문가로 참석하였다.

내부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는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에 앞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등을 심의 및 논의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정보팀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opr@cdi.re.kr

충남의 문화유산 ⑭



봉산향나무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증뜸마을 입구에는 자리잡고 있는 봉산향나무는 자단향(紫檀香)나무 또는 대순향수(大舜香櫟)라 불리기도 한다. 향나무는 향기가 그윽한 상록수로 예로부터 인간에게 효열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 이 나무를 심은 최중룡(崔重龍, 1543~1575)은 연기지역 강화최씨 집안에 효(孝)의 뿌리를 내리게 한 인물로 당시 사람들이 중국에서 효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순(舜)임금의 이름을 본떠 '해동대순(海東大舜)'이라 칭송할 정도로 효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현재의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증뜸마을 입구에 이 향나무를 심으면서 집안에 효가 번창하기를 기원하였는데, 실제로 강화 최씨 집안에서는 최중룡 자신을 포함하여 8대에 걸쳐 15명의 효자와 열녀를 배출하였다.

〈자료 제공 : 충남역사박물관〉

THE CHUNGNAM REVIEW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청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